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1996. 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I 호 (501호 ~ 674호)

인권정보자료실
R1.1.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6년 1월분 총목차(556-57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566	1/19	1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재판 연기대
		2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장애우연구소 전국 18개 대학조사에서 밝혀/고난모임, 장기수 자녀에 장학금 전달/행사와 동정
567	1/20	1	경찰 한일병원 영안실 침탈, 분신대책위원장·유가족등 연행/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고입 선발피해 여학생 학부모, 강력 대응키로
		2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전국연합 광주전남공대위 5.6공 청산 집회, 5.18 특별법 위원 제청 비난/인권간행물
568	1/23	1	유엔 어린이권리조약 정부 최초보고서 심의,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폐 시사/이덕인책위 답동성당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씨 유가족이 회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 결성/불교인권위 범민련 구속 목사돕기 모금운동/주간인권호름(96년1월15일부터 1월21일까지)
569	1/24	1	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수사결과 비난
		2	<자료>유원석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21일 장래 한일병원 고 김시자위원장 분신 원인-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570	1/25	1	5.18 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모아,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제안/5.18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내용
		2	<현장스케치>2백회 맞은 정신대 수요시위-4년 시위 정신대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전국연합, 29일부터 북한수계민 성금 모금/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특별법제정 부패척결/민주노총, 근로기준연구회 구성 방침 비난
571	1/26	1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지 위해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아암도 노점상 식발 단식농성 5일째, 25일 뇌성마비 장애인 병원 긴급후송/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의견서 제출
		2	<자료>통계청 발표 95년 한국의 사회지표-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행사와 동정
572	1/27	1	허인희씨 2차공판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황철수씨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2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 거부,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인권간행물
573	1/30	1	김시자씨 추모집회 노조 민주화 다짐, 노민주 한전노조 집행부 퇴진·구속자 석방 요구/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전국연합, 1억 목표 북한동포 돕기 모금 시작/법학교수 72명 민주노총 관련 의견 발표
		2	<자료> 북한수계동포돕기 성명서-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주간인권호름(96년1월22일부터 1월28일까지)
574	1/31	1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남용말라, 법학교수 72명 의견서 발표-민주노총 인정·권위 원장 석방 촉구/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종렬씨 1차 공판서 조성욱 검사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2	3:96년 1월분 총목차(556-574호)

인권하루소식

96년 2월

(제575호 - 제592호)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는 지난 26일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최초보고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제11차 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 최초보고서 심의결과 나온 것이다(<인권하루소식>1월23일자 참조).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정부는 자료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정리할 것,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와 급속한 경제성장 등의 불안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양심·종교·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 철회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열린 자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특히 정부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대해 이 조약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지적한 전문기관에는 교사, 사회사업가, 법관, 경찰, 보건 의료인 등이 속한다. 또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내용에 어린이·청소년 권리교육을 넣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자어린이와 장애인 어린이, 사생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밖에도 권고안에는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 소년소녀가장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내에서 조약에 관한 홍보를 게을리 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대체로 이번 권고안은 구체적인 지적이 없어 정부가 권고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생색내기로 끝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조약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8월 구성했다는 '어린이·청소년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경우, 그 존재에 대해 유네스코등도 모르고 있어 정부의 조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5년 뒤인 2001년 추가

정부보고서에서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후 아동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스리기선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지난 7월7일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서 한국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보고서는 주요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이 자료에 한국의 민간대표 이기노혜련(37,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류은숙(28, 인권운

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가했다(다음호에 권고안 전문과 관련기사 게재).

장기수 복송 회담 불허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불교인권위)는 30일 비전향장기수의 복송을 위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예비회담을 통일원이 1월27일자로 다시 불허하자 성명을 발표, "정부는 과거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비전향장기수 복송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복송 관제를 주선한 단체측에 대해 실정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구태의연한 자세"라며 "예비회담을 성사시켜 이들의 간절한 소망인 통일문제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비전향 출소 장기수 함세환, 김영태, 김인서씨 등 3명의 복송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제의했으나, 통일원은 이를 매번 불허했다.

정보사회 일례 공개강좌(1회) 주제: 정보사회와 인권

- 감사: 김거성(컴퓨터 전문가)
- 일시: 2월3일 오전 11시부터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인권정보자료실 강기훈실장(☎ 715-9185)
- ☞ 인권정보자료실에서는 매월 1회씩 컴퓨터 전반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엮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우선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한 나라 노동운동의 최고지도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또 민주노동의 설립신고서를 하루만에 반려한 정부의 처사는 노조의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된 설립신고제도를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로서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은 물론,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퇴하였고 또 가입하기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강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외에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인권단체들은 제3차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

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1년 이른바 대기업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차개입금지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에 위반했다고 판정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까지 하였다. 앞에서 열거한 국제법들은 모두 정부가 국외의 동의를 거쳐 비준한 국제조약으로써 엄연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조약들에 위반하는 국내법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법학교수들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동의 권영길위원장을 즉시 조건없이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그에 게 적용된 혐의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만일 정부가 굳이 그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한 그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주노동의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고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이 나라의 40만이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정부가 적대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 부당하고 불필

요한 사회적 긴장요인이 될 뿐이다. 한편 실제 민주노동의 조직대상은 한국노동에서 탈퇴한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에 국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민주노동의 합법성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사회권조약, 자유권조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들 국제법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일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제3차개입금지 규정 폐지, 복수노조금지 조항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이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내용들이다. 그 밖에도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된 조폐공사법 개정법률에 대하여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청산을 통해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군사독재정권이 갖가지 비상입법으로 도입한 제반 악법들을 개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자주적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제반 법률들을 정경유착을 조장하고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과 증오마져 불러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깊게 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민주적 법률들을 개폐하는 것은 노사대립과 갈등을 치유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출발점일 뿐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국민의 위신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1996. 1. 30.

대북지원 팔건고 나서야 전국연합, 정부에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월31일 정부의 대북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유엔식량계획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굶주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아사직전에 처해 있으며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떨어져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정부가 공식적인 대북지원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측이 원문제를 민간단체들에게 떠넘기거나 국내의 정치일정과 연계시키는 행위는 소아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총선에서 표를 의식해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궁색한 핑계를 거두고 더욱 궁색해지기 전에 정부는 대북지원에 팔건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대통령 공개사과 요구 불교계, 군교회 예배 사건

지난 1월21일 김영삼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 예배 때 불교 신도들을 범당에 감금한 사건에 대해 "조계종 중앙총회 중진회의"(의장 설정, 중진회의)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진회의는 1월30일 긴급회의를 소집,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중단적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단에서는 긴급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동, 불교인권위)도 1월31일 성명을 발표, "대통령은 불교신도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또 "제3자 개입"

양규현 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 연행

1일 오후1시 서울 연희동 교차로 근처에서 수배중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 양규현(44) 수석부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현재 방배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양씨는 이날 가족들과 만나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연희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주변의 승용차 4-5대에서 물러든 20-30명의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 경찰 중에는 양 수석부위원장 집에 세들어 살던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양 부위원장 연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족들을 감시, 미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날 연행에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권총을 뽑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94년 「전국수석부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현재 방배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양씨는 이날 가족들과 만나 승용차를 타고가다가 연희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주변의 승용차 4-5대에서 물러든 20-30명의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들 경찰 중에는 양 수석부위원장 집에 세들어 살던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양 부위원장 연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족들을 감시, 미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날 연행에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권총을 뽑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덕인대책위, 단식 해제 농성은 계속

지난 1월22일부터 인천시 답동성당에서 노천단식농성 중이던 「장애인노점상 고이덕인 열사 사인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덕인대책위)는 단식농성 10일째인 1일부터 단식을 중단했다. 이 결정은 이덕인대책위 소속 노점상등 6명 가운데 중증장애자인 김민태(22)씨가 단식 4일만인 1월26일, 윤관모(28)씨가 단식 7일만인 1월29일, 박미라(40)씨가 30일 쓰러져 후송됨에 따라 단식농성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고 이덕인씨의 변사체 발견 당시 구속된 7명의 인화대생에 대한 재판이 지난 1월29일 인천지법에서 열려, 징역 7년에서 2년의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었다. 색 영장을 갖고 와 책 20여권을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 기무사령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보법 위반이라는 것 외에는 혐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씨에 대한 면회는 계속 불허되고 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할 국군 사병이 친할머니 상을 당한 상태에서 국군 기무사령부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돼 지나친 인신구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90년 연세대 학보인 <연세춘추> 편집장을 지낸 이동빈(26)씨는 보름 전 성남지역의 군부대에서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의 가족에 의하면 이씨는 척추 디스크 수술 대기중 29일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할머니 장례식에 오기로 했다고 한다. 그 결과 30일 오전10시경 군 기무사 요원 4명이 압수수

김태년씨 재판 연기

1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424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태년(31, 성남 청년단체 미래위원장)씨의 1차 재판이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95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어 이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연기를 받고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집에 오기로 했다고 한다. 그 결과 30일 오전10시경 군 기무사 요원 4명이 압수수

행사와 동정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투쟁 공대위」구성을 위한 간담회
 - 일시: 2일(금) 오전11시
 - 장소: 민주노동 회의실
 - 내용: 경과보고/민주노동 96년 사업계획보고/공대위 구성제안
 - 문의: 765-2010
- 「청년네트워크31」 창립총회
 - 일시: 3일(토) 오후4시
 - 장소: 대학로 홍사단 강당 ☎ 743-2511
 - 문의: 591-1845
- 동티모르 서울 국제회의에 관한 간담회
 - 일시: 7일(수) 오후6시30분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715-9185
- 통일인사 석방과 범민련 시수를 위한 하루주점
 - 일시: 10일(토) 오후2시
 - 장소: 동국대 학생식당
 - 문의: 762-1238

정보사회 월례 공개강좌(1회) 주제: 정보화 사회와 인권

· 강사: 김거성(컴퓨터 전문가)
· 일시: 2월3일 오전 11시부터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편집자 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최초보 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 해 실는다. 이 권고내용은 5년 뒤 추가보고서 작성에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21조 (a)호[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 40조 (b)호의 (v)[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42조[조약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정부의 홍보의무]로 표현되는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옹호하도록 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어린이·청소년, 사생아에 대한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의 어린이·청소년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이 당사국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결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짜 넣을 것을 고려해주시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 차별 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진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들을 분류,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열악한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

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4조[아래 조약 참조]의 완전히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 표명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27. 어린이와 청소년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며 소년 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의 더 이상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그런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8.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의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된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30. 어린이·청소년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32조[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 박탈 금지],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40조 [아래 조약 참조]에 나타난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베이징 틀', '리야드 가이드라인' 내지는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과 같은 이 분야 UN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어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가 되도록 권고한다.

• 조약 내용 •

4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사회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외노협)는 지난 1월17일 번사체로 발견된 외국인 노동자 오스만(34, Osman, 방글라데시)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지난 1월18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해 오스만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를 받고 조사 활동을 벌였다. 오스만씨는 1월16일 불법체류자로 부평경찰서로 연행된 뒤 인천출입관리소로 인계되던 중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와 병원에서 세골골절상으로 판명, 입원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오스만씨는 17일 새벽 병원 인근 야산에서 목매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진상조사를 통해

“오스만씨가 경찰서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의경에게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부상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경찰의 보호 소홀이라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외노협등은 “오스만씨가 목을 매달기까지 법무부의 벌금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오스만씨의 친한 동료인 하킴씨는 “그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들이 사고가 나서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1백만원의 임금체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2백여만원의 벌금으로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외노협은 지난 93년 한해동안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한 벌금액수가 100억3천만원이라고 밝히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벌금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벌금제도

철폐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오스만 사망사건에 대해 외노협등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벌금제도의 철폐 △벌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공개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둔 벌금제도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관리소에 신고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는 사례 등은 벌금제도의 부도덕성을 드러내 주고 있다. 아들을 만나는

대신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고 간 오스만씨의 이번 사건이 외국인 노동자 벌금문제를 얼마나 공론화시킬 수 있었는지 이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민민학련 군복무자 5명 기무사 구속 확인

군 복무중이던 「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관련자들 5명이 최근 군기무사령부에 구속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동빈 전 <연세춘추> 편집장과 함께 기무사에 구속된 이들은 2년전에 군입대하여 오는 5,6월경 모두 제대할 예정이었다(<인권하루소식> 2월2일자 참조). 기무사는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과거 학생시절의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민학련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활동했으나, 이미 조직이 해산되었다.

구속자 명단(숫자는 학번)- 박중서(성균관대 90, 93년 민민학련 의장 권한대행), 정택상(서울대 89, 서울대 광장회장), 안창현(서울대 89, 93년 중앙의장), 정종국(고려대 89, 92년 의장 권한대행), 이동빈(연세대 88, 전 연세춘추 편집장)

제2차 인권협 정책토론회

· 일시: 2월9일 오후4시부터 10일 오전6시까지
· 장소: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 ☎ 0347-64-0064)
· 참가대상: 인권협 소속단체 회원 누구나
· 주요내용: 발제-한국인권운동의 길(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인권협 사업보고/향후 인권협 사업과 조직개선에 관한 토론회/자유시간과 친목 도모
· 문의: 한국인권단체협의회(☎715-9185)
· 회비는 없고, 참가할 사람은 9일 오후4시 서초동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앞에 모이면 됩니다. 이후 오시는 분들은 오후7시까지 직접 나눔의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보사회 월례 공개강좌(1회)

주제: 정보화 사회와 인권

· 강사: 김거성(컴퓨터 전문가)
· 일시: 2월3일 오전 11시부터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문의: 인권정보자료실장 강기훈(☎715-9185)

<독자투고>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은 필요없다"

김은영(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 간사)

노동단체와 여성단체, 산업재해 희생자 그들과 그 지원단체들이 지난 2년 간 홍콩에서 벌어진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제 캠페인'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방글라데시, 대만, 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모두 8개국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회의는 1월 9~12일 나흘 간 홍콩 장에인협회센터에서 각 나라별 보고와 산재자들의 증언으로 진행되었다.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지난 93년 5월과 10월, 태국의 캐디터 완구공장과 중국의 심천 완구공장에서 작업 도중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 두 공장은 모두 홍콩 자본 투자에 의해 설립된 공장으로 국내의 산업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사고였다. 홍콩 노동·인권단체들은 이 때부터 태국 노동단체들과 함께 홍콩의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孩子們不需要染血的玩具' 즉, "우리의 아이들은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백화점 앞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완구를 사러 오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사는 완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졌는지, 화재 참사 사진 전 시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홍콩 투자자들에게 '완구공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에 관한 사회현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개도국 노동자 산재문제 부각 한편, 급속한 경제개발을 목표로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최근 들어, 완구 뿐 아니라 여타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태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수출자유지역 내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직업병이 대량 발견되고 있고, 안전 조치 미비로 화재사건이 발생한다고 「여성 노동자들의 벗」의 간사 '빈딧 판와이저씨'는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문제는 놀랍게도 선진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고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복지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노동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 80년째까지 즐기고 있던 산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완구 캠페인과 같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그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하나의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일본 '직업 안전 보건 센터'의 '모또꼬씨'는 강조하였다.

이같은 캠페인은 홍콩뿐 아니라, 선진 개발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개발국가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도국으로 이전하였고,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

다. 영국은 이미 투자자들이 사회단체들의 힘에 밀려 사회현장을 받아들였으며, 이제는 현장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의 구성인을 가지고 시민단체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본도 6개 단체들이 모여 일본 투자 외국의 완구 노동자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그룹을 조직하였다. 홍콩단체들은 여기에 고무받아 때마침 96년 1월 홍콩에서 완구기업가들의 회의와 전시회가 있는 것을 호기로 삼아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 인권간행물 ◆

□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한국여성개발원(☎356-0070)

· 주요내용: 북경선언/행동강령-임무의 기술, 세계적 구도, 주요관심분야, 전략목표와 행동, 제도적 조치, 재정적 조치/부록-북경선언·행동강령 영문 원본 등 282쪽

□ 제2차 여성개발에 관한 아태각료회의 자카르타 선언·아태여성발전 행동계획/한국여성개발원(☎356-0070)

· 주요내용: 아태여성발전 자카르타선언/아태여성발전 행동계획-임무의 기술, 세계적·지역적 개관, 주요 관심분야, 목적·전략목표와 향후활동, 이행을 위한 조치/부록-자카르타선언·아태지역여성발전 행동계획 영문 원본

□ 노동과 건강 95년 11·12월호(통권 제38호)/노동과건강연구회(☎866-9175)

· 주요내용: 특집 I 95년 산업재해추방운동을 돌아보며/특집 II 변화된 제도-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교육-삼목강업노동조합/과로사 상담사례/산재동향 등, 65쪽

□ 한국교육연구 제2권2호(95.11)/한국교육연구소(☎678-6776)

· 주요내용: 특집: 세계화와 교육개혁-현 정부의 세계화 전략과 교육개혁의 한계(윤철경) 지구촌화와 지방화, 그리고 교육의 좌표(심정보) '지구촌화' 시대 교육개혁의 '지역적' 바탕(정유성) 등, 136쪽

□ 사람과 일터 96.2(주)우리일터기획(☎706-8636)

· 주요내용: 특집: 학력차별과 노동문제-학력차별과 학력파괴의 실상들, 학력차별과 교육현실, 논평·학력파괴와 노동과 인간/인권 질서시키는 국가보안법/대법원, 무노동무임금 판결 확정 등 184쪽

다국적기업에 압력 가해야 한국 또한, 완구 공장들이 대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으며, 총 노동자 1300여만명중 500여만명이 아직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듯 자본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아직은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노동과 시민·환경·소비자단체들의 상호 협력 하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공동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도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기업을 강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기대가 큰 만큼 노동분야에서 국제연대의 폭을 넓려야 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옮겨주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Human Rights, the new consensus」 중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용인 강제철거 철탑서 화재, 1명 사망·4명 중상 경찰·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 주민폭행

5일 새벽5시 경찰과 대치 중이던 강제철거 감시철탑에 화재가 발생, 철탑을 지키고 있던 주민 5명 가운데 신연숙(38)씨가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롭다.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5시경 백골단 2백여명과 철거용역반원 1백여명이 5층짜리 철탑을 둘러싼 채 1층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곳에 있던 주민 권경택(40), 이범익(58)씨를 집단구타했다고 한다. 권씨는 "철탑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나 보니 철거장패들이 철탑을 부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철거반원이 들어간 얼마 후 1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바로 2층에 있던 LPG가스통에 옮겨 불이 큰 불기둥이 치솟아 철탑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 등 5층에 있던 주민들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18m아래로 몸을 던졌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신씨는 오전 9시경 사망, 동수원병원에 안치중이다. 함께 떨어진 주민 권미향(36)씨와 빈민활동 중이던 안석재(23, 명지대)씨는 혼수상태로 서울 해민병원과 신갈영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중이다.

한편, 신씨의 남편 권경택씨는 철거용역반원의 집단구타로 척추를 다치고 이범익씨 등 둘에 눈을 맞아 위험한 상태에 있다. 숨진 신씨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국민학교 5학년인 딸, 7살난 아들을 두었다.

주민들은 "철거용역반원들에게 소화기를 가져다 주며 불을 끄자고 했지만 가만히 있었을 뿐 아니라 불을 끄러 들어가려는 주민들을 막았다"며 "이들에 의한 방화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경찰과 철거장패의 대폭력은 강제철거가 신씨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중인 용인경찰서측은 "철거과정에서 경찰을 투입한 일이 없으며, 화재원인은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주민들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용인군 수지면은 현재 6가구가 살고 있으며 1년전부터 철거문제로 사업주인 토지개발공사와 마찰이 있어 왔다. 화재가 난 철탑은 주민들이 지난해 8월경 철거반원의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 지역 철거는 철거용역회사인 호삼개발이 맡고 있다.

현재 「전국철거민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임시 비상대책위를 구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

서울경찰청은 4일 강희원(32, 전 진보저널 편집국장)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94년 사노맹이 해체되자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정당 결성을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 가족들은 "사노맹은 이미 공식 해산된 조직"이라며 경찰의 구속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확보된 바에 따르면 사노맹은 지난 94년 4월13일 "군사독재하에서 불가피했던 비합법중심 정당 건설론에서 탈피, 진보적이고 합법적인 대중정당을 건설"키로 하고, 공식 해체한 것으로 알려진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6일(화)
 - 박충범, 업무방해, 서울형사6부, 423호, 2시
- 7일(수)
 - 김영광, 국보법, 서울형사21부, 311호, 10시, 선고
 - 한미선, 국보법, 서울형사23부, 425호, 10시, 선고
- 8일(목)
 - 박창희, 국보법, 서울고법 형사5부, 404호, 4시
- 9일(금)
 - 허인희, 국보법, 서울형사9단독, 317호, 2시
 - 이준우, 국보법, 서울형사23부, 311호, 2시, 선고
 - 권영길, 제3차개입금지등, 서울형사2단독, 328호, 2시

<자료> 마카오회의서 밝혀진 북한 수재 상황 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50억 달러

<편집자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기독교 에큐메니칼협의회'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의 북한 수재 현황 발표문은 북한의 수재 현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발췌해 실는다.

94년 9월 기본알곡생산지대인 황해남도과 황해북도에서 17만 정보의 농경지가 우박 피해를 받았으며 그 후과로 1백2만톤의 알곡 손실을 보았다. 더구나 지난해 7월31일부터 8월18일 사이에는 1백년 이래 처음되는 예상치 못했던 무더기비가 내려 많은 지역들이 혹심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연평균강수량이 1천1백20밀리리터인 우리나라에서 이 기간에 강수량이 하루 평균 5백83밀리리터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두시간에 6백밀리미터를 기록하였다.

이번 큰물로 많은 사람들이 상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고 국토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 유실, 파괴, 파손되었으며 8개도의 1백45개 시, 군에서 5백20만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액은 약 1백50억달러에 달한다(94년 현재인구 2천1백51만4천명의 인구).

무엇보다도 식량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서 그나마 94년 10월 우박으로 하여 주요곡창지대의 하나인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17만 정보

의 농경지에서 1백2만톤의 알곡손실을 입은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전국의 전반적 지역에 걸쳐 농경지의 침수, 유실, 미물로 하여 1백8만 3천톤의 논벼와 81만8천톤의 강냉이 생산이 줄었으며 수해로 하여 1백5만 3천톤의 재고량이 떠나려가거나 유실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지난해 알곡수확(건곡식 3백49만톤) 이후 식량바란스를 보면 앞으로 1년간 보충적으로 필요되는 양곡식은 약 3백20만톤에 달합니다. 이외에 콩기름과 사탕가루와 같은 식료품들이 필요하다.

현재 최저기온은 영하 11도-25도이며 겨울 최저기온은 영하 15도-35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피해로 9만 6천348세대의 주민들이 겨울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침구류, 의복류를 비롯한 기초적인 필수품들을 잃게 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큰물은 보건시설도 혹심하게 파괴해놓았으며 약품 유실을 가져오게 되어 피해지역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병원은 85개, 진료소는 2백14개, 탁아소는 1천3백51개, 유치원은 4천1백20개가 파손되었다. 각종 학생제들과 학원류를 비롯하여 2백12만 달러 분의 의약품과 3백1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각종 의료봉사 시설들이 당면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번 피해로 7만 5천9백55개소의 도로가 파괴되었으며 3천8백42개의 다리가 파괴되고 전기시설과 통신 시설들이 파손되어 피해지역들에 식량을 비롯한 구제 물자들을 수송하는데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다.

주/간/인/권/호/름

(96년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1월29일> 전국연합, 북한 수해동포 돕기 1억 모금운동 나서/전남 노동장관, 노조조합비 일괄 강제 금지 검토, 노조활동에 다각 예상

<1월30일> 검찰,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등 현역의원 3명, 5.18관련 구속/연노련, 한겨레 판결 항의, 바른언론, 국제신문 노조도 성명 발표/41개 대학 법학 교수 72명, 민주노총 위원장 서방, 민주노총 인정 촉구/경찰청, 강력사건 현장에 실탄 장전 출동 지시

<1월31일> 검찰, 5.18 내란 공소시효 기산일 81년 1월25일 계엄 해제일로 판단/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근거로 임금 12.74%인상 요구, 정부와 전경련 임금인상안과 큰 격차/통일위, 장기수 북송회담 불허, 불교인권위원회에 통보

<2월1일> 최근 개통 33개역 중 엘리베이터 4곳 뿐으로 지하철강에인 시설 외면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전국농민회총연맹, 보라매공원에서 농민대회, 쌀지금 정책, 의보통합 실시 등 농정개혁 촉구/노동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현씨 구속/이덕인 대책위, 단식농성은 10일만에 단식 해제, 농성은 계속/전 연세준주 편집장 이동빈씨등 전 민민화련 출신 5명 군복무중 기무사에 구속 확인됨

<2월2일> 경남 시민단체, 낙동강 오염 우려, 위원공단 반대집회 및 서명운동 전개/청라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저조, 장애인 단체 개선책에 경찰청 난색/구로 경찰서, 학원폭력 단속 실적올리기 급급 선도 교육 학생들 조직폭력배로 몰아 구속, 고사들 집단 탄원서 제출/서울고법, 회사 문제점 사의 제보 "해고사유 안된다" 판결

<2월3일> 위원공단저지 부산시민위원회, 위원공단 저지 시민결집대회 개최/외노협, 기자회견 갖고 방글라데시인 오스만 씨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노동자 벌금제도 철폐 촉구

<2월4일> 경찰, 전 사노맹 조직원 등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해설>

지난주에 공안당국은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사노맹, 민민화련 등의 조직원들을 구속했다. 사노맹이나 민민화련은 모두 해산했거나 현재 활동을 중지한 단체들이다. 구속자들은 이미 평범한 시민이 되었거나, 군복무중이었다. 또, 노래패 대표나 출판사 대표를 과거의 노래책을 문제삼아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저열한 처사라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공안당국의 이런 비상식적인 탄압은 또 다시 총선을 앞둔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선거 직전 것처럼 많았던 조직사건들이 실은 실체가 없는 조직을 부풀려서 발표했던 것임을 상기할 때 공안당국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지난해 전국연합은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마카오에서는 남북한 기독교 대표들이 만나 북한 수재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북한의 식량문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정부 당국자들에게 요구된다.

인권하루소식

폭력 철거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신연숙씨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폭력철거 살인만행 책임자 처벌” 촉구

용인군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

6일 오후2시 「(가칭) 철거민고 신연숙영사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기 용인 수지면 2지구 폭력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신연숙씨의 사망 등에 항의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수면 광장에 집결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및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4백여명은 “폭력철거 살인만행 책임자 처벌하라” “폭력정권 살인정권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까지 행진한 후 대기중이던 전투경찰과 대치한 상태에서 1시간에 걸쳐 항의,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인제 경기도지사 와 용인경찰서장 사퇴, 토지개발공사 사장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또, 수지면에서 철거폭력의 피해를 입은 67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망자 보상금 지불, 치료비 전액배상을 요구하였다. 비대위는 “토지개발공사

사가 제시하는 이주대책비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가수용단지나 임시거주대책등 선입주·후철거의 순환식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씨의 항소심 승소는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을 인정한

데 이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문국진씨는 지난 86년 보임다산사건으로 수배중자수 청양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고무후유증을 얻어 지금까지 고��받고 있다.

전씨에 돈받은 언론인 바른언론, 공개 촉구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수등, 바른언론)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두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바른언론은 “5.6공 신군부에 빌붙어 아무하면서 그들의 정권탈취와 학살행위를 찬양했고, 전두환씨가 88년 백담사로 떠날 당시 무마용으로 언론계에 뿌린 부정축재자금을 받았다”며 “이들 언론인들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사법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축재자금을 통치자금이라 부른 점 △5.18 문제에 대한 독자취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5.6공 비리 언론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국민적 서명운동 및 언론거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지면 사건 일시>

- 93년 11월13일 용인군 수지면 대지 약 20만평에 택지개발 예정고시
- 94년 8월 택지개발사업결정 고시
- 11월 택지개발사업 시행령
- 12월 철거민대책위 결성
- 95년 6월 골리앗 설치
- 9월 경찰과 5백60일간 대치
- 12월 31일 개발계획승인-본격적인 공사시작
- 96년 2월5일 강제철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대책없는 강제철거 철거민 죽이려는 의도”

-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탑 농성 138일-

용인군 수지면은 80년대 말 집값, 전세값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내려온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꽃을 가꾸거나 주변 신도시 아파트 일용건설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93년 10월 이 지역 대지 약 20만평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내려진 뒤 집들이 팔려나가고, 집주인들은 보상금과 아파트 청약권을 받아 떠나기 시작했다. 95년 3월 보상이 시작되면서 1백30가구가 떠나가고, 갈 곳도 보상금도 없는 세입자 6가구가 남아 있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빈 집과 허허벌판이 되어버린 이곳에 마지막까지 남은 6가구 주민들은 경찰들의 잦은 순찰과 철거장패들의 강제철거위협을 감시하고 막아보기 위해 폴리아(철탑)를 세웠다. 폴리아는 이들에게 유일한 무기였다. 그동안 경찰은 폴리아가 '무허가건축물'이라며 부수려 들어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일로 인해 주민 권미향(36)씨와 권종택(40)씨는 업무집행방해로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고, 급기야 추석을 며칠 앞둔 지난 해 9월5일 경찰과 철거장패들은 폴리아 철거와 권씨등을 연행한다는 이유로 5백6일동안 폴리아를 포위해 사실상 '감금'당하기도 했다. 전국수배가 내려진 뒤 폴리아에서 한발짝만 나가도 연행하겠다는 경찰 때문에 권씨등 주민들은 이곳에 살림 도구를 놓고 숙식할 수밖에 없었다.

폴리아 철거에 7천만원 그렇게 폴리아 농성을 전개하기 138일, 이번 일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신씨의 죽음은 아무런 대책없는 동계 철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경기지역철거민연합」 남경남의장은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겨울 새벽에 강제철거를 하려 한

것은 철거민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며 대책없는 겨울철거를 이유로 들었다. 남씨는 “철거에 나선 용역전문업체 호삼개발(주)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철거민들을 철탑 밑으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7천만원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며 이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

철거반원 방화 가능성 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이범익씨에 따르면 당일 새벽 4시까지 5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사이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 깨었을 때 이미 철거반원들이 사다리를

통해 잠자던 그들에게 접근하던 중이었다. 곧 이어 이씨와 조지부장 권정택(사망한 신씨의 남편)씨는 철거반원들에 둘러싸여 구타를 당했고, 그 와중에 대학생 안석재씨와 2명의 부녀자는 잇따라 피신하였다. 얼마 후 철거반 용역반원 중 몇 명이 주방에 있던 3개의 가스통 중 2개를 아래로 던져 버렸고 1개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다”고 외치며 아래층으로 뛰어 내렸다고 한다. 이에 이씨와 권씨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내렸으며, 권씨는 지상에서 철거반원에 붙잡혀 또 폭행을 당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이씨는 불이 주방에서 보온덮개로 사용 중이던 카시미론 담요에서 불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연행된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찾아간 변호사가 경찰의 접견 방해로 4시간이나 기다리다 돌아온 사건이 발생,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경찰이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사노맹 전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본실에 연행된 권순미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조광희 변호사등 2명은 이날 오후4시경 장안동 대공본실을 방문했다. 이들을 맞은 경찰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접견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에게 강변했다. 이에 조변호사등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변호인이 되는 자도 피의자 접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렇더라도 피의자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쓰는 동안 수사관이 입회해야겠다”고 말해, 조변호사등은 이에 항의하다 결국 양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4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해놓고도 피의자들의 접견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이에 조변호사등은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경고하고 대공본실을 떠났다. 경찰이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을 허락한 것은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 주요 내용에 대한 조사가 1차 마무리된 후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승현변호사는 “안기부조차도 변호인의 접견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마당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피의자접견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변호사가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장스캐치-고 신연숙씨의 영안실 표정>

엄마를 빼앗은 윤정이의 슬픔

작은 흑백 사진안에서 푸근하게 웃고 있는 그녀는 누가봐도 ‘아줌마’같은 인상이었다.

“죽었는데 이제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난 5일 새벽 5시 살기위해 불길에 휩싸인 철탑에서 뛰어내린 신연숙(38)씨가 참혹한 시체로 누워있는 영안실에는 1백여명의 지역주민과 학생들로 북적였다. 어수선했던 영안실 분위기는 ‘내 새끼’를 애타게 부르는 신씨 친정어머니의 울부짖음으로 숙연해졌다.

사진속의 신씨를 꼭 빼앗은 큰 딸 윤정(17)이는 아직도 엄마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듯 주저앉아 친척들에 둘러싸여 있다.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윤정이 아버지 권종택씨마저 철거반원의 집단폭행으로 척추에 이상이 생겨 부인의 시신이 안치된 동수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온 윤정이의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하기만 했다.

폭력 철거 과정에서 유명을 달린 고 신연숙씨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고문후유증 분신사망 장현구대책위, 경찰측 고문사실 부인

농성 56일째를 맞은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고 장현구군 장래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학등, 대책위)는 지난 5일 경원대 정문 앞에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쇠사슬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20-30명의 학생들은 매일 영하의 날씨에 천막도 없이 바닥에 돛자리

만 간 채 머리에 노란 두건 하나 쓰고 농성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정문앞에 철탑을 설치하는 등 투쟁을 벌여왔는데 학교측은 학생들을 포함하고 해결의 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쇠사슬 농성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경원대학교측은 지난주

대책위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지는 등 그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협상대이블에서 ‘밤10시이후 교내 단전단수’ ‘학생의 학내숙식금지’ 등 장씨 문제와 관련없는 사항들을 들고나와 협상을 결렬 시켰다. 학교측은 총장의 직접 조문과 이사장 이름의 조화 헌화, 장씨의 명예졸업에 동의할 수 있으나, 대책위가 요구하는 △관련 교수 사퇴, △재단이사장 공식사과 등 직접적인 책임

부담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장현구씨 고문사실을 수사할 해은 성남중부경찰서는 최근 1차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92년 11월28일 장씨를 연행한 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수갑 등을 채운 일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장씨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것

은 11월30일로, 당시 장씨 부친과 성남 산자교회 김해성 목사가 수갑을 뒤로 채우고 고문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보고서가 매우 형식적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감찰결과에 대한 반론서를 작성, 경기도 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4일 장현구씨가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다 분신, 열혈만에 사망하자 경찰병원 영안실에서 7일 현재 56일간 농성을 벌이며 고문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북한 돕기에 나서야 전국연합, 서한 전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7일 오전11시 통일원을 방문, 정부가 북한수재민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전국연합은 통일원에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가 현재 북한동포를 돕지 않는 것은 물론 도움을 주려는 다른 국가까지 막아서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유엔 보고서 계기 중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 압박 정대협,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3명, 정대협)은 6일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씨의 보고서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정대협은 “이 보고서가 민간기금 등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일본정부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협은 오는 3월28일 필리핀에서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정부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국내 사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를 비난했다. 전국

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는 국제사회 여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정대협은 “어린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몇십년 전에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는 일본 정부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나라”라고 비난했다.

지난 6일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씨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시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국제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2면에 보고서 내용).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재야대표·엠네스티 서한

경실련 송월주 공동대표, 민변 고영구 회장,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 등 8개 주요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6명은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진남 노동부장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등 정부관계자와 여야 4당 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등 구속된 노조지도자의 석방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 △노동법 개정 △노동자들에게 대한 사면복권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5일, 지난 1일 제3차개입금지 위원으로 수배중에 구속된 양규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지난해 11월23일 구속된 권영길 위원장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대통령, 안우만 법무부장관, 진남노동부장관 앞으로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의 철폐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노조위원장 사퇴 등 촉구 여연, 헌전 노사에 항의서한

여성단체 대표들이 한일 병원 고 김시자 노조위원장의 분신 사망 사태에 대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태일, 헌전노조)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여연) 의장단과 소속단체 대표, 이우정 국회의원 등 33명의 이름으로 7일 발송한 서한에서 "간선제로 뽑힌 최태일 노조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정년연장을 미끼로 3만 조합원들의 삶을 담보로 한

3% 임금가이드라인과 노조전임자 축소에 합의하게 하는 등의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근대적인 노사관계와 기업운영에 대한 시정은 고사하고 김시자 위원장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매도하였다"며 조문은 조합원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것과 영안실에 공권력을 투입토록 요청한 일 등을 따졌다. 이들은 헌전측에 노조전임자 축소 기도를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연은 헌전노조에 보낸 서한에서는 △김시자씨의 분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태일 위원장과 집행부의 전원 사퇴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해고되거나 전출된 직원들을 전원 원상복귀시킬 것 △노조전임자 축소 기도와 3%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회 △노조위원장 직선제 등을 촉구했다.

고 김시자씨는 지난 1월 12일 헌전노조측의 노조전임자 축소 기도와 노조집행부를 반대하는 노조지부장들에 대한 징계를 규탄하며 여성으로는 3번째로 분신, 사망했다. 여성계가 헌전노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수 복송 회담 재추진 불교인권위, 19일 판문점

출소 장기수의 복송을 추진하고 있는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는 통일원이 3번에 걸쳐 불허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 오는 19일(실날)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자고 다시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는 "김영태, 함세환, 김인서씨등 3명의 북한 출신 장기수의 복송을 위해 북측과의 예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군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편집자주>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씨는 지난해 7월 한국, 북한, 일본 등지를 방문, 일본군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했다. 그는 이 결과를 지난 6일 보고서로 유엔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3월 열릴 제52차 유엔인권위에서 심의되며, 심의결과 권고가 결의되면 일본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내용을 실는다.

□ 서론-지금까지 일부에서 사용해온 '군위안부'(comfort women)란 말은 피해여성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규정한다. 또한 이들의 모집 및 관리 등의 문제는 일본정부 및 일본군대에 그 책임이 있다.

□ 피해자들의 입장-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군대가 당시 여성들을 강제로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에 있어서 현재 일본정부가 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법적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관계국과의 협약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도덕적 책임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기금'을 발족했다.

□ 권고사항

1.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는 국제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특별행정기관'(Special Administrative) 설치가 필요하다.
3. 일본정부는 위안소 및 일본군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4. 일본정부는 피해여성 개개인에 대한 공식서면 사과를 해야 한다.
5.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군대위안부의 징용 및 관리를 담당했던 관련자의 조사와 처벌을 권고한다.

□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국제 NGO(민간단체)들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또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및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폭력 철거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신연숙씨의 영전에 참가 명복을 빕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에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임신 8개월에 구속되었던 시국사건 관련자가 최근 태아를 사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범민련 사건으로 수배중 구속된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지 4일만에 태아를 사산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씨는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은신 중은 신치를 덮친 광주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어 구속집행정지 때까지 약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고씨가 구속되자 광주지역의 여성단체 등이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수배중 구속된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지 4일만에 태아를 사산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씨는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은신 중은 신치를 덮친 광주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어 구속집행정지 때까지 약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고씨가 구속되자 광주지역의 여성단체 등이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수배중 구속된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지 4일만에 태아를 사산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씨는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은신 중은 신치를 덮친 광주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어 구속집행정지 때까지 약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고애순씨의 육아일기

<편집자주> 고씨는 수배로 은신중임에도 매일 육아일기를 썼다. 가족과 아이에 대한 사랑을 엮어 가던 이 육아일기는 95년12월3일로 끝난다. 12월4일 고씨가 은신처에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3일(일)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구나.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쓴 것도 그렇고 아빠가 오랜만에 좀 밝아지셨어. 여전히 힘드시지만 너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주시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역력해서 엄마 너무 고맙단다. 내일도 계단 오르내리기를 계속하자구나. 그게 나중에 엄마와 너를 덜 힘들게 해준다나 봐.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내일부터 당분간 아빠를 못 보게 될지 몰라. 조심을 좀 하셔야 하거든. 엄마랑 너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러다 보면 일은 차츰차츰 풀려갈 거야. 아빠가 주신 여유가 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그때 이야기하렴. 마지막으로 피도 더 든실하게 가꾸고 피도 더 맑게 하고 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이 거야. 착하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꾸려보자구나. 잘 자렴.

예정일인 5일 병원을 찾은 고씨는 끝내 태아를 사산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이상영(총복대, 법학)교수는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법은 비법(非法)이다. 특히 모성을 짓밟는 법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승현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판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 법 운용자의 잔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광주지역의 단체들과 범민련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몰인정한 처사에 분개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술인, 매일 집회 열기로 '꽃다지' 대표 구속 항의

8일 오후 12시 30분 탑골공원에서는 「예술활동 단압까지 힘차게 이어져서 이어져갔다. 이번 거리공연에는 꽃다지, 노찾사, 노래마을, 천치인, 김현성, 안치환, 류금신, 김영남 등이 교체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이 공연은 이은진, 원용호씨만이 아니라 이미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황석영, 박노해씨 등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위한 공연이 될 이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속

자가 석방될 때까지 매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거리공연과 집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50, 민예총 사무국장)씨는 "92년부터 발행되어온 노래집 『희망의 노래』를 이제와서 국가보안법으로 문제삼는 것은 그 의도가 극히 의심스럽다"며 "선거국면을 맞아 공안분위기를 조성, 선거분위기를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와 거리공연을 통해 △구속 예술인의 즉각 석방 △예술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다.

<첫 거리공연 표정>

「금지의 벽을 넘어 자유를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의 첫 거리공연은 추운 날씨와 세찬 눈발이 날리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많은 보도진들의 취재하에 진행되었다. 엠프가 작동이 안돼 마이크없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출연진과 군중들의 노래와 몸짓은 활기차게 이루어져서 끝까지 힘차고 밝게 이어져갔다. 이번 거리공연에는 꽃다지, 노찾사, 노래마을, 천치인, 김현성, 안치환, 류금신, 김영남 등이 교체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이 공연은 이은진, 원용호씨만이 아니라 이미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황석영, 박노해씨 등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위한 공연이 될 이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속

한국노총 반성, 개혁돼야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말 제안한 노동계 통합에 대해 "한국노총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 어용노조의 척결, 대중적 신뢰 회복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입장을 확실히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합제안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날 한국노총 송수일 위원장 직무대행 앞으로 답변서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답변서에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준비위 발족, 민주노총 창립, 국제자유노련 가입 논의 등 민주노총이 대내외적 위상을 세우려 할 때마다 통합제안을 해 그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동투쟁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근거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을 바라는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통합의 핵심적인 전제는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94년 11월 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처음 '노동계 통합'을 제안한 후 95년 11월과 12월 연이어 민주노총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

구축자 35명, 수배자 13명 민주노총, 사면 대상 파악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정부가 추진중인 사면복권 조치에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사면복권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면복권 조치 때마다 매년 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왔다"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투쟁으로 사면복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면복권자의 명단을 파악한 뒤 노동부와 청와대에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팩스·엽서 보내기 등을 전개하고, 여야 정당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일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것과 아울러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김영삼 정권 하에서 구속, 수배된 노동자의 현황을 알려 내고 구속자의 석방과 수배해제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2월6일 현재 권영길 위원장등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된 8명을 포함하여 35명이 구속·수감 중에 있으며, 수배자는 금속연맹의 이승필 부위원장 등 13명으로 나타났다. 또,

사면복권대상자는 4백50명으로 파악되었다.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 수지면 철거사건 축소수사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8일 용인군 수지면 철거지역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구속한 철거용역전문회사 호삼개발(주) 대표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새벽에 강제철거를 들어간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민 고신연」속씨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남경남,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건축사업주인 토지개발공사에 있다"며 용역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경찰의 개입도와 책임이 완전히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현재 수원역과 동수원병원 앞에서 매일 오후 집회를 갖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행사와 동정

- 제3기 거래사랑청년회 출범식
 - 일시: 11일(일) 오후 4시
 - 장소: 전남 광주역 열 신명아트홀 2층
 - 주최: 광주 거래사랑청년회
- 「주거연합」 6기 출범식
 - 일시: 11일(일) 오후 2시
 -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 문의: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3673-3031)
- 9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주거회의 한국지역 주민대회
 - 일시: 11일(일) 오후 3시
 -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 내용: 세계주거회의 한국위원회 경과 및 활동계획 보고/주거권실현 촉구서 낭독 등.
 - 주최: 「96세계 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정책간담회
 - 일시: 9일(금)-10일(토)
 - 장소: 경기도 광주 만남의 집
 - 문의: 715-9185
- 제1차 국제연대포럼-96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촛불에 대한 토론
 - 일시: 14일(수)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796-8364)
- 고 민족시인 김남주 2주기 추모 문학의 밤
 - 일시: 11일(일) 오후 2시
 - 기념행사: 전남 광주 망월동 김남주 묘역
 - 문학의 밤: 금남로 두메야채잔치(☎062-224-0078)
 - 주최: 민족문학작가회의/김남주기념사업준비위원회(☎062-527-4501)
-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 일시: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종로 탑골공원
 - 행사내용: 결의대회/가두시위(종로-명동성당)
 - 주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584-7701)
-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지난 2일 제10차 정기총회를 갖고 공동대표에 이미경(46), 지은희(49), 한명희(44)씨를 선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여연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폭력 철거 과정에서 유명을 달린 고 신연속씨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일동-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정부, 국제무대에서 '사기극'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 결성도 안돼

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없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엔 무대에 서마져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사전심의결과 유엔 아동권위원회가 결의 내용중 "조약을 홍보·교육하기 위한 조치와 그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하는

가?"라는 항목에 대해 "95년 8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지난 1월18일자로 답변했다. 정부는 이 답변에서 "적십자사, 유니세프, 연 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의 민간단체들과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했다"면서 이 위원회가 조약의 교육 △정부에 조약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조약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조정 역할 등의 기능을 하고 있

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답변은 유엔 아동권위원회가 최종보고를 내면서 "최근에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는 구절을 명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런 위원회는 만들어 지지도 않았고, 그것도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동은, 유니세프)가 약 10여명의 정부, 민간 단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초빙, 식사를 한 정도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 사무총장 박동은씨는 "아동 권리에 대해 정부보다 민간이 나서서 이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옳다는 취지로 전문가들을 모았다"면서 "위원장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 같은 것도 없지만, 이후 모임을 확대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해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즉, 정부가 유니세프에서 만든 한 차례의 모임을 국가위원회의 설립으로 거짓 보고한 것이다.

고이순씨 50여일 수감 중에 단 한차례 진료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5일 아기를 사산한 고이순(29, 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가 깊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9일자 참조). 평소 고씨를 알던 이들은 "수배중에 육아일기를 썼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며 "젖이 붙었는데도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여자들이 미칠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4일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50여일 동안 교도소측에 계속해 태아의 상태를 진찰해 줄 것을 교도소 당국에 요구했으나, 거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석방 직전인 지난달 29일 단 한차례 광주 시내 산부인과에서 외진을 받았을 뿐이다. 외진 결과, "태아의 발달은 미숙하지만, 별 이상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듣고 고씨는 안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예정일인 3월1일(9일자)에 "2월5일 출산예정일"은 잘못)보다 25일 가량 빠른 지난 5일 갑작스런 통증을 느껴 광주 에덴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아기는 죽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 광주지역의 여성, 학계, 사회단체 등은 다음 주 초 대책위원회를 구성, 경찰·검찰·법원·교도소 등에 항의방문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프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이처럼 정부가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드러나자, 민간단체 보고서를 작성한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소속단체들은 "정부가 조약에서 규정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이행할 생각은 없고 버젓이 사기극을 일삼고 있다"며 즉각 이 사실을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알릴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유엔 아동권위원회에 알려지게 되면 정부가 국제적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 드러나 망신을 사게 된다.

7일째 변호인 접견 불허 서울시경, 사노맹 구속자에

지난 3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사노맹 가입 혐의로 연행, 구속된 강희원(32, 전 <진보저널> 편집국장)씨 등 9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연행 7일이 지난 어제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노맹 재건사건 구속자가족대책위」 이귀영씨는 "이미 윤기원 변호사등 5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선임되었고, 이들 변호사들이 3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으나 경찰에 의해 모두 불허되었다"고 밝혔다. 윤기원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변호인 접견 불허에 맞서 이들 변호인단은 8일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3차공판이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회동시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신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파업 개입 여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집회 참가, 민주노총의 불법성에 대해 질문했다.

권위원장은 전기협 파업 개입에 대해 "이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한 기관사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지 누군가의 사주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또한 현충전 집회에서 불법파업을 선동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항상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불법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도중 "피고인 답변이 너무 자세하고 한국노총과 한국철도노조에 대해 아무런 검증없이 어용이라고 하고 있다"는 이의신청을 해 방청객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발언 중 "검찰 심문없이 변호인 신문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여러 번 강조, 권위원장의 검사신문 거부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검찰의 석명은 준비된 것이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측은 "변호인들이 공소장 전체를 문제로 삼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

렵다"며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다음재판에 석명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권씨가 재판부에 신청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7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와 관련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피고의 혐의중 제3차개입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사항 중 민주노총 건립기금모집이 이 법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당국의 허락없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활동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간첩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씨의 3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94년9월16일 허인회씨가 간첩 김동식과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유기훈 (이길재 국회의원 비서관)씨는 "관련 당일, 의원 사무실에서 청첩장을 가지고 들른 허인회씨와 만난 사실이 있

다"고 증언했으며, 신주희 (신계륜 국회의원 비서관)씨도 "의원회관에서 점심시사를 마친 후 허인회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시중 재판은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과의 검찰측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검사는 증인 유기훈 씨에게 재판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학 시절 학생회 활동이나 그로 인한 투옥 경험에 관련된 사실을 집중 질문함으로써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기도 하였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열리며, 허인회씨의 9월16일 국회 출입 사실 여부, 간첩 김동식의 주민등록 문제, 허인회씨가 김동식과 같이 다녔다는 식당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여성운동상 후보 추천 여연, 15일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3명, 여연)은 15일까지 제8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다. 수상후보 자격은 계층, 부문에 관계없이

◆ 인권간행물 ◆

- 한국사회 변화와 빈곤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연구소
 - 주요내용: 빈곤의 이해/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도시빈곤의 존재양식/고도 자본주의 속의 떠도는 도시빈민의 생산활동/재생산 영역에서 드러나는 빈곤의 형태와 특성/망치된 새로운 절대빈곤:무주거자/90년대의 빈곤과 복지투쟁 등. 183쪽.
- 자료집-천주교도사빈민회 10년 사록
 - 주요내용:주요연혁/주민모임과 주민연대모임 활동/지역센터 활동 등. 573쪽.
- 「우리네 아이들」 96. 1/2-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주요내용:96년도 보육사업 사업방향(보건복지부)/일본보육연수기2(위양자)/수련회·총회 보고 등. 67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 88호-전국연합
 - 주요내용:한총련의 민족대학건설 투쟁/15대 총선 점검-민족민주운동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김성희)/4.11 총선의 쟁점 분석(박정범)/5.6공 잔재청산과 민주사회개혁의 제 과제(최규업) 등. 51쪽.

여성권을 위해 활동한 개인 및 단체이다. 연락처는 273-9535.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엠네스티, 석방 촉구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이은진, 원용호씨와 관련,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두 사람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수정을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2월8일자 서한에서 "폭력적 위협의 용도가 아닌 노래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근 보장을 당국에 요구했다.

<기사정보>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컴퓨터 통신: rights(천하), 01410->oland->13번으로!

<이달의 주제-주거권>

각국 정부는 현재 철거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위 제50차 회의(93년) 결의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강제철거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끔찍한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수사당국이 불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근 보장을 당국에 요구했다.

경기도 용인 수서2지구에서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신원숙씨 사망사건과 관련, 수원지검 신용간검사는 지난 6일 긴급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중 현장개발소장 김현수씨 한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회사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5인에 대해서선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한, 이후의 수사 방침에 대해 한 경찰관계자는 "토개공 관련자나 용역회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라며, "앞으로는 철거민들에 대한 본격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거민 고신원숙 열사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남경남등, 대책위) 대표 3인은 12일 이인제 도지사를 만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 △수지구 거주민 이주대책으로의 영구임대주택 △가수용시설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인제 지사는 "처벌 문제는 관할권 밖이며, 보상문제도 토개공과 협의 사항이 아니겠다"고 밝

히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도지사와의 면담후 가진 대책위는 회의를 열고 △이인제 도지사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5명에 대해서뿐만아니라 토개공, 용인경찰청, 용인군, 도지사에 대해서도 살인 혹은 살인교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고소고발할 것 등을 결정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현 단계가 피해자 보상등의 문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보상문제나 이주대책과 관련한 협상은 책임자 처벌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의 선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9일, 암사동에서 강제철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도 지난 9일 오전10시 경찰과 철거용역원 1천5백여명이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또, 이들은 가락본동에서도 23채의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을 철거했다.

11일 강동구청에서 이를 항의하던 서울철거민연합 소속 회원 2백여명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주민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현재 강동성심병원과 효동병원에 입원중이다. 이처럼 잇따른 강제폭력 철거와 관련하여, 「전국철거민연합」은 13일 오후1시

서울 종로공원에서 '철거민고신원숙 열사 학살책임자 즉각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중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항의방문을 가질 예정이다.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세계주거회의민간위

「96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태준 등 3명, 한국위원회)는 11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무주택자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한국지역 주민대회'를 가졌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공동대표 김영준 등, 주거연합) 창립 6주년을 기념 열린 이번 대회는 1부 96 주거연합 출범식, 2

부 한국위원회의 활동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촉구서를 발표하고 △정부주도 하의 주택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실시 △강제철거 금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얼마전 경기도 용인군 강제철거 도중 숨진 신원숙씨를 추모하며 "문민정부 등장이후 여전히 살인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철거는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개발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확보를 위해 순환식 개발방식을 확대 도입하고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주택문제의 '리우회담'이라고 불리는 HABITAT II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한국위원회는 13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주요 공판 안내 ○

- 13일(화)
 - 전재순(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4부, 2시, 416호
- 14일(수)
 - 박준형, 업무방해, 서울형사 3부, 2시, 319호, 신권
 - 신광수 외 1명(선고), 국보법, 서울형사 1부, 10시, 416호
 - 정민주 외 1명, 국보법, 서울형사 22부, 2시, 425호
- 15일(목)
 - 김규화(선고), 업무방해, 서울형사 4부, 10시, 416호
 - 박충범(선고), 업무방해, 서울형사 6부, 10시, 423호
- 16일(금)
 - 박충범, 국보법, 서울형사9단독, 2시, 317호
 - 이정환등 2명(선고),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 10시, 319호

고에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지난 5일 태아를 사산한 고에순(29, 전 광주전남연합 자동차부장)씨 문제에 대해 광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전남연합, 광주여연 여성특별위, 남총련 등 10여개 단체 대표들은 10일 회의를 갖고 광주전남지역의 광범위한 단체들을 포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무리한 공권력 남용과 반인륜적 인권탄압이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13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구속 사례와 교도소내 임신부의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하기로 하였으며, 검찰과 재판부, 도경 보안수사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0일 각각 성명을 발표, "만삭의 임신부를 차디찬 교도소에 방치하여 결국 사산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양심의 파탄이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이 사건은 사법주체의 잔인성을 드러낸 것으로 인륜도덕에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공안당국과 법원은 고에순씨를 비롯,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정중권 사죄와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여연은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태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해 이상훈 부장판사, 검

사, 검찰청장 등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4월 제수감될 고에순에 대해 석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서울지법 장혜창 판사는 12일 사노맹 재건사건으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속된 강희원씨 등 9명의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집견불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정청장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들을 집견하려 한 변호인에 대해 계속 집견 불허, 이에 대해 지난 6일 변호인단은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을 불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예술활동 탄압금지 촉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와 민맥출판사 대표 원용호씨를 각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대중적 음악 창작음악활동을 통해 사회비판적 입장에 선 민족예술에 대한 억압"이라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순수한 문예창작과 예술활동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간/인/권/흐/름 (96년2월5일부터 2월11일까지)

<2월5일(월)>
웅인 수지2지구 강제철거, 1명(신연숙씨) 사망, 4명 중상/광주·전남 50개 단체, 영광원전 추가건설 철회 촉구 /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북한 식량난 조사차 3월 방북 계획 발표/법무부, 농어민·도시영세민, 10~30만원 실비로 형사사건 변호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돌입

<2월6일(화)>
유엔 인권위 일본종군위안부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촉구/웅인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1억5천 배상 판결/바른인권, 전씨에게 돈받은 언론인 사법처리 촉구/채권 수도 그르즈니, 러시아군대 철수 요구 시위 계속

<2월7일(수)>
전국연합, 정부의 조건없는 대북 수해지원 촉구 서한 전달/전국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국제 엠네스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사망 관련, 여연 환전노사에 항의서한/불교인권위원회, 장기수 복송 회담 재추진/서울지법, '기부금품법모집 금지법' 위헌제정

<2월8일(목)>
경총, 올해 임금인상을 4.8%확정, 노총,민노총은 12.2%, 14.8% 요구/법원, 반상군 금전구경장 영장 기각, 세 아당 과잉수사 비난/일산 주민, '새도시 자족기능 약속' 불이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의/충북지역 시민·학생, 친일 정춘수 동상 철거/보안법 수감 고에순씨, 출산일 직전 출산후 끝내 아기 사산 밝혀져/예술인, 이은진·원용호씨 구속 항의, 매일 집회와 거리공연 갖기로

<2월9일(금)>
사노맹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변호인단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제출/국제엠네스티, 꽃다지 대표 등 양심수 규정, 석방 촉구

<2월10일(토)>
일본교수 93명, 국보법 위반혐의 박창희 교수 석방 원원서 제출/5.18 민중항쟁동지회, 민예총 등과 함께 시민군 시각의 5월 광주 영화화하기로/서울고검 백순현 검사, 박창희 교수 무기징역 구형

<2월11일(일)>
노동부조사, 94년 한해 질병사망 노동자증 75%가 과로사

<해설>
지난주 일어난 사건중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건은 경기도 웅인군 수지면에서 일어난 강제철거와 고에순씨 태아 사산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은 공권력의 잔인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것으로 현 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를 증언한 것이다. 강제철거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김영삼정부에 들어와 민간철거용역업체에 이를 대행시킴으로써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아무런 대책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철거하는 것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는데, 심지어 주민들이 사망·중상에 이르도록 철거하는 것은 만행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에순씨의 경우도 만삭의 임신부를 차디찬 감옥에 오랜동안 수감해야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범이 겪는 이들이 겪는 고통일 이렇듯 대 일반수들은 오죽 하겠는가 분노스러울 뿐이다.

<p><이달의 주제-주거권> 각국 정부는 현재 철거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위 제50차 회의(93년) 결의문중-</p>	<h2 style="margin: 0;">인권하루소식</h2>	<p>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p>
--	------------------------------------	---

'강제철거 중지' 공약 실천 촉구 철거민들, 경기도지사·서울시장 퇴진운동 불사기로

경기도 웅인 수지지구, 강동구 암사동 및 가락동에서 잇따른 강제철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 사망 및 부상사건과 관련, 항의집회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열린 규탄집회에 이어 13일 오후 연세대에서는 '철거민 고 신연숙 열사 학살책임자 즉각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중투쟁대회'가 열렸다. '신연숙씨 비상대책위(약칭)', '민중운동 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당초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철거민들과 사회단체, 학생들 7백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이 책임있게 임하지 않을

경남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인제 경기도지사 퇴진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더이상 이런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영삼 정권타도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연합부의장 고수익씨는 "김영삼, 이인제, 조순, 언론사 등에 대해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후 투쟁계획으로 "수지지구에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법률적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며, 서울 지역에서는 강동구청, 강동경찰서에 대한 응징투쟁과 서울시청방문투쟁을 벌이되 그 투쟁의 수위는 문제해결에 임하는 조순 시장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비대위 상임공동대표인 남

경우 '강제철거 중지'라는 선거공약을 위반한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후 추이에 따라 총선시기 신한국당 낙선운동 및 김영삼정권 퇴진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는 김영삼 대통령과 이인제 도지사,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화형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어 집회참석자들은 연대 교문밖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한편, 대책위는 15일 서울과 수원에서 동시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원대 교문앞 철탑 철거 학교측, 학생에 폭언·폭행

고 장현구씨(95년 12월 분신·사망, 당시 27세) 고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33일동안 농성중이던 학생들에게 대학총장과 직원이 직접 나서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철탑을 강제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학비리·경찰고문 회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해성목사,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10시경 경원대 교직원 70여 명이 김원섭총장을 위시한 총무처장, 기획처장 등 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 정문앞에 설치된 5층철탑을 부숴서 버렸다고 한다. 대책위는 마침 이날은 종로에서 독도문제 항의집회가 있어 학생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우고 철탑에는 4-5명만 있었다며 그 틈을 타 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철거도중 학생이 철거에 항의하자 계단에서 밀어뜨려 온몸에 타박상을 입혔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를 보고 말리자 직원들은 "니가 뭐래 그러느냐"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욕을 하는 등 격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 자리에는 고 장현구군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용식(자연대 학장, 55)교수가 나와 "나는 잘못이 없다. 제적당한 학생이 자살한 걸 왜 나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느냐"며 학생들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 한심하다"며 문교수를 비난했다. 1시간만에 철탑을 모두 부순 학교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등 집기를 트럭에 싣고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한편 13일 경원대학보사주최로 강씨문제에 관한 교수·학생 간담회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철탑강제철거로 무산되었다. 대책위는 "학교측이 간담회 전날 농성장을 부순 것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학교측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다시 철탑을 세우고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수재민 돕기에 함께 합시다

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백50억 달러!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이 사상 최악의 수재를 당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와 종교단체가 벌이고 있는 북한 수재민 돕기에 따뜻한 동포애와 인권의식으로 함께 합시다.

전국연합 모금구좌
우체국 014001-0016219 예금주 최홍재

<자료> 고애순씨 옥중 편지 자나 깨나 뱃 속의 아기 걱정

<편집자주> 지난 2월5일 아기를 사산한 고애순씨 사건이 본지에 보도된 뒤 사 회단체들과 언론사에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성 수감자의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씨의 사건을 계기로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고씨가 광주교도소 수감중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 발췌 게재한다.

우리 아기에게 매일 아빠 이야기를 전할 때면 대책없이 치밀어오르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숨을 정지해야 합니다. 당신과 우리 아기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희망스러우면서도 한편 모든 것이 실제보다 힘들어 지기도 합니다. 매일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과 나,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가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그런 표현만으로는 너무 부족한)을 가꿔 갈 수 있다고 약속해 보지만 지금은 홀짝 뛰어들어가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알다시피 처음에 열과 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현대 어저부터는 열도 내리고 몇 겹씩 벗겨 지던 얼굴도 편찮아졌습니다. 방에 난로도 들어왔고요. 신장 때문에 특히 겁났던 임신중독증을 피하기 위해 찬 음식을 싱겁게 먹는 등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잘 느껴지지 않던 태동도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다시 느껴지고요. 제일 심각한 고민거리였던 변비도 오늘부터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우유, 요구르트, 땅콩을 먹어왔거든요. 지난 검진이 20일이었는데 어저 체중을 재어보니 1kg 밖에 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좀 걱

정이 됐습니다. 아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게 아닌가 하구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먹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곧 검진을 한 번 받았으면 싶은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의원을 비롯해 몇 분이 면회를 오셔서 당신네 딸같이 걱정을 하시며 곧 병원을 한 번 갈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아가에게도 늘 말하지만 당신과 나같이 착하고 열심을 내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질 겁니다. 당신, 다른 생각 말고 내 출산 준비 원래 계획대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검찰에선 아직 기소를 안한 것 같아요. 공소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구속영장과 별반 차이없이 제출되어 왔지만 이번에도 조사내용과 상관없이 작성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특히 나쁜 감정일 때에는 되도록 표현않고 돌려서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 나 스스로도 여겨왔는데 사실과 다르게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진행되는 대화방식에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아니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났던 겁니다. 어쨌든 검치는 조사내용이 어땠던지 간에 제 마음을 아주 심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사실 그냥 피곤하게 이리저리 말고 뛰든지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적응이기도 하겠구요. 우리 아기와 함께 가꿀 수 있는 희망찾기를 시작한 덕이기도 합니다. 당신과 합

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 어떤 형태이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너무 조바심내지 않으렵니다.

95년 12월19일

민주노총 유구영씨 간암 판정 투병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정책부장 유구영(38)씨가 간암 중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다. 유씨는 고려대를 중퇴한 뒤 80년대 초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영동포기계공단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고,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정책실장을 거쳐 민주노총준비위 시절부터 정책실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80년대 중반에도 간이 안 좋아 치료를 받은 뒤 곧 회복된 듯싶었으나, 지난 1월초 진료에서 간암 중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유구영동지 완치를 위한 후원인단」(대표 진방주목사)을 구성하고 유씨의 체유를 위한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들이 10만원씩 모금하는 것을 비롯, 조합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인단은 오는 15일(목) 오후6시30분 기독교연합회관 4층 강당에서 유구영동지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매주 일요일 오후5시 영동포 산업선교회(성문밖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성금 모금구좌>
국민은행
031-01-0410-415
권용목 민주노총

국민은행
807-01-0249-355 유구영

녹색교통, 대기오염 측정 시민들 모니터 지도 제작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지도를 제작,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녹색교통운동」(이사장 김관석, 녹색교통)은 환경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이 자각하고 스스로 환경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며 전국에서 모니터 요원을 선발, 자신이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은 우선 12일까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중 1백여 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했고, 14,15일 이틀간 오염도 측정에 나서게 된다. 모니터 요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나 조경코스 등 실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공간을 택해 오염도를 측정하게 된다.

녹색교통 사무국장 임삼진(36)씨는 "환경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도 환경단체나 정부의 정책으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 하고 이를 시민들 스스로 체유를 위한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들이 10만원씩 모금하는 것을 비롯, 조합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인단은 오는 15일(목) 오후6시30분 기독교연합회관 4층 강당에서 유구영동지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매주 일요일 오후5시 영동포 산업선교회(성문밖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녹색교통은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오염도를 측정, 내년 초 전국대기오염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문의: 전화 02)720-7879

<광고> 안기부 간첩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대회

때: 2월14일(수) 정오12시
곳: 종로 탑골공원
주최: 총선시기안기부 간첩사건 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747-43645)

<이달의 주제-주거권>
각국 정부는 현재 철거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위 제50차 회의(93년) 결의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광주지역 사회·여성단체들이 고애순씨 문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고씨의 태아사산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씨의 태아사산은 전남 담양도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담당검사, 재판부, 광주교도소에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와, 고씨를 구속한 이용성 검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태아살인"을 저질렀다며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가 평소 "시국관련 사건에 대해 높은 형량을 성을 발표했었다. 대책위는 "이런 사태는 우연사이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인권유린을 절망적으로 도주여려가 없고 사회적으로

의 권리인 모성애마저도 파괴하는 무차별 구속과 인권유린에 강력히 맞설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담당 검사와 판사의 고소·고발과 국가를 상대로 고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률적 대응외에도 대중홍보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론형성도 펼칠 것이다(2면에 관련기사).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석자 60여명은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을 향의방문, 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아닌 이상 출산후 수감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겨울에 임신부를 수감하고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교도소내 열악한 환경개선과 여성 수감자의 모성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담당 검사와 판사의 고소·고발과 국가를 상대로 고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률적 대응외에도 대중홍보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론형성도 펼칠 것이다(2면에 관련기사).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석자 60여명은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을 향의방문, 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간첩조작 중단"등 촉구 사회각계대표 1백명

사회 각계 대표 100명이 "총선을 앞두고 간첩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며 이를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 청와대에 보냈다. 이창복(전국연합 의장), 김승훈(신부), 이돈병(변호사)씨를 비롯한 재종교, 학계, 문화예술, 인권, 재야단체 대표 100명은 "최근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

민주인사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인권유린 사건조작 자행하는 국가안전기획부 규탄 △안기부의 간첩사건 조작수사 중단 △모든 양심수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각종 공안탄압 사례 및 안기부의 간첩조작 사건을 폭로 규탄했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각계대표 100명의 항의서한을 가지고 청와대 향의방문에 나섰으나 종로 1가에서 경찰에 저지당했다. 항의서한은 우편으로 청와대에 발송했다.

대책위는 현 시기를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안정국"으로 규정했다. 최근 허인회, 박종렬씨 등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과 과거 사노맹 및 민민학련 관련자, 범민련 회원, 꽃다지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자체 참패후 긴장한 집권세력이 총선에서의 패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거때만 되면 등장하는 간첩 캠페인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에 대한 불고지 혐의에 대해 보냈다. 이창복(전국연합 의장), 김승훈(신부), 이돈병(변호사)씨를 비롯한 재종교, 학계, 문화예술, 인권, 재야단체 대표 100명은 "최근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

북한 수재민 돕기에 함께 합시다

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백50억 달러!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이 사상 최악의 수재를 당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와 종교단체가 벌이고 있는 북한 수재민 돕기에 따뜻한 동포애와 인권의식으로 함께 합시다.

전국연합 모금구좌
우체국 014001-0016219 예금주 최홍재

<특집>고에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1) 교도소에서는 여성이기를 포기하라

대책위 구성에 이르기까지 지난 8일 저녁 마지막으로 기사를 점검하고 있던 때, 느닷없이 날아들었던 고에순씨 태아 사산 사건을 접하고 편집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면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고씨와 가족들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한때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성애마저 짓밟은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는 점과 이를 계기로 여성 수감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기사화하기로 했다.

사건보도가 나가자 <문화일보>와 <한겨레신문> 등 일간신문들이 이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광주지역의 사회·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14일 20여 단체는 「고에순씨 태아사산 및 여성수감자 모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런지 아직은 정확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회적 관심 밖에 벗어나 있는 여성 수감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일정 정도 개선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기를 바란다.

이에 여성 수감자의 교도소 수형생활 문제를 간략하게 짚어 본다.

여성재소자 수용시설 태부족 재소자 통계는 국가 2급비밀로 처리되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정확한 실상을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에 나타난 통계를 살펴보면 그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8월31일 현재 전체 재소자는 총 5만9천3백여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기결수는 3만2천6백여명, 미결수는 2만6천7백여명이었다. 지난해 5월말 현재 여성 재소자는 3천2백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재소자는 매년 여성 범죄율이 7% 이상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94년 5월말 현재 여성 재소자가 2천5백명인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28%나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여성의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의 5%이었던 데 반해 2천년까지 15%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재소자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법무부는 6백명 수용규모의 청주여자교도소를 8백명 수용 규모로 늘리기 위해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여성 재소자들을 수용할 곳이 모자라 교도소에 수용시설이 아닌 교도소내 교회나 창고 등을 개조해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중인 은수미씨가 몸이 아픈 것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창이 없는 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도 수감시설이 부족한 강릉교도소측이 창고를 개조해 수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내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는 말이 여자교도소지 사실은 청주보안감호소에 그대로 여성 재소자들을 수감한 것일 뿐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여성재소자들은 신체적, 생리적인 문제로 인해 감옥생활에 남성보다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단식 지난해 1월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여성 재소자 49명이 3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절전시간의 보장, 목욕시간 연장 등 처우개선이었다. 당시 함께 단식농성을 했던 최영신(28, 전 광주전남연합선전부장)에 따르면, "변화시간이 짧아 면회는 재소자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목욕도 겨우 10분 정도의 시간에 끝내야 하는 정도였다"며 농성을 했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리적인 고통이 더욱 컸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추운 겨울에도 "땀"을 뺀 채로 해야 한다든지, 속옷만 입고 자는 여자 사동심야 근무자가 남자 교도관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여성을 겪는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단식

지난해 1월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여성 재소자 49명이 3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절전시간의 보장, 목욕시간 연장 등 처우개선이었다. 당시 함께 단식농성을 했던 최영신(28, 전 광주전남연합선전부장)에 따르면, "변화시간이 짧아 면회는 재소자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목욕도 겨우 10분 정도의 시간에 끝내야 하는 정도였다"며 농성을 했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리적인 고통이 더욱 컸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추운 겨울에도 "땀"을 뺀 채로 해야 한다든지, 속옷만 입고 자는 여자 사동심야 근무자가 남자 교도관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농성 이후 교도소측은 복도 등에 마련된 난로에 물을 데워 '땀물'을 하게 해줬고, 목욕시간도 다소 연장했으나, 여성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었다고 최씨는 전한다.

지난 89년 방북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90년부터 2년여 동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임수경(28)씨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했다. "말이 여자교도소이지 여성들을 위한 어떤 배려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불교단압 중단 등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동)는 14일 성명

을 발표하고, △불교단압을 중단할 것 △비전향장기수복송에 적극 나설 것 △불안단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민생문제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원목사, 한교협)는 1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85년 9월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복역중인 김성만(39)씨 등 4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교협은 탄원서에서 "5공 독재정권의 강압통치의 희생물이 되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면서 "11년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김씨와 양동복, 황대권, 강용주씨 등 4명을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연대스티」가 91년 양심수로 선정됐고, 93년 유엔 인권위 자의적구급에 관한 실무분과가 김씨와 황대권씨에 대해 자의적구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씨 등은 지난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속,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 20년-무기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국제연대스티」는 김씨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두 양심수로 선정, 정부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

간암투병 유구영씨 후원의 밤

- 일시: 15일(목) 오후6시 30분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강당
- 주최: 유구영동지 원지를 위한 후원인단

<이달의 주제-주거권>

각국 정부는 현재 철거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위 제50차 회의(93년) 결의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살인가스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사망

군산·옥구 주민들 동양화학 이전 촉구

생존위협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화학공장설립을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요구가 묵살된지 5년만에, 문제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 동양화학 주식회사(회장 이회림) 군산 TDI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이안구(36)씨가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장철거운동이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다. 지난 91년 6월 설립된 이 공장은 TDI(폴리우레탄, 스펀지 합성 피혁 등의 제조 원료)와 염산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독 물질인 포스겐 가스 등을 주원료로 하고 있어, 유독 가스의 배출 및 폭발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 이에 군산지역 주민들은 △포스겐이 12차 대전 당시 독가스로 사용되

었던 가스이며 △공장이 인근 구밀집지역에서 겨우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동양화학이 89년 9월 인천과 90년 6월 군산에서 암모니아와 염산 누출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이유로 줄곧 공장의 안전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90년엔 군산지역 성인 인구의 60%가 넘는 10만명이 공장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13, 14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환용(군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씨는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군산의 환경분쟁문제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

역주민과 회사 양측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주교 군산옥구지역사목협의회」는 「동양화학 폭발사고 특별대책위」(위원장 황인규 신부)를 구성하고, △공장 철수 △공장을 허가해준 담당자 처벌 △이회림 회장 구속 △유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 시민연합」도 △안전지대로의 공장이전계획 제시 △안전시설 확보시까지의 공장가동 전면중단 △정확한 사실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관련, "사망자가 부주의했던 점이 조사과정에 드러났지만, 사고원인이 수소용해조의 기계적 결함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한 뒤 "회사책임자들이 조사를 피하려 하지만, 조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은 유족에게 2억5천만원의 보상을

<포스겐 가스란?>

1,2차 세계 대전 당시 수백만 명을 학살한 독가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원료로 매우 낮은 온도(7도)에서 끓기 때문에 공기중 노출되면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 폭발이 일어날 경우 지난 84년 인도 보팔시 가스 대폭발 사고와 같이 반경 40km내의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위력적이다.

<동양화학 가스누출 일지>

- 89. 9.23 : 동양화학 인천공장에서 한밤중에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인근 주민 2만여명 긴급 대피
- 90. 6.5 : 시민들의 반대 속에 건설 중이던 동양화학 군산 공장에서 염산 누출로 군산 임해공단 내 노동자들이 구토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킴
- 91. 9.7 : TDI군산공장 물탱크 내 잔여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탱크 내의 오염 물질(TAR)이 공장 주변에 확산, 인근 산복동등 6개 부락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11억원 피해보상금 지급
- 96. 2.10 : 아황산 나트륨에 물을 섞는 작업중 폭발 사고로 이안구씨 사망

구독료 장기 미납 독자들에게!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구독료를 충실히 납부하셨으나, 일부 독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부득이 구독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독촉장을 받으시고 오는 3월말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구독료를 납부치 않으면 <인권하루소식> 발송을 중단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로용지상에 기재된 구독료 납부금액에 착오가 있으면 즉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발행 22일!

<인권하루소식>은 설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1일까지 쉬고 22일부터 정상 발행합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집>고에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제23조 ① 여자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내에서 태어난 경우가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자격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 모친이 보살필 수 없는 경우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 피구금지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위에 적은 '피구금지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지난 55년 열린 제1회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규칙은 지난 40년 동안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인 최소기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산전산후 시설 전무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재소자의 처우문제는 이에도 훨씬 못 미친다. 교도소 내에 산전 및 산후의 간호와 처치를 위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된 곳은 하나도 없다. 유아시설을 갖춘 곳은 더욱 없다.

모성을 보호하려는 배려가 있었다면, 고에순씨의 경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보통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며 그럴 경우 교도소에서는 산모들끼리 한방에 모여 살게 하는 정도의 배려를 해준다. 임신부나 출산모에 한해 방안에 난로를 놓아주는 것 정도가 교도소 배려의 모든 것이다. 고에순씨의 경우 광주교도소 내에서 검진을 했다는 것은 초음파 검사로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검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중과 키를 재는 정도의 신체검사일 뿐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조산부를 들 수 있다고는 하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일반 재소자들을 진료할 전문의마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수인 임신부를 위한 조치를 할 리가 없다. 고씨의 경우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이틀 전 단 한 차례 외부 병원의 검진을 받았을 뿐이다.

축농증에 감기와

영등포구치소에서 지난 93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6개월간 수감되었던 김은주(28)씨는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재소자가 아프다고 하면 담당교도관이 신청을 받아 의무과에서 약을 타다 준다. 병중에 입원하는 경우는 아주 죽을 정도가 아니면 어렵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39개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에 배치된 의사는 55명으로 1개 교도소에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95년 8월 31일 현재 3천8백45명의 재

소자가 수감되어 있었는데, 의사는 4명이었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재소자가 2천2백43명이었던 비해 의사는 고작 2명이었다. 의사들은 교도소에서 위탁받아 의무과장 등의 직함을 갖고 진료료를 전담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외부에서 개업해 있거나 다른 병원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 1주일에 한 번 정도 교도소에 들러 환자를 볼 뿐이다.

약사는 전국 교도소에 단지 3명뿐이다. 이런 형편이니 '축농증에 감기약'을 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예산 부족으로 중환자들은 교도소에서 손댈 수조차 없었다. 지난해 광주교도소(소장 민경화, 54)에서는 진료료를 받지 못해 2명의 재소자가 죽어 나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정부 통계로도 한해 평균 20~30명이 죽어 나간다.

통제 위주 행형 벗어나야

교도소등의 의료문제에 대해 박찬운변호사는 "재소자를 구금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최소한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박변호사는 "행형법에 임신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교도소장이 이를 판단, 정기검진을 시행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해 이 사건에 교도소측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우리나라 행형수준에서는 일반 재소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나 인력, 예산확보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재소자를 일방적으

로 통제하려는 교도행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소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 수해동포 캠페인 전국연합, 주요도시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6-17일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11개 주요 대도시의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설을 맞아 수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서로 돕고 그 피해상황을 홍보한다.

한편, 전국연합은 지난 3일 북한 수해동포 지원 1억 원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금신청'을 했으며, 오는 23일 그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세계주거회의 참가신청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대준 등 3명)는 오는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주거회의에 참가할 개인 및 단체의 신청을 27일까지 받고 있다. UN이 주최하는 이 회의는 주거, 사회복지 문제를 주제로 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도시정상회담'이라고도 불린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673-3031~3.

민변 주소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은 오는 22일 사무실을 이전한다. 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이며 전화와 FAX는 종전과 같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각국 정부는 현재 철거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신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위 제50차 회의(93년) 결의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울산시 한국티타늄 공장 증설 허가 물의

환경단체등, 공해공장 허가 철회 등 강경대응 모색

울산시가 7년여동안 미뤄온 대표적인 공해공장에 대한 허가설 연휴 직전 내줘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시장 심원규)는 설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대표적인 공해업체로 알려진 한국티타늄에 대한 울산시의 공장증설 허가를 내줬다. 울산시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두 차례의 승인 보류와 시의회·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시가 장담해온 환경도시 건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추후 온산공단에 공해공장 무더기 입주사태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은 공해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티타늄은 제조과정상 엄청난 양의 폐황산·폐석고가 발생하는데다 황산가스가 다량으로 유출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울산지역 대기 및 수질오염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한국티타늄에 대한 공장증설을 승인하면 공해저감대책 확보 등 8개항의 환경 관련조항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건축을 허가했다.

이같은 와중에 한국티타늄은 지난해 3월 공장권리

고 처리 방안철저 △오·폐수 전량관 온산읍내 설치 △주민취업 및 복지대책 이행 △액화천연가스 사용 △환경오염유발시 가동중단 △폐석고·황산철 처리실적보고 △주민협의체구성 △오니처리 용 자가매립장확보 등이다. 이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한기양)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울산시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공해공장을 명절 앞에 허가한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비열한 행위"라며 "대책위원회를 재가동해 공장허가 철회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경실련과 YMCA, YWCA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티타늄 허가취소 △환경조례 재정등을 울산시에 요구하는등 공장허가를 둘러싼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티타늄은 지난 90년 말 온산공단에 후처리 생산공정(루타일형)에 대한 건축허가를 당시 울산군으로부터 받았으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운동으로 공사착공을 미뤄왔다. 이같은 와중에 한국티타늄은 지난해 3월 공장권리

를 위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기초파일공사를 강행하다 시민단체의 현장농성 사태가 빚어지자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 전처리공정(아나타제형)의 공장을 추가하는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울산시에 냈다.

지난 90년 12월 한국티타늄의 건축허가가 나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이듬해인 91년부터 「공해공장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5년여동안 줄기차게 입주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공동대책위는 한국티타늄의 입주문제에 대해 민선시장이 공해공장 반대등을 공약으로 당선되자 "한국티타늄 입주문제에 대한 시급성"이라며 건축허가 철회를 희망해 왔다. 03312126-5421

민중탄압 공동항의 제안 고 신연숙 비대위

「철거민 고 신연숙씨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 비상대책위」(신연숙 대책위)는 17일 사회단체등에 공문을 보내 강제철거 중단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과 이인제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의 편지 발송을 제안했다. 신연숙대책위는 이 공문에서 "수지면 강제철거 사건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어온 제벌위주정책이 부른 필연적인 사건"이라며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과 민주기본권의 압살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숙대책위는 지난 2월5일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에서 발생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신연숙씨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오늘로 18일간 동수원 병원 영안실에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의: 03312126-5421

구독료 장기 미납 독자들에게!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구독료를 충실히 납부하셨으나, 일부 독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부득이 구독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독촉장을 받으시고 오는 3월말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구독료를 납부치 않으면 <인권하루소식> 발송을 중단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로용지상에 기재된 구독료 납부금액에 착오가 있으면 즉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납부는

지로 번호: 7618848

주요 공판 안내

□ 22일(목) 장진성(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11시, 신진강중숙(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4부, 418호, 2시, 신진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생명나눔실천회 성명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김법장)는 15일 고에순씨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교도소와 담당검사, 재판부는 태아살인 방조죄를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임신부를 무방비상태로 수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아무 죄도 없는 한 생명이 죽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간접살인"이라며 관련자들의 비인간성을 비난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94년 3월 설립된 불교계 단체인 장기거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성폭력 상담원 모집 성폭력상담소 3,4월 교육

「한국성폭력상담소」(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제8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받을 여성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여성학·상담학 강의, 상담 실습 과정으로 이뤄지며, 강의를 받은 후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원으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3월11일부터 4월18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5시간씩 진행된다. 초대졸 이상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V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가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95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 95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 5.18특별법 관련 기사 등

·한정판판매 값: 5천원

(단, 독자가 아닌 분께는 1만원에 판매)

의 주부등 일반여성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문의 576-5513,4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1일 친구 안아무개씨(당시 24. 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측 증거 제출과 관련 길게는 1년여동안 재판일정을 연기, 1심기간을 포함해 3년6개월간 재판을 끌어왔다. 이피고인은 지난 92년 10월 취업에 실패한 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친구 안씨의 집에서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 흥기로 안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간/인권/흐름

(96년2월12일부터 2월18일까지)

<12일(월)>

전북도내 수사기관 긴급구속장 남발, 95년 162건 영장기각 당해/서울지법, "사노맹사건 구속자에 변호인 접근 불허" 취소 결정

<13일(화)>

유럽연합, 노동자단결권 등 사회조항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잠정권 제한" 반발/민주노총,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 금지·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ILO기준 따라 개정 촉구/노동부, 일반인도 "위험시설 안전점검 청원 가능" 밝혀/철거민들, 서울시장에 '강제철거 중지' 공약 실천 촉구

<14일(수)>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에순씨 대책위 구성, 모성보호등 여성 재조사 수감생활 개선 촉구/사회각계 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 등 항의서한 청와대에 발송/전남도경, 조선대 휴학생 박규현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대우조선 노동자 59명, 유기용제 중독 중세 밝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복역자들 석방 탄원/불교인권위, 불교단압 중단 등 촉구 성명

<15일(목)>

판, 검사 지망 사법연수원생에 안기부 과잉 신원 조사와 사생활 관련 조사로 물의/환경분쟁조정위, "도로건설 소음피해 3천4백여명 배상" 판결

<16일(금)>

농현, 전농총 등 16개단체 "쌀자급" 캠페인 나서, 정부에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지원 요구/춘천지검, 불법구금 막기 위해 구속영장처리 시간표제 도입/80년 해적 언론인 1백여명, 언론통폐합 주도 이상재씨 등 6명을 내란방조 혐의로 고소

<해설>

지난주는 설연휴가 시작되었던 관계로 다른 주보다 인권 사건이 적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난 연초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인권피해자들의 병원 영안실 농성이 설연휴 기간에도 이어져 안타까운 연휴가 되었다. 다른 이들은 설쇠려 고향으로 감에도 영안실을 지켜야 했던 이덕인, 장현구, 신연숙씨의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착잡했을 심정은 말해 무엇하랴. 이들은 설연휴 기간에도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후 활동대책을 세우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10여일에서 80일 가까이 이들이 가족의 장례마저 미루며 영안실 농성을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덕인씨의 경우 노점철거 과정에서의 시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장현구씨의 경우 고문경과 학교족의 책임이 해결되지 않았고, 신연숙씨의 경우 강제철거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장기 농성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은 관련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외 책임을 느껴야 할 이들이 계속 책임을 회피해 죽은 이의 가족마저 인권침해를 당하도록 해야 하는가.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주거권>
각국 정부는 현재 철거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위 제50차 회의(93년) 결의문중-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엔,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목사, KNCC)는 오는 3월 열리는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다뤄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결정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23일 브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과 일본 하시모토 유타로 수상에게 서한을 보냈다. KNCC는 갈리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국제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일본정부에게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경솔히 받아들여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인, 이웃나라를 침략한 것이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유

엔이 나서서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하시모토 수상에게도 편지를 보내 유엔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KNCC는 이 편지에서 일본이 유엔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을 거부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경솔히 받아들여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인, 이웃나라를 침략한 것이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유

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의 유치장 설치와 관련해 안기부의 공개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한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서울지법 오철석 판사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장일(75)씨가 낸 준항고 결정에서 "구금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혀 그간 안기부의 불법행에 제기를 막았다(<인권하루소식> 95년 12월16일자 참조). 안기부는 이 점을 감안, 불법구금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안기부내에 유치장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현행법상 유치장 설치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쿠마라스와미씨는 지난해 7월 한국, 필리핀, 일본 등을 방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조사를 펼쳐 그 결과로 지난 6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심의하고 일본정부에 보낼 권고안을 결의하게 된다.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 "잘못된 인권침해 관행, 시정하기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밀실수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안기부내 사업 및 예산집행, 인사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기원 변호사(민변)는 "유치장 설치가 위법하진 않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검찰의 감찰권행사에 위배가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된다면 또 다른 밀실수사시비와 고문시비 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은, 피의자 권리와 가족의 자유로운 면회, 변호인 접근 보장 등의 공개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말까지 구독료 장기 미납자 완납을!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다수의 독자들은 구독료를 충실히 납부하셨으나, 일부 독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부득이 구독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독촉장을 받으시고 오는 3월말까지 아무런 연락없이 구독료를 납부치 않으면 <인권하루소식> 발송을 중단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로용지상에 기재된 구독료 납부금액에 착오가 있으면 즉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납부 지로 번호: 7618848

"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127회 민가협 목요일집회 열려

127회를 맞은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22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7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는 범민련과 관련, 작년 11월 구속된 박석률씨의 부인 신선아(30)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와 구미유학생 간첩사건으로 20년 형을 받고 복역중인 황대권(42)씨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노래패 <꽃다지>가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희망의 노래 4집에 수록된 '동지'를 불러 더욱 활기찬 집회가 되었다. 안우회 민가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김영삼정권을 문민독재라고 단정하며 "지난날 김영삼씨가 민주위 활동을 하면서 민가협이 어머니들에게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장담하더니 양심수 석방은 커녕 지금도 4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다며 비판했다.

신선아씨는 "남편은 79년 박정희정권의 유신독재반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아 10년만에 가석방된 상태였다"며 "범민련

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가석방 기간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을 가산하여 징역을 살 위함에 처했다"며 울먹였다. 또한 그는 민중을 탄압하고 피를 흘리게 했던 전두환씨는 따뜻한 병원에서 생환하고 있지만 양심수들은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급식을 당해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으로 현정권이 과거 청산과 민주화를 원한다면 군사정권에 반대해 구속됐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하여야 하고 전·노 전직 대통령은 확실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황대권씨는 편지에서 "지난 8·15 특사때 많은 기대를 하셨던 어머니께서 김정권의 3주년 기념 특사때에도 기대를 하실 것 같아 걱정"이라며 "김영삼정권에 대해 더 이상의 희망과 기대를 갖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석방되는 그날까지' 꽃다지, 거리공연 계속

노래패 <꽃다지>가 지난 2월8일부터 '석방되는 그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V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가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95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주요내용: 95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5.18특별법 관련 기사 등

· 한정본판매 값: 5천원

(단, 독자가 아닌 분께는 1만원에 판매)

까지'라는 주제로 시작한 거리공연이 22일로 15일째를 맞고 있다. 탑골공원에서 매일 낮 12시30분에서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며 시민들에게 예술활동조차 침해 받는 현실을 비판하고 예술인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안정현(28, 꽃다지 가수)씨는 "김영삼 정권이 총선을 겨냥해 저지르고 있는 공안단위의 하나"라며 "이것은 꽃다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민중예술인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마을> 등과 연계해 계속적인 거리공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노래책 '희망의 노래' 속에 들어있던 37곡의 통일 관련 노래로 인해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된 이은진(30, 꽃다지 대표)씨와 원용호(31, 민맥대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현재 재판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인권하루소식> 2월8일자 기사 참조).

○행사와 동정○

- 96 노동시민사회단체 사회개혁 공동선언
 - 일시:23일(금) 오전11시
 - 장소:민주노총 사무실(☎ 765-2010)
 - 내용:사회개혁 공동선언 발표/15대 총선 공동대응을 비롯한 후속계획 발표 등.
 - 주최:정실련,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전국연합 등. 6개 단체
- 심포지움-한국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일시:24일(토) 오전10시
 - 장소:홍익대 교수세미나실
 - 내용:1부-분단과 지배구조, 그리고 민주주의/2부-90년대 한국자본주의/3부-산별노조와 화이트칼라 노동자/4부-사회복지와 참여민주주의
 - 주최:한국사회과학연구소(☎ 739-2091)
- 교육-렐드 네이더와 공익소송(황승홍: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일시:24일(토) 오전10시
 - 장소:참여연대 사무실
 - 참가비:2천원
 - 문의:☎ 796-8364
- 전국연합 제5기 정기대의원 대회
 - 일시:25일(일) 오후2시
 - 장소:연세대 상경대 경영원 강당
 - 문의:☎ 747-4364
- 초청강연회-필리핀의 경험:마르코스와 그의 일가, 친자들의 부정부패 환수에 대하여(Jovito R. Salonga 필리핀 전상원의장)
 - 일시:27일(화) 오전10시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내용:필리핀 마르코스 해의 도피재산 환수소송 운동 등.
 - 주최: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769-8364)
- 3·1절 기념 및 정대협 5주년 토론회-96년 정대협 운동의 과제와 특별법 제정
 - 일시:28일(수) 오후3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 강당
 - 발제:정대협 운동과 성과(이효재)/정대협 운동의 과제와 특별법 제정(지은희)
 - 문의:☎ 365-4016

<이달의 주제-주거권>
각국 정부는 현재 철거위험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위 제50차 회의(93년) 결의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2일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10일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과 윤경한(43, 의장3부)씨 장례가 회사측과 보상 문제의 타결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사망 26일만에 가족장으로 치뤘다. 윤씨는 12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고,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2녀가 있다. 회사측은 윤씨 장례식 전까지 산재를 인정치 않다가 최근 유족 산재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10일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과 윤경한(43, 의장3부)씨 장례가 회사측과 보상 문제의 타결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사망 26일만에 가족장으로 치뤘다. 윤씨는 12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고,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2녀가 있다. 회사측은 윤씨 장례식 전까지 산재를 인정치 않다가 최근 유족 산재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중노조는 "현중의 노동자는 평균 2일에 1건씩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산재 예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중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산안부장) 김복동(33)씨는 "그동안 회사측에게 산업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한 안전 미비 시설에 대한 개선 촉구 등의 노력을 했으나 허사였다"며 "한라중공업에서처럼 작업도중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노조에 작업중지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대박은주(33) 사무국장도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비롯해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며, "도시민민에 대한 김정권의 폭압적 생존말살에 대해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연도	산재예방자수	사망자수
1991년	128,169명	2,299명
1992년	107,435명	2,429명
1993년	90,288명	2,210명
1994년	85,948명	2,678명
1995년	78,034명	2,662명

자료: 노동부

구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노동자	64,314	62,848	65,489	63,030	62,907
재해자	3,055	2,155	1,550	1,293	1,566
사망자	25	16	30	23	34
재해율	4.75	3.43	2.37	2.05	2.49
제조업재해율	1.87	1.69	1.48	1.35	1.27

노동부 발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전산통계(94년 사업장수 525개소)

지만, 회사는 실제로는 사내 교통단속 정도만 하고, 매년 단체협상 때마다 노조측에서 제기하는 '작업중지권' 등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노동부가 발표한 95년 산업재해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7백89만4천명 중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수는 모두 7만8천34명(사망 2천6백62명)으로 산재를 0.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도 4천7백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고 신연숙씨 비대위, 결의대회 가져

「철거민 고 신연숙씨 학살 책임자 처벌 및 민중 생존권 쟁취 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남경남 등, 대책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앞에서 1백여명의 철거민과 노동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공사 용정투쟁을 벌였다. 대책위는 "도시민민에 대한 김정권의 폭압적 생존말살에 대해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대회를 마치고 동수원병원까지가 주요한 문제로 꼽는다. 지난 1월25일 노조 제10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김정국 사장은 "산재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노력하여 산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칙적인 말을 되풀이했다. 하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8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96' 사회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경제의 상품으로 대치시켜 버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제 삶의 질과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공동의 지향으로 복원시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당한 노동권의 실현, △경제정의의 구현,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남녀 평등 구현,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토대의 건설 등의 사회개혁과제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구제적 개혁과제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 제한조항의 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경정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정부는 23일 김영삼 대통령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부영 전의원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중인 석달운(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반면에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천기호 전치안감, 수피사건의 권병식 전도로공사 사장과 이경

희 전 안산서부지역 관리공단 사정 등이 포함돼 지난해 8.15 특사와 같이 부정비리 사범은 포함시켜 재야 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지금 감옥에는 3백52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고, 이들 중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68)씨를 비롯한 20년이상 복역한 초장기수가 23명, 7년이상 복역중인 장기수가 64명에 이른다”면서 “4.11 총선을 겨냥해 보수세력과 야합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단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옹당 죄과를 치루어야 할 각종 비리 관련자들에게 대해서는 시혜를 베풀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사면권)을 일방적이고 독

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애순씨 대책위, 광주교도소에 질의서 전달

고애순씨 태아사산 및 이성수감자 모성에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향자)는 23일 광주교도소를 방문, 고애순씨에게 취해진 의료조치와 교도소 내 입산부를 위한 특별조치 및 광주 교도소 내의 의료실태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정향자씨는 “임산부에게 은둔방을 제공하고 외래진료를 실시해 주는 것에 대해 교도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히고, “고애순씨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변호사와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간행물 ○

- 시민을 위한 작은 책2-『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
 - 주요내용: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이시재)-시민사회와 시민운동/새로운 시민운동의 과제. 지구시민사회운동과 한국시민운동(유재현)-새롭게 떠오르는 시민운동/세계시민운동의 동향/한국시민운동은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값 2천5백원. 76쪽.
 - 엮음: 크리스찬 아카데미. · 출판사:한울
- 『시민과 변호사』 2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
 - 주요내용: 잘못된 사법개혁-95년 소위 ‘사법개혁’이 법학 및 법학교육에 미칠 악영향(백광훈, 김지옥)/5.18사건전말(하종대) 등. 값 4천원. 243쪽.
- 보고서-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1996
 - 주요내용: Human Rights Watch-Africa, Americas, Asia, Helsinki, Middle East/The Children's Rights Project/The Free Expression Project/The Women's Rights Project 등. 388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 89호-전국연합
 - 주요내용: 신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가동민)/2002년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의 전망(홍진표)/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한호석)/유엔평가단 북한 수해피해보고서 등. 62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8호
 - 주요내용: 유엔인권위원회 상황보고-UN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군 위안부 범죄 개인배상 권고/동경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반대 국제회의 참석 보고 등. 12쪽.

<인권하루소식> 합본 V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가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 순가쁘게 진행되는 95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주요내용: 96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 5.18특별법 관련 기사 등

· 한정판판매 값: 5천원
(단, 독자가 아닌 분께는 1만원에 판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민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전두환씨의 첫 재판이 열린 26일 오전 9시30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회원 50여명은 서울교도소에서 모여 서울지법 앞까지 1백여 미터를 행진하면서 “5.6공 군사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쿠데타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서울지법 앞에서 ‘5.18내란 학살자 전원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전두환씨를 위시한 쿠데타 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특히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박준병씨 등은 총선출마기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5.6공 완전청산과 민주개혁에 대한 열망을 등신 채 냉전수구세력과 구여권 세력과 안주, 야합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80년 국보위 참가자에 대한 인적 청산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약법 등을 철폐할 것 △12.12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강화하고 민생민권문제와 함께 환경, 교육, 교통, 보건 등의 분야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5기 의장단에는 4기 의

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 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지난 25일 연세대학교 상경대 경영원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3백 80명이 모인 가운데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95년 사업평가와 96년 사업계획과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국연합의 96년 주요사업 △5·6공 완전청산 △통일 관련 단일행사 추진 △주한 미군 기지반환운동 등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제5기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은 △민족민주운동의 대중화를 이룩과 연합전선조직 강화 △전국연합의 자기혁신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결의문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대중조직 토대를 함께 환경, 교육, 교통, 보건 등의 분야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5기 의장단에는 4기 의

장단 이창복, 천영세, 윤영규 씨가 연임되었다. 현재 전국연합은 전교조, 한총연, 전농 등 28개 소속단체와 민주노총, 민예총, 민교협, 민기협 4개 참관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정일 선물’ 기사에 문호근씨, 언론중재 신청

지난 24일 고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호근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서울신문등이 23일자 ‘문익환목사 부인 김정일 선물 반입 기도’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중재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문씨는 중재 이유서에서 서울·경향신문, 세계일보가 보도내용 중 ‘김정일 선물’ ‘김일성 서적’ ‘김정일의 선물인 북한계 우황청심환 2갑...’ 등 10종 85점을 몰래 들여오려 한 것을 적발’ ‘판

문점을 통해 들어 올 수 없게 되자 일본으로 보내’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인 김포세관에서 압류당한 물건은 김정일의 선물이 아니고 김일성 서적도 없었다”고 밝히고 “물품 목록도 사실과 다르고 김철과 통일원에 신고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씨는 김포세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 간사이한국정치법위원회

일본의 「간사이한국정치법규원연합회」(구원회)는 23일 성명을 발표, “특사에 개인한국인정치법을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는 등 김경삼정부는 다시 기만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한국정치법규원위원회」 「민권협」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구원회는 “과거청산을 한다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회색양인 정치법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법원에서 최초로 남녀 성차별 호봉체계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승진상의 차별을 문제로 여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용상의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학(총장 송자)은 지난 93년 5월 단체협약의 중요 사안이었던 입시시기가 같은 남녀노동자의 호봉 차이를 '군 경력으로 인정'하고 같은해 10월 남성 노동자의 군 경력을 호봉에 계가산함으로써 남녀간 성차별 호봉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김은수(32, 도서관 사서) 씨등 10여명은 노조와 총무처장을 면담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시정요청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어 김씨 등은 94년 7월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부지방사무소(근로감독관 안계형)는 연세대학을 평등법 위반혐의로 수사하여 서울지방 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법원은 올 1월 연세대학에 대해 약식명령(1백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정양희(36, 공용평등추진본부 사무국장)씨는 "남녀간의 차별입금이 최초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고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약식명령이긴 하나 최초로 법 해석이 내려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대측에서는 법원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호봉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승진상 성차별행위로 고발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장 이기성) 황정미(30, 집단 에너지사업부)씨 등 6명이 13일 회사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은 92년 평등법 위반시정요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해 시정조치 통보를 받아 여직원들이 승진되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95년 정기승진시 승진대상 여성 10여명에 대해 임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결과를 발표, 이에 노조는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여성의 근무기간은 승진과 상관 없다"며 지난번과 반대되는 의견을 통보했다.

황정미씨는 "노동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던 동료 직원들이 22일 회사의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해 혼자 남게 되었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투쟁을 하는 만큼 꼭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란?>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이 제정되었고, 91년에 「남녀행위 분리채용금지지침」이 내려졌다. 93년에는 제2금융권과 대기업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지침이 내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남녀고용에 대한 법적 발전은 사무직 여성노동자에게 결혼퇴직제의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등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여 남녀·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 나아가 승진의 성차별 철폐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평등법은 별칭조항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법적 효력이 미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간/인/권/흐/름

(96년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20일 (화)>
멕시코 정보기관인 연방사법경찰 총수 고문·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21일 (수)>
울산시, 설연휴 이용해 공해업체인 한국티타늄 공장증설을 허가해 물의/고 신연숙씨 비대위, 제 사회단체들에게 강제 철거 중단등 공동항의 제안/두산기계, 조합원이 정신교육 참여를 거부한다며 조합본부 5명을 해고, 23명 징계

<22일 (목)>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에 재야단체,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전교조,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완전 복직과 전교조의 법적 인정 촉구 기자회견/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 병원들, 산재병원 지정 기피해 물의

<23일 (금)>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 「96, 사회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김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복권, 양심수 배제된 24명 대상/현대중대우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의 노동자들 고노동 유기문제에 노출/한미행협 개정, 미국측의 부정적인 자세로 진전 없어

<24일 (토)>
15개 여성·사회단체 구성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 올해 안에 법제정운동을 본격화하기로/철거민과 학생 3백여명, 신연숙씨 사건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대법원 형사2부, 딸 성폭행 의혹 아버지 고소발 없는 성폭력법 처벌 못한다 판결

<25일 (일)>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라엘 군인 등 100여명 사상/전교조, 총선 앞두고 '교육현안 7대 과제'를 발표, 56공 부정부패 교육자 퇴진 요구/한총련, 3월중 전 대학에서 북한 수재인 돕기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해설>

정부는 23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 3돌인 25일을 기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양심수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채 비리관련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돼 정부의 인권정책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양심수(정치범)이 한명도 없다는 정부의 억지논리의 연장이다.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수백명의 양심수를 단지 범을 어긴 범법자라고 치부할 뿐이다. 이런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약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리 없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전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양심수가 없다고 강변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던 그 수준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개현 정부의 인권정책 수준이다. 한편, 지난주 언론들은 안기부가 구내 유치장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안기부의 이런 움직임은 안기부내에 유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24시간 내내 피의자 신문은 안기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유치장소가 다른 곳으로 지정돼 있어도 버적이 불법을 자행해 온 터에 안기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6공 인사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정축재 재산 국민환수운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는 27일 오전10시 필리핀 전 상원의장인 조비토 살로가(66, Jovito R. Saloga)씨를 초청해 '필리핀의 경험: 마르코스와 그의 일가, 친지들의 부정재산 환수'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살로가의원은 86년 '민중의 힘' 혁명 이후 아키노 정부의 '좋은 정부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Government,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마르코스 일가의 축재 재산을 찾아내고 환수하는 일을 전담했다(살로가의원의 강연 내용 2면 게재).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본부장 김창국변호사)를 발족하고, 그 첫 사업으로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운동은 독재자들이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민의 힘으로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를 기초로 부정부패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를 영원히 추방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내원로와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환수단을 구성하고 스위스와 미국내 은닉재산의 소재 추적과 확인작업을 벌이며, 스위스와 미국에서 '국가 혹은 전두환, 노태우씨를 피고로,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필리핀 전 상원의원 살로가씨 초청강연은 그 첫 사업인 셈이다.

오개식(참여연대 공동대표)씨는 “환수단과 소송인단이 구성이 되면 독재관계 청산운동 주체들과 국제연대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라며 “국민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운동인 만큼 말만이 아닌 진정한 과거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시경은 25일과 27일 서울대 박재영(계산통계 90학번)씨등 8명(군인 신분 1명 포함)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대공본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시경은 이들이 지난 94년 「노나메기」라는 정치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계급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잡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 이영

수씨에 의하면, “연행된 이들 대부분은 과거에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활동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회사에 다니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25일 연행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저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연행자 명단>(숫자는 학번) 박재영, 오민규(수학 91), 김창겸(수학 92), 강문식(수학 92), 류은정(종교 93), 이흥일(무기재료 84), 김민우(회공 92), 서범식(사회 93)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 국제자유노련, 3월 방한

제3차계입금지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석방캠페인을 벌여온 「국제자유노련」(ICFTU)은 민주노총 양규현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자유노

련 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각국 노총 및 관련 국제단체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권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올해 2월 민주노총 양규현 수석부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자 더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다.

한편, 국제자유노련은 오는 3월11일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 노동실태와 민주노총의 국제자유노련 가입 조건을 조사한다.

제일교포 차별 철폐 서명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민주노총」, 「민변」 등 8개 여성·사회단체들이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의 공무원승진차별 조항 철폐소송을 낸 제일교포 2세 정향균(46)씨 돕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동경 보건의소에서 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정씨가 동경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제일동포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28.9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다음호에 관련기사 게재).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자료집 판매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하종강)/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조용환) 등 13개 명강의 총정리!

값: 1만원(한정분 50부) 문의: ☎715-9185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필리핀의 경우 「좋은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독재의 악을 이용해 축적했던 재산은 민주사회를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마르코스 재산 환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일차적으로 허수인에 의해 은닉되어 있는 해외재산에 대해 환수를 모색했고 둘째, 국내 재산중 예금과 유가증권 보석 등을 우선으로 가압류하고 그후 건물과 부동산 등에 대한 조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를 동봉하여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소 내용은 뇌물수수, 사기, 불법 포탈, 공공자금 유용 및 부정부패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였다. 같은 해 5월 29일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중심인 취리히의 주정부도 위원회의 요청을 인정하고 취리히의 모든 은행에 대해서 마르코스와 그 일가 및 관련자들의 재산에 대한 통상 동결 조치를 내리게 된다. 결국 90년 12월 21일 스위스 연방법원은 마르코스와 그 상속자들의 재산 및 기관을 해산할 것과 필리핀 정부에게 관련 은행 자료를 전달하도록 판결하였다.

고 있고 판결을 근거해 인권피해자들은 스위스 정부로부터 필리핀 정부가 환수 받기로 되어 있는 마르코스의 재산 3억 5천 6백만 달러(약 2조 7천 8백억 원)에 대해서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델다씨는 인권피해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필리핀 정부에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흘리며 필리핀 정부는 재판 외의 합의를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 정부의 재산환수조치와 인권단체의 소송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스위스에서 소송 위원회는 마르코스가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동산들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미국내에서 재산환수 소송을 제기해 임시재판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령의 유효기간이 20일 밖에 되지 않아 1차 중지명령을 받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다. 이 소송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소송이었기에 그저 소문뿐인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 증거들은 마르코스가 대통령궁에 미쳐 가져가지 못한 비밀문서를 발견하여 해결했다.

또 과거 독재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스위스은행에 대해서도 일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스위스연방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의 법적 대응전에 역사상 전례없이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동결 조치를 내렸다. 86년 4월 25일 스위스 정부측에 마르코스, 이델다(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 부인)씨와 그 부정부패에 관련된 친척 및 기업인들의 형사고발장 사본 및 관련 증거

피해자 1만명의 이름으로 또한 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 치하에서 고문, 납치, 실종, 불법 처형당한 인권피해자 1만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피해 배상 소송을 하와이 지방법원(판사 마뉴엘 리얼)에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92년 9월 24일, 하와이 법원은 마르코스가 기소된 바 인권침해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94년 2월 23일 위 판결에 의거 징계손해배상금 12억 달러(약 9조 3천 6백만 원)를 1만명의 피해자들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1994년 10월 법원은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인권피해자 대표와 면담을 한 뒤 95년 1월 18일, 유자격 소송인 9천 7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7억 6천 6백 40만 달러(약 6조)를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피해자들은 약 10억 달러의 청구서를 전달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마르코스측은 상고를 주장

<자료> 김선명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인체

<편집자주> 45년째 수감 중 지난해 8월 15일 풀려났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씨가 지난해 12월 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서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 23일 “국방경비법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 2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 등본을 원고에게 송달, 원고가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원고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안관찰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45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95년 8월 15일 가석방된 연로한 사람으로 보안관찰법 제2조가 정한 보안관찰대상범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다(<인권하루소식> 1월 24일자 참조).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원고를 수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방경비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해당 부분의 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국방경비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한 보안관찰법 부칙규정은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광주학살 ‘미국개입설’ 모두 사실 재야단체들, 미국의 사과등 강력 촉구

미국이 80년 광주민중항쟁 진압에 군동원을 승인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군 투입도 고려했다는 사실은 보안관찰해당범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다(<인권하루소식> 1월 24일자 참조).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원고를 수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방경비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해당 부분의 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뒤 카터 행정부는 최고위 비밀정책팀을 만들었고, 80년 5월 7일 전두환 씨의 군부대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 5월 8일 이를 전두환 씨에게 통보하였고, 5월 22일 백악관 고위 참모회의에서는 전씨의 광주항쟁 진압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5월 22일 회의에서는 사태가 악화되면 미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3.1절 휴일 관계로 내일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팀 사육 기사는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들을 토대로 주장했다. 이런 사실들은 광주항쟁 직후부터 학생들과 재야단체들이 계속 주장해온 광주항쟁에 대한 무력진압의 사전계획설과 이에 대한 미국의 승인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야인사와 단체들은 81년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 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강원대 성조기 소각사건,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86년 김세진·이재호 열사 분신사건 등으로 이런 주장을 계속 주장해왔다. 또한, 이런 사실들은 그간 미국측의 반응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동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연합, 오늘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미국이 80년 광주민중항쟁 진압에 군투입을 승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28일 재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 강도높게 미국을 비난하고 군사작전권의 반환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전두환 씨의 군투입 계획을 승인하고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수호신인 양 자임해온 미국의 추악성과 폭력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미국정부의 용서할 수 없는 학살조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미국 정부의 사과와 내정간섭 중단 △전시작전권의 반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제반 불평등 구조의 제거 등을 주장했다.

「5.18학살사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5.18공동대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통일인사불교도대책위원회」도 “미국의 광주학살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행위는 한국의 민주발전보다는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만을 고려하여 신군부의 정권찬탈 만행을 지원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미국정부는 관련 사실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연합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5.18공동대위도 다음 주 중에 미대사관을 방문 항의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김수경씨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직제 개편으로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파 기자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편집인은 김수경 씨, 기자는 엄주현씨들이 맡습니다.

<5.18 관련 미국측 주요발언>
· 미국은 광주사태에 심각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태에 간여할 생각이 없다.
-80.5.21.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대사
·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전장군은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에 호의를 갖고 있다.
-80.8.7. 워릭 전 주한미사령관
·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군대 동원 계획을 몰랐을 뿐 아니라 특수부대의 광주 투입을 사전에 몰랐다.
-89.12. 국회 광주특위 답변서 중

경원대, 농성학생 정계기로
28일 경원대에서는 정계위원회의 소집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고장현구씨대책위원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측은 농성관련 학생들 9명(총학생회장 포함)을 정계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본부 건물에서 위원회를 열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들이 건물을 봉쇄하자 결정을 다음날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의 조수미(28)씨는 “고 장현구 군을 고소고발했던 문용식 교수를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죄없이 어떠한 논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군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속에서, 재일교포 2세가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 공무원 승진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정투쟁의 주인공은 동경도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향군(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 2세이다. 정씨는 88년 외국인으로 처음 동경 보건부에 채용되었고, 92년에는 주임시험에 합격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지난 94년 직장상사의 권유로 관리직 선발고사에 응시하려 했으나 외국인은 유로 수험이 거부되었다. 정씨는 여기에 항의해, "동경

도의 결정은 법안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22조, 평등취급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13조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판결은 3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동경도는 "이러한 법적 권리는 일본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외국국적자는 원래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정씨를 채용한 것은 동경도의 재량이며 은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방위, 외교 등 외국인이 근무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와 직위를 명확히 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포 23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28일 오후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등과 함께 노동법 개정의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김영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합법화 반대 이유로 들고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조항"이라며 "더이상 정부도 국제적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출범 직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법 제3조 제6호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한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다수 임원으로 선출한 것 등을 들어 반려했다.

한편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김기중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며 끝까지 싸운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민주노총」, 「민변」 등 8개 여성, 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정씨문제 해결과 동경도 공무원 승진차별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가졌다. 김낙경씨(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는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서명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3월에 있을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29일에도 서명운동을 벌이며, 동경도지사, 한국정부(외무부), 일본노조, UN인권위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행사와 동정○

- 제77주년 3·1절 즙음한 사회민족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9일(목) 오전11시 · 장소: 탑골공원 팔각정
 - 내용: 77주년 3·1절을 맞아 독도문제로 불거진 일본의 과거반성에 대한 비판 등
 - 주최: 전국연합(☎ 747-4364), 민주노총 등
- '금지의 벽을 넘어 완전한 자유를 노래하리라'의 주제로 노래패 <꽃다지> 대규모 거리공연
 - 일시: 3월 1일(금) 오후 12:30~6시 · 장소: 탑골공원
 - 내용: 시민과 함께 그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도/노래와 춤과 연극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등
 - 주최: 문화활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위원회(☎ 743-5872*3)
 - 투쟁기금 모금 계좌번호: 제일은행 128-20-009893 조민재
- 3·1 민족자주정신 계승 및 일본군국주의 부활 반대 결의대회
 - 일시: 3월 1일(금) 오후 2시 · 장소: 종로공원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747-4364)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정책토론회
 - 3월 5일(화) 오전 10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내용: 제15대 총선-각 정당의 공천을 평가하며 공천과정의 문제와 공천 후보자에 대한 검토 등
 - 주최: 한국유권자운동연합(☎ 738-7966)
- 제5차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평의회
 - 일시: 3월 5일(화) 오후 2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13층 8호
 - 내용: 95년 사업 평가와 결산/조직개편안 등 96년 사업 계획 인준 등 · 문의: ☎ 333-4662
- 정치활동 강화 및 4·11 총선대응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수련회
 - 일시: 3월 7일(목) 오후 2시 집결~8일(금) 오전 9시 까지(1박2일)
 - 장소: 종로성당(☎ 765-6105 종로3가 전철역 하차)
 - 참가비: 1인당 2만원 · 문의: ☎ 765-2010
- '21세기를 맞는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 토론회
 - 일시: 3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내용: 21세기 한국시민운동의 전개방향과 과제/민주적 사회창출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 등
 - 주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741-7961*5)와 정부장관제1실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2회 한국여성대회 <여성 이 멀어 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로>
 - 일시: 3월 9일(토) 오후 2~5시
 -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다목적홀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 273-9353*8)

인권하루소식

96년 3월

(제593호 - 제613호)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원대, 언론사에 '학생이 교수 감금' 허위 제보 고 장현구씨 사망 관련 농성 학생 9명 징계위 회부

학교 당국이 마치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하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사실 확인없이 학교측 제보대로 기사화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원대 고 장현구씨(95년 12월 분신·사망, 당시 27세) 고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학생들에 대해 경원대(총장 김원섭)측은 지난 21일 위영석(총학생회장, 무역학과 4

년)씨등 9명을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석규 학생처장)에 회부했다. 28일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징계대상자인 유현목(부총학생회장, 도시계획 4년)씨를 비롯해 7명의 학생이 참석해 징계에 대한 부당성과 고 장현구씨 문제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주장했다. 그후 징계위원들인 교수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각 학생 50여명은 본

관앞에서 무릎을 꿇고 농성을 벌이며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튿날인 29일 전체교수회의가 속개되었는데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학교측이 각 언론사, 방송국에 "학생들이 교수들을 폭행·감금한다"고 제보했으며, 실제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는 학교측 주장만이 보도돼 문제가 되고 있다.

연대사업담당자 조수미(조경학과, 91학번)씨는 "학생들은 회의를 막을 의사나 힘이 없었다" "장례도 못치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경원대 학생들은 장씨가 사망한 직후 경찰병원 영안실과 학교 정문 앞 등에서 2일 현재 79일째 농성을 하며 고문경관의 처벌과 92년 장씨를 고소·고발한 교수들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

<동아일보 2월29일자 기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원대(총장 김원섭) 학생 30여명이 학교측의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반발, 28일 열린 상

벌위원회 회의장 입구를 막아 교수 12명을 감금한 채 29일 하오 현재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하 중략).

경원대 징계대상 학생 명단: 위영석, 유현목, 박대성(총학생회 사무국장), 황왕택(전기공학 4년), 김태연(산업공학 2년), 전현욱(회계학 1년), 한유진(환경조각, 제직), 이정섭(화학, 휴학), 임경훈(토목 2년)

인천 남부서, 고 이덕인씨 유가족 2명 불구속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2월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고 이덕인씨의 사인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이덕창(34), 이정운(24) 형제들을 연행, 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물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형제들은 고 이덕인씨의 친형과 동생으로 아안도 노점상 7명과 함께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고 이덕인씨의 시체 사진등을 전시하고 1시간40여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 사진들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자 이에 항의하던 이씨 형제들이 시청건물 유리창 1장을 파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연행해 조사, 10시간만에 불구속 입건으로 풀어준 것이다.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에 친족성폭력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피해의 횡수가 빈번하며 아버지란 이름으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점 △피해시기가 대체로 어

릴 때 시작되어 성폭력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해가 길게는 십여 년씩 지속되는 점 등의 이유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특별법 제7조에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사실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의붓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성폭력이 자행된다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김수경씨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직제 개편으로 <인권하루소식> 편집인과 기자가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편집인은 김수경씨, 기자는 엄주현씨들이 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6년 2월분 총목차(575-592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575	2/1	1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장기수 복송 회담 불허,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
		2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동당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전국연합, 대북지원 판 결고 나서야 한다고 정부 촉구/불교계, 군교회 예배사건으로 김대통령 공개사과 요구
576	2/2	1	또 "제3자 개입", 양규현 민주노동당 수석부위원장 연행/이덕인대책위 단식 해제하고 농성은 계속/전 연세춘추 편집장 수של 대기중 구속/김태년씨 재판 연기/행사와 동정
		2	<자료>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 결론적 의견
577	2/3	1	의노협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제기/민민학원 군복무자 5명 기무사 구속 확인
		2	<독자투고>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기-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은 필요없다"/인권간행물
578	2/6	1	경찰·철거용역반원 새벽 난입, 주민폭행 용인 강제철거 철담서 화재, 1명 사망·4명 중상/경찰,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전국연합, 공안단압 중지 촉구/주요 공판 안내
		2	<자료> 마카오 회에서 밝혀진 북한 수재 상황-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50억 달러/주간인권호름(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579	2/7	1	용인군 수지면 사망사건 항의, 철거민들 경기도청 앞 시위 "폭력철거 살인만행 책임자 처벌" 촉구/전국연합, 폭력강제철거 중단하고 책임자 엄벌 촉구/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바른언론, 전씨에 돈받은 언론인 공개 촉구
		2	<현장스케치-고 신연숙씨의 영안실 표정>/대책없는 강제철거 철거민 죽이려는 의도"-용인군 수지면 주민 강제철거 맞서 고공철거 농성 1백38일/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580	2/8	1	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고문 후유증 분신사망 장현구대책위, 경찰측 고문사실 부인/정대협,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유엔 보고서 계기 중군위안부 일본 정부 배상 압박/전국연합, 정부 북한 돕기에 나서야 한다는 서한 전달
		2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일본중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제야대표·엠네스티, 권영길씨등 석방 촉구 서한 정부에 전달/여연, 한전 노사에 노조위원장 사퇴 등 촉구 항의서한/불교인권위, 19일 판문점서 장기수 복송 회담 재추진
581	2/9	1	출산일 직전 석방 고에순씨 끝내 태아 사산/고에순씨의 육아일기/꽃다지 대표 구속에 항의해 예술인 매일 집회 열기로
		2	민주노동당 통합 제안 거부, 한국노동 반성·개혁해야/민주노동당 구속자 35명, 수배자 13명등 사면대상 파악발표/수지면 철거사건 축소수사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행사와 동정
582	2/10	1	정부, 국제무대에서 '사기극',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 결성 안돼/고에순씨 50여일 수감 중에 단 한차례 진료/서울시경, 사노맹 구속자에 7일째 변호인 접견 불허
		2	권영길 민주노동당위원장, 3차공판 "불법파업 선동한 죄 없다"/허인회씨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여연, 15일까지 여성운동상 후보 추천/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엠네스티 석방 촉구/인권간행물
583	2/13	1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9일 암사동에서 강제철거/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주요 공판 안내
		2	고에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사노맹사건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준항고 결정/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예술활동 탄압중지 촉구/주간인권호름(2월5일부터 2월11일까지)
584	2/14	1	'강제철거 중지' 공약실천 촉구, 철거민들 경기도지사·서울시장 퇴진운동 불사키로/경원대 교문앞 철담 철거, 학교측 학생에 폭언·폭행
		2	<자료> 고에순씨 옥중 편지-자나깨나 뱃 속의 아기 걱정/민주노동당 유구영씨 간담 판정 투병중/독색교통, 대기오염 측정 시민 모니터 지도 제작/안기부의 간첩조작 및 공안단압 규탄대회

<인권하루소식> 96년 2월분 총목차(585-592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585	2/15	1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에순씨 대책위 구성/사회각계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등 촉구
		2	<특집> 고에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1)-교도소에서는 여성이기를 포기하라/불교인권위 성명, 불교단위 중단 등 촉구/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간담투병 유구영씨 후위의 밤
586	2/16	1	살인가스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사망, 군산·옥구 주민들 동양화학 이진 촉구
		2	<특집> 고에순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전국연합, 북한 수해동포 캠페인/세계주거회의 참가신청
587	2/22	1	우산시 한국타타늄 공장 증설 허가 물의, 환경단체 등 공해공장 허가 철회 등 강경대응 모색/주요 공판 안내/고 신연숙 비대위 민중단압 공동항의 제안
		2	생명나눔실천회,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한다/성폭력 상담원 모집/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주간인권호름(2월12일부터 2월18일까지)
588	2/23	1	유엔, 위안부 배상 위해 나서야, 교회협 유엔 사무총장과 일본 수상에 촉구서한/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2	127회 민가협 목요일집회 열려 "진정한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꽃다지, '석방되는 그날까지' 거리공연 계속/행사와 동정
589	2/24	1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이들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고 신연숙씨 비대위 결의대회 가져
		2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주노동·민교협 등 8개 단체/정부 25일특별사면복권 발표,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이/고에순씨대책위, 광주교도소에 결의서 전달/인권간행물
590	2/27	1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 시위/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김정일 선물'기사에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법규원회, 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
		2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주간인권호름(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591	2/28	1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 국제자유노련 3월 방한/재일교포 차별 철폐 서명
		2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통가씨 강연 요지>-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자료>김선명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592	2/29	1	광주학살 '미국개입설' 모두 사실, 재야단체들 미국의 사과등 강력 촉구/전국연합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2	일본 동경도 정량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민주노동당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행사와 동정

<인권하루소식> 합본 V호 발간

· 주요내용: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95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5.18특별법 관련 기사 등

· 한정본 판매 값: 1만원(독자 5천원)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자료집 판매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하종강)/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조용환) 등 13개 명강의 총정리!

값: 1만원(한정본 50부) 문의: ☎715-9185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원대 학생징계 강행, 무조건 장례요구 고 장현구대책위, "고발교수 사과부터" 주장

경원대 고 장현구씨 문제가 5일로 83일째를 맞고 있으나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 악화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28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장 등 9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회측은 "징계 문제는 고 장현구씨를 경찰에 고발했던 당사자 4인(문용식, 주무홍, 이정부 교수, 박명순장학과장)의 사과가 선행된 뒤 다뤄질

사안"이라며 무엇보다도 우선 4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2일자 참조). 그러나, 학교측은 '4인의 사과 불허, 징계 우선'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생·학교 양측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4일 본지기자 및 만민사에서, 징계위원장 이석규(학생처장)교수는 "장씨의 죽음은 이미 제적된 학생의 죽음으로 학교측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장례를 치른다면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조문할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학생 9명의 징계는 불가피하며, 이미 제적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찰측에 고발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장현구씨의 아버지 장남수(55)씨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승이 제자를 감옥에 보내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계속되는 징계는 이번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반발과 징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연대사업을 맡고 있는 조수미씨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모두 했다"며 "이후 대책위 활동은 여론환기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8, 29일 있었던 본관 앞 시위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학생회 강승만씨는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담당자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담당 기자는 속보 형식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무런 정정기사도 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3월2일자 참조). 또한 "당일 현장취재를 한 다른 일간지 기자들도 당시 사건을 '학생들의 감금상황'으로 기

상황일지

- 95.12.4 송파사거리 육교 밑서 분신
- 12.14 순화병원에서 사망
- 12.15 경원대생 1백여명 학내집회
- 12.20 경찰청 항의방문 1백69명 연행
- 12.24 경찰청장, 재단이사장 규탄, 모금운동 전개
- 12.26 대표단 성남 중부서장 면담
- 12.29 학생 7명 명동성당 선전전 중, 중부서로 연행
- 12.31 경기동부총련 3백여명 경찰병원 앞 시위, 49명 연행
- 96. 1.6 학생대표와 학교측 입장차로 면담중단
- 1.7 사학비리, 경찰고문 규탄 경기동부총련 결의대회
- 1.11 학생분수대 앞 천막농성 전개
- 1.21 추모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1.27 성남시민대회 개최
- 1.29 명동성당, 기독교회관, 조계사 단식농성 돌입/총학생회장, 학생1인 학생앞 농성농성 시작
- 2.5 재학생 교문앞 쇠사슬 농성돌입
- 2.9 성남중부경찰서 앞 농성
- 2.12 교수, 직원 70여명 교문앞 농성장 철담 철거
- 2.28 총학생회장 외 9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림

사화하지 않았는데 편집과정에서 그같은 기사가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해 왔었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경원대 문제는 개강을 맞아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측의 완강한 입장에 맞물려 좀처럼 해결기미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신고전화 개통 참여연대 '시민의 눈'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본부장 김창국)는 지난 2월29일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을 개통했다. '시민의 눈'은 구조적 비리에 용기있게 맞서는 내부비리제보자, 잘못된 사법제도에 의해 피해당하는 사법피해자, 그밖에 갖가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통되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양성선언인,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눈' 전화 운영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창준(대표간사)씨 등 2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상담실을 운영, 당직변호사를 정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797-8200).

기사재보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제네바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NGO 그룹」(CRC)은 지난 2월29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으로 한국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 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알렸다고 전해왔다. CRC측은 이 사실을 아동권리위원회 서기 담당자가 오는 5월 열리는 아동권리위원회 회기에서 배포, 이 점이 고려사항으로 다루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지난 2월13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외 2명) 간사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은 CRC측에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구성이 허위로 드러난 사실을 알렸다. 11차 정기회가 열린 지난 1월 한국 정부는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적십자사, 유니세프, 연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의 민간단체들과 정부관련 부처로 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지 취재과정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과 의 전화인터

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박사무총장은 "위원장은 선임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도 없으나 이후 모임을 확대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2월10일자 참조).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77주년 31절 기념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등 사회운동단체는 77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3·1 민족자주정신 계승 및 일본 군국주의 부활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7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 군국주의 부활 꾀책하고 독도 망인 일삼는 일본 정부 규탄 △ 군 위안부등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즉각 실시할 것 △ 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는 제반 친일 잔재를 완전 청산할 것 △ 식민통치, 전쟁범죄 묵인하는 한일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한 남북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

주요 공판 안내

- 3월5일(화)
하광중,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 단독7부 421호
박중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단독9부 317호
류방상, 업무방해등, 오후4시, 서울형사4부 418호
- 3월6일(수)
김영근외 1명, 국보법등, 오전11시, 서울형사23부 311호
- 3월8일(금)
전창일의2명(범민련),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23부 311호
권영길,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2시, 서울형사 단독3부 320호

주/간/인/권/호/름 (96년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26일(월)>
전국연합, 서울지법서 '5.6공 안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촉구시위, 5기 대의원대회서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술'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법연구원, 3·1절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5만인 방세를 못내 40대 배관공 자살

<27일(화)>
참여연대, 전·노씨 부정재산 환수 범국민운동 발족/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연행/국제자유노련, 권영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국제캠페인 강화키로/서울고법, 한겨레신문에 대한 김현철씨 정정보도 강제집행 못한다고 판결/일본변호사연합회, 재일 한국인차별연금법 개정 촉구/연주소총 등 19개 노동사회단체,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등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 촉구

<28일(수)>
시사저널, 미국기차로부터 광주학살 미국개입설이 모두 사실이라는 기고문 게재/경원대, 장현구씨 문제로 농성중인 총학생회 간부 등 징계키로/경찰, 12-12와 5-18 사건관련 사법 처리자 16명에서 수사 종결/인천경찰서, 연구비 2억5천만원 받고 동아건설 펀드는 공청회 개최 물의뱀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재일동포 2세 정향군씨에 대한 일본당국의 공무원 승진차별에 항의하는 서명운동

<29일(목)>
경원대, 언론사에 '학생이 교수를 감금·폭행한다'는 허위 제보/ILLO, 일본정부에 임금채권등의 권리가 있는 위안부들에게 대응책 마련 촉구

<3월1일(금)>
동해경찰서, 단순행패로 구속된 대학생 강압수사로 폭력배로 몰아/헌법재판소, 18세 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을 금한 법률 조항 합헌 판결/보훈처, 친일 혐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유족 반발 내세워 서훈박탈등 제3차 3년제 제자다

<3월2일(토)>
전두환씨 경찰병원서 73일만에 안양교도소로 재수감/포항시, 장성동 국방부 유류저장소의 기름 유출로 농경지를 오염시켰다고 밝혀/전남경찰청, 전남대 총학생회 전간부등 2명 국보법위반혐의로 구속/용역업체, 교교전문대 졸업생에 접근 불법 취업알선

<해설>-----
광주민주화운동과정에서 미국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졌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군 개입도 고려되었음을 밝히는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준 한 주였다. 특히 같은 날 검찰은 12-12와 5-18에 대한 수사를 전·노 두 전 대통령을 포함한 16명만을 기소하고 수사 종결을 발표해 그동안 소문만이 무성했던 미국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다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고 장현구씨 사건이 4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해결기미를 보 이기는커녕 경원대측이 농성중인 학생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언론에 '교수가 감금·폭행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해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측은 이성적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푸는 참지성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하지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젓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등 5인도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여연)은 5일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와 '여성 권익의 걸림돌 5인'과 '디딤돌 5인'을 발표했다.

또한 여연은 올해를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결의안을 나라별로 시행에 옮기는 첫 해로 규정하고 오는 9일 열린 제12회 세계여성대회는 "여성들이 열어 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선정해 '96년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 행복 조건 열 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3월9일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는 도츠카 에츠로(Totska

Etsuro 54세, 일본인 변호사)씨가 선정됐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는 도츠카 에츠로씨를 선정 이유에 대해 "일본인 남성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이번 52차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에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포함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유엔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 압력을 가해 일본이 국 가적 차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린 점"이라며, 필리핀, 북한 등 위안부 피해국가들을 순회 하며 활동가들에게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의 허구성을 알리려 함의하지 않게 실득한 점"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문을 수 차례 발표해 전문가에게 일 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널리 알린 점 등을 들고 있다. 도츠카 에츠로씨는 7일 (목) 오전9시30분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여연은 "여성 권익의 걸림돌 5인"과 "디딤돌 5인"을 발표했는데 걸림돌 5인에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해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한 박용상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젓소부인 바람났네 1,2'의 극작가 최강주씨,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한 한국경영사총협회,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가해자 신정효교수가 선정됐으며 정치관련 인물은 행사당일 발표 예정이다. 그리고 디딤돌 5인에는 성희롱사건을 고발한 서울대 우조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여성권익성장에 힘 쓴 조순 서울시장,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의 이민용 감독, 고용안정에 기여한 바 큰 현대해상화재보험과 LG화재 노동조합, 마지막 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 김명희씨 남편 살해사건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

예 5년을 선고한 강원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선정됐다.

경원대 총장, 학생 6명 업무방해 혐의 등 고소

경원대(총장 김원섭)가 지난 29일 총장명의로 고장현구씨 문제와 관련된 농성중인 김문홍(25, 경제학과 졸업)씨등 6명을 감금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성남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학교측은 언론에 학생들이 교수들 감금·폭행한다고 허위제보한 뒤 즉각 고소를 한 것이다(「인권하루소식」 3월2일자 참조). 이 사실은 김해성목사(「사학비리경찰고문 회생자 고장현구군 장래대책위원회」 위원장)가 강황찬 성남경찰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했는데 그동안 경찰측은 고소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다. 고장현구군 문제 또한 학교측이 장씨를 경찰에 고소해 야기된 것으로 학교측이 관련 제적된 학생을 다시 경찰에 고소한 것은 이성적인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학생의 징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학생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연대사업담당자 조수미(경정학과, 91학번)씨는 "지난 3일에는 장영달국회의원이 증재자로 나서 총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총장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망루에서 내려온 이덕인씨는 경찰들에게 발 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도츠카 에츠로씨 경력>

- 46년 일본 리코 대학교 이학부 물리학과 졸업
- 70년 일본 리코 대학교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일본 사법시험 합격
- 87년 '정신위생법'의 개정, '정신보건법' 성립에 공헌
- 90년 런던 대학 대학원 'LSE' JLM (법학석사)
- 92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개인배상을 요구하고 유엔의 조정을 요청
- 93년 5월 유엔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위원회의 현대노예 부회에서 위안부와 강제연행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과 전문가 의견 등의 청문을 실현
- 94년 2월 한국 정대협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일본 도쿄 지방검찰청에 제출
- 94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벌문제 제기
- 95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일본 무라야마상 반대」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이 관계 각국을 방문하도록 요청
- 95년 9월 북경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하여 입법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제안

아암도 노점상 고 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백일!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도 산 넘어 산

인천시 연수구 아암도에 대한 포장마차에 전격적인 철거와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사망 1백일을 맞아 '고 이덕인 열사 사망 1백일 추모 및 민중생존권 탄압 규탄대회'가 6일 오후 1시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시신은 현재까지 인천 중앙김병원에 안치중이며, 유가족과 노점상들은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 등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계속 요구 하고 있다. 1월말 단식 농성에 이어 설 연휴가 지난 2월26일부터는 인천시청 앞에서 유족들을 중심으로 매일 연좌시위와 선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양재택 인천연합의 장과 김영규 인하대 교수 등이 이철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유가족에 대한 배상 △아암도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보장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측은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이번주까지 대책을 통보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진전 없는 사인규명

이덕인씨의 사인에 대해 종교·사회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섭)는 스피카 손목에 묶인 줄이 포박 의 형태라는 점 △의사체로 보기에 등쪽에 아무런 상 입고 있었던 옷등등이 벗겨 없어진 점 △사망 추정 시 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영중 사망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망루에서 내려온 이덕인씨는 경찰들에게 발 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계수사를 촉구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미 의사판정(담당검사 이혁)을 내린 데 이어 "현재로선 계수사에 들어갈 이 유가 없다"고 담당검사(송기현)는 밝히고 있다.

한편, 아암도 일대 해안선 상규명도 아암도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 등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계속 요구 하고 있다. 1월말 단식 농성에 이어 설 연휴가 지난 2월26일부터는 인천시청 앞에서 유족들을 중심으로 매일 연좌시위와 선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양재택 인천연합의 장과 김영규 인하대 교수 등이 이철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유가족에 대한 배상 △아암도 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보장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측은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이번주까지 대책을 통보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벼랑에 몰린 노점상들

당시 철거과정에서 노점상들이 입은 피해는 59점포에서 약 2억5천 내지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노점상측은 말하고 있다. 또한 1백일에 걸친 투쟁과정에서 구속 처벌된 사람은 총12명, 불구속입건자도 4명에 이른다. 「인천노점상연합」 회원 4명과 7명의 인하대 학생들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고 지난달 석방되었다. 그러나 양연수씨(전국노점상 연합회 고문)는 현재까지 구치소의 형(이덕장 34)과 아우(이정훈 24)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덕인씨의 어머니 김정자씨(53)는 지난달 29일, 남아서 투쟁하던 두 아들마저 경찰서에 연행되자 "나머지 두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다 해서 투쟁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아암도 노점상들에 대한 생존 보장이 해결된 후에야 덕인이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애써 눈물을 참아냈다. 불구자인 남동생을 두고 자신이 친정을 부양해 왔다는 아암도 노점상 김미자씨(42)는 "현재는 집세도 내지 못하고 전화마저 끊어진 상태여서 국민학교 3학년인 아이를 친정집에 맡겨두고 기자의 질문에 "여기서 투쟁을 포기하면 앞으로의 생애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난 2월29일야아 철거한 이유가 해명돼야 하고, 당시 군부대에서 사건진행과정을 촬영한 비디오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노점 철거 뒤에는 대규모 개발이

아암도 노점 철거는 도시환경을 미화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금 아암도를 포함한 인천 송도 앞 바다에는 사업비만 총1조7천여억원이 드는 여의도 6배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며 그 안에 88층 높이의 초고층호텔을 갖춘 대규모 종합위락시설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매립작업은 현

대산업과 한진종합건설이 맡고 있으며 송도 유원지 개발은 대우건설에서 추진 중이다.

도시 발전을 위한 철거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철거는 이제 그 속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아암도 수십 가구의 생존과 장애인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착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한 청년의 것발한 꿈이 1백일 동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솔벤트 중독 대책은? 피해자들, 공청회 개최

「LG전자부품(주)」(대표 김희수)의 솔벤트 중독사건 피해자들은 사건이 터진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회사측의 성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6일 부산지역의 「피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주축로 'LG전자 부품 유기용제 집단중독사건 공청회'를 오후 7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

「노동자를 위한 연대」의 설봉일사무국장(41세)은 "유기용제는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독에 대한 질병의 현상도 개인 질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실태 조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철순)의 부산지회 등 여성단체들은 회사측의 성의있는 해결대책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공개사과, 치료와 보상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의법 조치 △유기용제에 대한 관리와 여성노동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을 요청했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국제엠네스티(AI) 피에르 쓰네(Pierre Sane) 사무총장은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인권관련 사항들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AI는 많은 나라에서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실천하는 등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심 사안임을 전제하고, "이번 4월11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인권과 관련한 공약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함을 역설하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보안법등 인권침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과 함께 한국의 실질적 실천을 요구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안기부의 활동을 심사·감독하는 독립기관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광주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각 정당이 사형폐지를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재정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현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현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국보법 제19조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결론을 선고한 바 있다. 5일 제출된 서울지법 명의의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당시 현재의 결정이 7조와

10조에 관련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위헌여부의 결정을 유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9조의 적용은 위 두 조항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19조 전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위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시환(43)판사는 지난 94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기소됐던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사법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결정이 보류되자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6일 곧바로 강씨를 기소처분했다.

인권공약 채택 적극 홍보 진보정치연합 AI 요구 환영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김철수등)은 4·11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국제엠네스티(AI)가 각급 정치단체에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진보정치연합은 AI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특히 AI가 노동법의 '제3차 개입금지 조항' 철폐를 촉구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보장과 더불어 크게 진전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AI가 이 요구를 내세운 것은 각 정당들이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후진성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AI의 요구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적극 조직하여 총선공약에서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양심수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과 사면·복권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7년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선 지금, '이유없는 해고에서의 보호' '퇴직금, 산재치료비, 산전·산후 휴가 지급 보장'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9개 사회·시민단체들이 1994년 4인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개정투쟁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천영세·김진균, 시행령개정투쟁 공동위) 회원

30여명은 6일 낮12시30분경 종로공원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거리시명전을 벌였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씨는 "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1백만 노동자도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7년이 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전혀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산재보험법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완결을 얘기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 투쟁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4천만 국민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미래의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서석호(39)씨는 5개 지역노조가 연대회의를 구성, 공청회·거리서명·국회청원 등을 벌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진남 노동부장관의 승낙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의 답변은 6개월이 다 되도록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행령개정투쟁 공동위는 매주 1회 거리캠페인과 서명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2시 종로공원에서 집회를 갖게 된다. 서석호씨는 "총선전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청이나 노동부가 집계·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실태가 파악되지 않지만, 92년 12월 통계청의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1년 전산업 종사자 1천1백35만6천명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상용종사자 83만6천7백38명과 일일종사자 4만7천2백92명을 합쳐 88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식통계는 아니나, 95년 이들 4인 이하 사업체 상용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53만4천5백원으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종사자의 67만1천7백원보다 13만7천2백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의 실태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조사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의 '94산업재해분석'에 의하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으며 산업재해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4년 기준으로 전산업내 5-9인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3.1%로 전체 평균 1.18%의 2.6배이며, 제조업의 경우 5-9인 사업장에서는 전체 평균 1.3%의 3.4배에 달하는 4.46%의 산재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 2항)고 개정했으나 법개정후 7년이 다 되도록 개정된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의 개정을 방치해 왔다.

고장현구군 문제해결 촉구 인권협, 성명발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김상근목사, 인권협)는 '고 장현구 학생 분신사망 사건과 현 경원대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협은 고 장현구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분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진신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경원대 총학생회 및 지역의 양심적 인사들이 벌인 80여일간의 농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학교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승으로서의 도리를 포기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이덕인 1백일 추모집회 6일 오후 인천에서는 이덕인씨 사망 1백일을 맞아 추모집회가 열렸다. 대책위와 인천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시, 연수구청, 경찰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에 대한 요구와 민중생존권 탄압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으며, 합천 연대투쟁으로 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5백여명의 참석자들은 시민회관에서부터 시청까지 평화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고이덕인 1백일 추모집회

6일 오후 인천에서는 이덕인씨 사망 1백일을 맞아 추모집회가 열렸다. 대책위와 인천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시, 연수구청, 경찰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에 대한 요구와 민중생존권 탄압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으며, 합천 연대투쟁으로 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로 결의를 다졌다. 5백여명의 참석자들은 시민회관에서부터 시청까지 평화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V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가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95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 /5.18특별법 관련 기사 등

· 한정본판매 값: 5천원

(단, 독자가 아닌 본게는 1만원에 판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하지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미결 재소자의 치료비는 재소자 스스로 부담해온 관행과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비는 당초 단식을 시작한 전씨에게 부담책임이 있지만 병원이송이 단순히 구치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한데다 수형자 치료는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행형

법 취지에 따라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그러나, 95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박용길 장로(78)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당뇨병 때문에 그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박장로의 병원치료비 9백여만원을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비부담해야 한다"며 전액 부담케 한 바 있다. 또한 95년 10월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 8개월의 임산부 고애순씨에 대해서는 96년 1월29일 최초로 검진을 허용하면서 3만8천원의 초

음과 검사비를 자비부담케 했다. 이와 관련, 민가협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모든 재소자 및 양심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비부담의 원칙을 고수해온 법무부가 유독 전두환씨에게만 이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찬은 변호사는 현행 형법 등 연 계소 자치료에 관한 관련법규나 근거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치료비용의 국고부담 또는 자변(자기부담) 처리에 대한 법적규정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소자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교정기관들은 외부 진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에게 자비부담을 요구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경원대, 총학생회 죽이기 광분

제적 2명, 무기정학 5명 등 증징계 조치

고 장현구군의 분신사망 이후 갈등이 악화되어온 경원대 사태가 학교측의 계속되는 강경방침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원대 학생상벌위원회(위원장 이석규 학생처장)는 지난달 28일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의 결정내용을 발표, 위영석(무역3, 총학생회장) 씨등 2명을 제적처분하고 6명을 무기 및 유기정학에 처했다.

지난 29일 백승규(무역4, 제적)씨등 7명의 제적생을 성남중부서에 고발한데 이어 재학생들을 징계조치한 것은 학교측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여온 '징계→제적→고발'이라는 문제해결방식을 또한번 되풀이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처사에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학교측의 대응은 92년 장현구선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총학생회장은 신병문제로 정계에 참석조차 못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한 징계와 고발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런 학교측의 대응은 92년 장현구선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총학생회장은 신병문제로 정계에 참석조차 못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한 징계와 고발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제적- 위영석, 유현목(도시계획4) 무기정학- 이정섭(화학4), 임정훈(토목공4), 황왕택(전기공4), 박대성(도시계획2), 김태연(산업공3), 유기정학 3개월-전현욱(회계2)
<고발당한 학생 명단> 백승규, 양신석(산업공4, 95제적), 민태호(무역4, 강승환(토목4, *), 홍석규(토목공4, *), 이병민(중문4, *), 김문홍(96경제 줄)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

-제12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여연)은 제12회 한국여성대회를 오는 9일 오후2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갖는다.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의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여성·시민·사회단체등 25개 단체 1천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여성대회는 작년 북경세계여성회의의 성과를 나라별로 시행에 옮기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연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이번 대회의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행사로는 올해 여성들이 바라는 요구와 의지를 비디오쇼로 꾸며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읽기 1', 가정폭력에 대한 상황극을 통해 가정내 구타와 학대당하는 사회모순을 고발하고 대안을 관개과 같이 찾아보는 '더 이상 폭력은 안돼!'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도 있다.

<인터뷰> 여성운동상 수상-도츠카 변호사 인터뷰
"한국정부 일본에 배상 강력히 요구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에 의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된 도츠카 에츠코 변호사는 7일 오전9시30분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세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변호사는 수상자 선정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해 침략과 전쟁상황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인권침해문제를 적극 제기한 공로"를 들었다. 다음은 도츠카씨와의 간담회 내용이다.

- 일본인 남성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90년 6월 현 국회의원의 모토카의원이 비밀리에 위안부문제에 대해 법적 조인을 부탁했다. 나는 그때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없이 일본법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뒤 한국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계등)가 만들어졌고, 처음으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했다. 그때 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제법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같은 일본인들의 질시와 의혹, 특히 동료 변호사들의 비난이었다.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일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을 떠나 인권을 짓밟힌 여성들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 현재 일본에서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 몇 년 전만해도 위안부 문제를 금기시하던 일본 언론과 많은 일본인들이 변화하고 있다. 몇몇 일본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비밀리에 추진중이다.

- 일본정부의 입장은 완고하지 않은가?

△ 일본이 전쟁의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일본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마당에 위안부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가하는 압력은 상당하다.

-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에 원하는 바는?

△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65년 한·일협정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당시 협정이 전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재 대만정부는 일본을 향해 위안부문제에 대해 민간기금이 아닌 일본의 사죄와 확실한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한국정부도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 올바른 한·일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좋은 친구라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과거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과 일본은 정직하게 말하고 정의를 이 문제를 해결할 때다. 그대야 진정한 우정을 갖는 관계가 될 것이다.

AI 한국지부, '북경여성대회 결의사항 이행'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 AI한국지부)는 제8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I한국지부는 북경여성대회에서 결의된 이행프로그램을 모든 정부가 지키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헌장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와 동정

□ 김종필 지민연총재 독도 폭파 발언에 관한 중앙당사 항의방문

· 3월8일(금) 오후2시 · 자유민주연합 마포 중앙당사
· 항의방문단체: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선총남연합(☎747-4364,5)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토론회

· 3월8일(금) 오후2시~5시 · 기독교연합회관 (신관 강당)
· 내용:한국민간보고서 발표와 세계주거회의와 한국민간위의 활동 방향 등
· 주최: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3)

□ 서울민주시민연합 제12기 정기총회

· 3월9일(토) 오후5시30분 · 경기대학교 강당
· 주최:서울민주시민연합(☎392-5321~2)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2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복지·인권의 시대!>

· 일시:3월9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다목적홀
· 주최:한국여성단체연합(☎ 273-9353~8)

□ 5·18 총체적 진상규명과 학살자 전원 처벌 촉구대회

· 3월11일(월) 오전9시 · 서초동 법원입구 전철역
· 주최:5·18 국민위원회(☎ 747-4364)

□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

· 일시:3월13일(수) 오후2시 ~ 14일(목) 오후5시
· 장소:을지로와 서울역 일대
·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051- 817-4977)

□ 민주노총 제1차 고용정책 세미나

· 3월13일(수) 오후2~6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 내용:경쟁합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노동자들의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765-2010)

□ 미국의 광주학살 지원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촉구대회

· 3월14일(목) 오후2시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내용:최근의 미군범죄 사례 보고와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제안 및 결의 등
·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이" 모집

상담소는 나눔터 기자, 외국자료 번역, 풍물패 등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나눔이'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이력서 1통을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로 3월20일까지 접수시켜면 된다. ☎ 576-5513~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국 실무자 인사이동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에서 일하던 한상봉(이시도로)씨가 사제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오창익씨는 지난 2월 사제단을 그만두었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세계주거회의와 인간적 주거환경-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2시 기독교연

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주거, 환경, 노동, 교통 등 민간보고서 작성에 관한 각 관련 단체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부는 민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 회로 진행되었다. 주거문제에 관해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씨는 "그동안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평균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거빈곤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주택 소비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한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고 강조했다. 하성규(한국민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교수는 이번 주거회의에서 민간단체가 눈여겨 볼 세계주거회의 의제로 13조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평가하는 것과 제49조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삽입, 그리고 제75조의 강제 철거의 방지대책 삽입 여부 등을 꼽았다.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총렬씨 3차공판언론

8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9단독, 담당판사 유원석) 317호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총렬(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3차공판이 열려, 박씨의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장, 구속중)씨에게 연방제 통일안, 북미 2자 협정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주장과 관련한 신문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게 "연방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이 구상하는 것, 그리고 세계의 지속 가능한 인강정주개발이다. 이와같은 인강정주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유엔총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① 도시는 고층, 투자와 교역, 생산과 소비, 문화와 교육, 사회조화 등과 같은 활동의 중심으로

기사제보/구독문의
 전화: 715-9185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범민련 관계자 3인의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민련 간부였던 전창일(75, 부의장), 김병권(76, 중앙위원), 신정길(39, 사무처장)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맨처음 진술에 나선 전창일씨는 "범민련은 남북화해와 상호인정의 공존체제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런 범민련의 활동을 탄압하고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뿐 아니라 민족분단과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은폐함으로써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총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도 국가기밀을 누설한 일도 없는데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며 간첩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병권씨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나이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말레이시아 건설업체에서 근무중인 아들을 소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안기부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간첩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진술에 나선 신정길씨는 범민련의 이적성 주장과 관련해 "남북이 상호인정에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논의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양심과 이성애 따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 7일 범민련 활동과 관련, 구속된 김병균 목사의 석방촉구 기도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모두에게 걱정 주거를"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도시정상회담'이라 불리는 세계주거회의(HABITAT II)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주거회의에서 다뤄질 주요사항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자주>

올6월에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가 열린다. 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인강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유엔이 주최한 제1회 세계주거회의가 열렸다. 세계각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도시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협력과 개선 노력이 필요성에 인식됨에 따라 개최된 제1회 세계주거회의 이후 유엔이 「유엔인강정주선다」라는 기구를 설립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세계주거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는 리우환경회의(91년), 사회개발정상회의(95년), 세계여성회의(95년) 등에 이어지는 일련의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들의 권리 향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세계정상회담"으로 불리는 것과 비교할때 세계주거회의는 "도시정상회담"이라 불리기도 한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확보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세계의 지속 가능한 인강정주개발이다. 이와같은 인강정주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유엔총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① 도시는 고층, 투자와 교역, 생산과 소비, 문화와 교육, 사회조화 등과 같은 활동의 중심으로

할을 하여야 하며 ② 주거와 도시개발을 위해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③ 국가적, 지역적 우선 순위를 근거로 하여 국가실천계획을 구상, 채택, 실천하며 ④ 2천년까지 제1단계 국가적 약속을 포함한 국가단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범지구실천계획(Global Plan of Action)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계주거회의는 크게 8개 영역의 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 정부 △시장들과 의회의원들 △시민지도자와 원로정치인 △민간협회와 기업협회 등 △학계 △인간정주관련 전문가들 △지역사회지도자 △비정부단체(NGOs)와 주민단체(CBOs) 대표 등이다.

유엔은 각국 정부에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6년부터 2천년까지의 행동계획을 세계주거회의의 이전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빌미 '불법수사' 경찰서장 공개사과 요구

8일 「청년정보문화센터」(소장 임종석)는 강남·서초직장인모임 회장 이희정(동계청 직원)씨등 3명의 연행에 대해 강남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정보문화센터 회원들은 오늘 오후3시30분 강남경찰서를 향의방문키로 하고, 경찰서장의 공개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항의전화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정, 이병진(삼성건설 직원), 김주영(한의사)씨 등

은 지난 2월9일 강남·서초 변호사로서의 삶'과 관련해 직장인모임에서 홍성우(강 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인 남갑민주당 후보)변호사를 행되어 조사를 무혐의로 당 연사로 한 초청강연 '인권 일 풀리었다. 그러나 강남

◆ 인권간행물 ◆

- 「봉천동 나눔의 집·청소년쉼터」, 96년 2월호-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등(871-1596)
 · 주요내용: 기획연재 매 맞는 아내, 더 이상 가정문제 아니다(아내구타의 피해와 휴유증과 아내구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 16쪽.
-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12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275-8505)
 · 주요내용: 96년도 지략연 겨울수련회 및 제11회 정기총회/96년도 보육사업의 사업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일본보육인수기 "일본 보육시설들을 돌아보고 나서". 67쪽.
- 「민교협 월보」, 26호-민교협(888-3683)
 · 주요내용: 사학비리의 구조와 그 개혁방안/한국사회의 이해/사건 678차 공판소식/WTO체제하 한국농업이 나아갈 등. 87쪽.
- 「국제엠네스티」, 34월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 침묵을 강요하는 군사정권(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국가에 의한 살인(사형제도)/세계의 인권상황 등. 27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 89호-전국연합(747-4364)
 · 주요내용: 민주노총의 역할과 당면과제/만삭 임신부, 구속취부심 보석신청 기각/미군범죄 현주소를 고발하는 금요시위/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길 등. 62쪽.
- 1996년 「북한인권백서」-민족통일연구원(266-0892)
 · 주요내용: 북한의 체제적 특성과 인권개념/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환경권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권침해 등. 237면.
- 월간 「함께 걸음」, 2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개정되어야/사회복지종사자 무엇을 할 것인가/뇌성마비 장애우를 위한 스포츠/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년을 돌아본다 등. 85쪽.
- 「사법감시」, 3호-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796-8364)
 · 주요내용: 부패방지기본법(안)/개정형사소송법의 피의자구속제도에 관한 검토/판사들이 웃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막나가는 안기부, 무책임한 검찰 등. 32쪽.
- 월간 「민족예술」, 3월호-민예총(743-5872)
 · 주요내용: 민족시인 고 김남주 2기를 마치고/국보법과 문화/진보적 문화운동의 방향에 관한 몇가지 검토 등. 96쪽.
- 자료집: 필리핀 전 상원의장, 조비토 살롱가 초청강연회-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797-8200)
 · 주요내용: 마르코스 일가의 해외 도피 재산 환수 사례/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 취지문/두 전직대통령 부정재산 국민환수사업 구상/스위스은행의 비밀보장제도(영문) 등. 69쪽.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하지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정호용·허화평·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 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전두환, 노태우씨등 12·12 및 5·18 책임자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원회) 주최로 전국연합, 민주노총, 유가협, 참여연대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내란학살자 진원처벌 촉구집회가 열렸다.

옥중출마 중단 촉구

5·18국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12·12와 5·18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진원처벌 △80년 국보위 참여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임명된 국보법, 노동악법 철폐 △5·18 관련자의 총선출마 기도중단 △최거하 전 대통령의 증언 촉구 △5·18내란학살을 공

모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뒤 김상근목사는 5·18사건 고발인을 대표하여 공판을 방청했다.

5·18단체 계란시위

또한 광주지역 5·18단체 회원 80여명은 상경해 5·18학살자 진원처벌등을 요구하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오전 8시30분경 박우석 「전국연합 경기남부연합」 상임의장과 5·18 단체 회원등 5명은 전두환씨 호송차량을 막고 계란을 던지는등 시위를 벌이다 동부경찰서로 전원연행되었다. 이에 항의하러간 조양익(전국연합 민생·기획국장)씨등도 노원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강경대부친 전치3주

한편 오전 재판이 끝나고 휴정시간중 강민조(강경대

열사 부친)씨가 전씨의 아들 진재국씨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사당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 자리인 이날 오전재판을 마치고 휴정에 들어가자 재판을 방청한 전씨의 아들을 비롯한 측근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이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2일 오전 한정화변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

이기는 커녕 피고인 전씨와 약수를 하고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이였다. 이를 지켜본 강민조씨가 “살인마를 비호하는 재판부는 작심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곧바로 전씨의 아들이 오른손으로 강민조씨의 목을 누르고, 얼굴을 구타했다. 또한 전씨의 둘째아들 전재용씨가 강씨의 무릎을 차 밟았으며 측근들이 몰려와 강씨를 집단구타했다. 이에 강민조씨는 전재국씨등을 고소할 예정이며, 유가협등도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다른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는 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씨는 “만 20세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70여개국이 넘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번 총선공약으로 선거연령 조정(만 18세)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선거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될 경우, 국내 유권자는 1백80만명가량 증가하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자유, 독립 선포 3월10일 제38회주년 티벳의 날

59년 3월10일은 티벳인들이 중국에 대항하여 티벳의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선포한 날이다. 이때부터 티벳인들은 이날을 기념해 왔다. 「티벳청년회의」는 올해를 전세계 티벳의 날로 기념하며 작년 7월 실종된 권돈 초에스키 니마(제11대 판첸 라마, 판첸 라마는 티벳 제2의 영적지도자를 말한다)의 안전보장과 석방촉구를 비롯해 중국정부가 과거 43년간의 가한 물리적·정신적·종교적 박해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편지쓰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간략히 티벳의 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중국은 49-50년 티벳을 침공했다. 적은 규모의 티벳군으로는 역부족이었고, 티벳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홀로 중국을 대항하게 된 티벳은 약 17개 조약, 즉 51년 베이징에서 있었던 티벳주권을 중국이 간섭할 수 있도록 강요된 조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티벳 동북지역과 동부에 대해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압력은 그 지역 티벳인들로 하여금 무장저항을 하게 한다. 이것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Amdo, Kham에서의 탄압과 저항은 수천명의 티벳인들을 비교적 안전한 중앙 Tibet과 Lhasa로 피난시켰다. 티벳정부에 대한 중국의 거만한 태도에 분노한 티벳인들은 동티벳에서 피난온 사람들로부터 티벳 라마와 승려들의 죽음, 사원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 비난으로 나타났고, 수만명의 티벳인들이 59년 3월10일

Lhasa의 거리로 티벳의 독립을 외치면서 뛰쳐나왔다. 이 3월10일 항쟁은 티벳에서 중국의 폭정과 정령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 티벳민중들의 동시다발적 저항이었다. 이를 뒤인 3월12일에는 티벳의 여성들도 Lhasa의 거리로 나왔다.

이렇듯 티벳 전역에 버섯처럼 뿌려진 저항운동은 저지할 수 없었다. 중국측 집계 따르면 8만7천명의 티벳인들이 중앙티벳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령에 저항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3월10일 항쟁은 달라이 라마와 그의 정부요원 8만명의 티벳인이 인도, 네팔, 부탄등지로 이동을 가져왔다.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벳정부를 재건했다. 그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지만 티벳 내외에서는 정통정부로 인정을 받고 있다.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북부인도에 있는 Dharamsala의 기지에서 서부터 티벳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지도 아래 티벳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점령에 대한 비폭력적인 저항을 계속해 왔다. 이 저항운동은 티벳인의 자유에 대한 세계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59년 3월10일 항쟁을 진압하는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모든 티벳인의 가슴에 계속 불타는 그날의 정신을 진압할 수 없었다. 59년 8만7천명의 티벳인들이 죽었고, 이후 9년동안 1백20만명의 티벳인들이 중국의 티벳 점령으로 죽었다. 티벳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매년 3월10일을 기념한다. 그들의 죽음은 자유, 독립, 티벳의 탄생을 위한 정당하고, 가치있는 희생이었다고... <자료제공: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주/간/인/권/호/름

(96년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4일(월)>

경원대측, 고 장현구씨 관련 농성학생 정계방침/참여연대,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 개통/농림수산부, WTO초범이후 농림수산물 수입액 1백억달러 넘어/전두환씨 경찰병원 입원비 7백여만원 국고부담

<5일(화)>

LG전자부품(주)의 솔벤트 중독사건 피해자들, 대책마련 공청회 개최/이스라엘, 하마스를 겨냥한 특별군사령부 창설/공시질 시국사법으로 실험선고받아 검사임용서 탈락했다는 사법연수원생 3명, 법무부 상대로 '검사 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독일연방법원, 옛동독 국경수비대 지휘관 민간인 발표령 혐의로 살인죄 적용 판결

<6일(수)>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때 '인권 공약' 포함 촉구/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9조 위헌제청/미 국무부 95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히 심각"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권신장과 남녀차별 시정조치 마련

<7일(목)>

이수성 총리, 중·고교 우범학생 및 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실시 계획/일본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에 대해 징역 7년 선고/출소후 무죄주장하며 자살한 30대 용집공의 유족들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제출

<8일(금)>

제12회 38 세계여성의 날/제2회 세계주거회의의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토론회/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등 3명과 전국연합 박충원씨 3차공판 변호인측 증인신문/국제자유노조연맹,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12억 중 여성이 70% 차지한다고 발표/조선시장, 일정부에 '위안부 피해보상 촉구' 서한 보내기로

<9일(토)>

여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검찰의 무리하게 병원 입원중 구속해 재산조사 고도소에서 사망

<10일(일)>

법무부 산하 소년원서 구타로 식물인간된 소년범을 단순사고로 위장해 7달간 은폐/태백시 철암역 지탄장 주변 주민 2천여명, 탄가루 피해가 크다며 대책 호소

<해설>

세계여성의 날 88년을 맞아 여성관련 행사가 많았던 한 주간이었다. 여연은 올해의 여성인권상에 위안부문제에 공헌이 큰 일본인 변호사 도츠카 에츠코씨를 선정했다. "일본인 변호사로서 인권을 기만당한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힌 도츠카씨 말에 위안부문제에 무관심했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각 정당과 정치단체에 보낸 서한과 미국 국무부가 제출한 95년 각국 인권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시기가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다. 이 서한과 보고서에는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며 확고한 인권보장만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 주요 공판 안내 ○

- 3월13일(수)
강희남등 9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부 425호
장진성, 국보법, 오전11시, 서울 형사합의21부 311호
정민주와1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합의22부 425호
- 3월14일(목)
강중숙, 국보법, 오후2시, 서울 형사4부 418호
- 3월15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서울 형사단독9부 317호
김태년, 국보법등, 오전10시, 서울 형사합의23부 319호
김동국, 업무방해등, 오후3시, 서울 형사단독1부 418호
박문형, 업무방해등, 오후3시, 서울 형사단독3부 319호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주거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질적 개선을 주거불안을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그들의 주택을 개량보호해야 한다. -제1회 세계주거회의 밴쿠버 선언-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압담합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을 방문한 세계적인 노동운동가로 리첸(국제자유노련 사무차장)씨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구속된 노동운동가들은 당사국의 국내법이 아닌 ILO가 규정하는 정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노동부에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국제자유노련 가입신청과 관련해 방한한 국제자유노련(ICFTU) 조사단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민주노총 집행부 및 주요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울프 아습(국제건설노련 사무총장)씨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문제에 대해 “두 조직의 통합을 위해선 노총의 내부 개혁과 실천과정에서의 협조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조사단은 두 조직의 분열과 단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즈미(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씨는 “무엇보다 우선 한국정부가 ILO의 권고사항을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동안 민주노총의 국제적 노력이 유럽과 미주에만 국한되어 아·태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점과 한국내의 이견과 분열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 등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석범(위원장 직무대리)씨는 “두 조직이 현재도 하에서 성급하게 강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법개정투쟁 등에 있어 한국노총과 연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문제, 권영길위원장의 구속과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 반려 등 한국의 노동실태를 실사한 다음, 이들은 노동부, 노총을 방문한데 이어 서울구치소를 방문, 구속중인 권위원장도 면담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 6월 집행위 및 총회에서 민주노총의 가입건을 확정한다.

<국제자유노련(ICFTU)> 각국 노총의 국제적 연합단체로서 세계적 차원의 노

동현안에 공동대응하는 것을 주활동으로 한다. 세계 1백27개국의 1억3천만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만 29개국 3천3백만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경찰 한밤중 경원대 난입 전총학생회장 연행

고장현구씨 분신사망 사건 90일째를 맞는 경원대총학생회는 12일 오후 2시30분경 백승규(무역90, 95년도 총학생회장, 재직)씨의 연행에 항의하는 학내집회를 갖고 성남중부경찰서로 물러가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원섭 경원대총장으로부터 고발된 7명중 한 사람인 백씨는 11일 밤11시15분경 학교 부근 주유소에서 성남중부경찰서 소속 형사 6명에게 연행되었다. 연행과정에서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고,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팔을 비틀어 손목이 부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시각 전투경찰 2개중대가 학교정문을 봉쇄하기까지 했다.

백씨의 연행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서측은 3월2일자로 고발조치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7일 오전 9시까지 수사 2개로 출두할 것”을 요구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우편물 소인은 6일자가 적혀 있었으며, 출석요구 시간이 지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그리고 하루뒤인 8일 경찰은 사전전속영장을 발부받아 백씨등의 강제연행에 나선 것이다.

한편, 백씨의 연행직후 밤 12시경 그를 면회하려 갔던 김해성(고장현구대책위 집행위원장)목사가 경찰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현재 성남 인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민조씨 전제국씨등 고소

전두환씨등의 12·12재판도중 전씨의 세 아들 및 측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강민조(강경대 열사 부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법을 방문, 전제국씨등 세 아들을 비롯한 폭행당사자들에게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현재 사당의원에 임원직료중인 강민조씨는 고소장에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재판에서 죄를 누우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역사앞에 검거하사죄하라고 주장한 것은 정당한 요구였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은 행위는 마치 5·6공시절의 폭력을 재현한 것과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엠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2월말 「국제엠네스티」(AI)가 국내외 각 정당에 대해 “4월 총선공약에 ‘인권문제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약사항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런던의 AI 본부에서 각 당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비서실 팩스번호를 모두 알려줬다. ‘각 당에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소홀히 취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서한을 받았다고 하는 신한국당(대표 김윤환)의 행정실 신계용씨는 “서한이 도착했으며 당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공약에는 정치법 문제나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관련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 등에서는 그 서한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I는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경제·정치적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권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요 인권 침해 문제가 대

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권향상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권문제를 공약으로 선정하고 이후 차기 국회회기 때 법적 개혁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정 △정치법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이에 AI의 공개서한을 환영하고 나선 「진보정치연합」(공동대표 김철수 등) 이창수(국제국부장)씨는 “이번에 출마하는 김철수(성동갑 무소속출마), 노회찬(진정연 공동대표, 강서을 민주당출마)씨 등 제야단체소속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AI 인권공약 실천후보자 모임’을 만들어 인권과 관련된 공약 마련과 선전물을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발전소 5,6호기 백지화 영광주민들, 촉구 집회

「영광해발전소추방협의회」는 12일 오전 영광해발전

소 정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영광해발전소 5,6호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고창, 영광 군민인대회의 출범식 및 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육상과 해상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칠신마다 앞에서 벌어진 해상시위에는 70여명의 선박이 참가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협의회 사무국장)씨는 “해발전소에 의한 수온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까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며 따라 서 어민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서야 어업을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영광해발전소 5,6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될때까지 투쟁할 것 △기존 영광해발전소 4개호기의 가동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배상 △해발전소의 신규 추가건설을 저지할 것 등을 결의했다.

<바로 잡습니다>

12일자 2면 ‘티벳의 날’ 기사 자료제공자는 ‘민주정치서 이면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서야 어업을 할 수 있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희, 여연)은 오는 4.11 총선에서 각 정당에 여성관련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여성정책의 기준을 갖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 신설 △부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폭력특별법 실효성 있는 개정 △여성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성, 건강권과 모성보호 보장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인정하여 국민연금 및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에 가치 반영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시설과 보육시설 확충·지원과 학교급식시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특히 여연은 지난 4년간 신문에 보도된 가정폭력 사건만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분노로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폭력 끝에 피해자를 살해 또는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들이라며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정무장관 제2실은 그 기능상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위한 법적정권과 예산 및 인력면에서의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담부서로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1%에 불과하다며 경제규모와 복지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5%의 복지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연의 남인숙사무국장은 “10대 여성정책은 여성단체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이었다”며 “다만 이번 총선을 통해 관련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V호 판매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를 판매중입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95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주요내용: 95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 5.18특별법 관련 기사 등

· 한정분판매 값: 5천원 (단, 독자가 아닌 분께는 1만원에 판매)

<인권하루소식> 600호 발간!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이행,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주거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철거로 주거 불안을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그들의 주택을 개량보호해야 한다. -제1회 세계주거회의 밴쿠버 선언-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국중공업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금속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한 가운데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13일 오후 1시 종묘공원 앞에서 ‘조세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이를 시발로 14일까지 종로·명동·서울역 등에서 조세개혁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13일 금속노조 대표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YMCA과 영풍문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명동성당 앞에서는 현 조세제도의 불공평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벌였다. 또한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지며 오후 1시에는 계양전기 앞에서 노조단합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민주금속연맹 손나구(교선국장)씨는 “이번 상경투쟁에서는 불공평한 조세제도

개혁과 함께 오는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납세실적을 공개하고, 각 정당이 보다 진전된 세계개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9일 민주금속연맹이 개최한 “봉급생활자와 조세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상영(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씨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7%이었는데, 이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배 이상 높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5조7백83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나 법인세, 부가세를 크게 웃돌았다”며 형평에 맞는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직접세가 70%인 일본과 달리 우리는 45.7%에 불과하고, 간접세가 54.7%에 이르렀으므로 나타나, 세금구조 자

재가 소수 부자의 세금포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금속연맹은 △근로소득의 분리과세와 3~30%로 세율 인하 △부가가치세율을 10→8%로 인하할 것과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적용제외를 통한 간접세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 채권등 양도차익을 종합과세로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금속연맹측은 “이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 사회단체와 연대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세계개혁을 이번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13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동당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데 의한 것이다.

94년 6월 철도·지하철 사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사진구속영장을 받던 권위원장은 수배중인 95년 11월11일 민주노동당 총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11월23일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94년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박시환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정했다 <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있다.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물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13일 낮12시 서초동 동호빌딩(소유주 노호준씨)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동호빌딩 및 노씨의 친인척 명의의 재산, 분산은닉 또는 위장의 의혹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추가수사와 정부의 추가 추정보전신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동호빌딩은 92년 노씨가 동생을 통해 조카 노호준씨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수한 건물로서, 추정보전명령이 가능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추정보전명령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보사회 월례 공개강좌(2회)
주제: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강사: 정길탁(인터넷 전문가,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일시: 3월16일 오전 12시부터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인권정보자료실장 강기훈(☎715-9185)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강희남(77, 목사, 범민련 의장)씨 등 범민련 관련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김철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몇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전두환 일당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 바쳐 희생한 범민련 관련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법의 재판이 불평등한 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나를 피고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만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동지들을 위해 객관적인 변론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두진술에서 강씨는 “남한정부는 남북공동성명과 90년 UN동시 가입을 통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다. 따라서 범민련에 적용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는 혐의는 말도 안된 2다”고 주장했다.

이천재(66, 범민련 상임부 의장)씨는 “구속된 관련자들의 평균연령이 70세를 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을 한 겨울에 구속한 행동은 반인륜적”이라고 비난하며 “검사가 말한 기소이유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한 국보법은 세계의 여러 인권단체에서 철폐할 것을 권고한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재판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민련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노선에 동의해 활동한 0점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북측본부와 수차례 팩스로 회합·통신을 피한 점 △남한 정부를 신식민지 매국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점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한 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재판을 받은 범민련 관련자들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특히 주명순(74, 범민련 중앙위원)씨는 여경찰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서 나올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못해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2시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22개 사회·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중운동탄압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오전 전노련 사무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군사독재 잔재 완전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한 민중 실천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번 실천선언운동을 통해 △반민주악법 철폐 △민중운동탄압 중지 △미국개입을 비롯한 5·18 진상 철저히 규명 및 책임자, 협력자 전원 처벌 등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21일 명동성당에서 국민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조상수(전국노운동)씨는 “향후의 실천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으로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전화: 715-9185**

<자료>

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우리는 11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12와 5·18사건의 첫 재판에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참회와 속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잘못된 역사의 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반대로 전두환, 노태우씨는 범민련 관련자들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특히 주명순(74, 범민련 중앙위원)씨는 여경찰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서 나올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못해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2시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한 5-6명을 연행, 격리하였으며, 방청권을 제한함으로써 50만원에 이르는 압표가 난무해 피해자와 고소, 고발인은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친인척만 재판에 참가하게하여 학살자를 직간접적으로 엄호해 주었다. 우리는 어제 법정에서 일어난 강민조씨 폭행 사건과 피고인들의 방약무도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차 재판에서의 궤변과 망언을 광주시민과 국민앞에 공개 사과할 것이며 더 이상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일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반성과 속죄 없이 계속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면 법의 심판이 앞서 국민의 손으로 처벌받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현정권에게 학살자들을 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방청권을 피해자와, 고소 고발인에게 선차적으로 배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정한 과거의 청산을 위해 12·12와 5·18관련 피고소, 고발인 진원을 사법처리하고 미국의 개입등 모든 진상을 즉각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 채 학살자들을 엄호하는데 급급한다면 95년 못지 않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현정권과 피고인들의 자세를 똑똑히 보기위해 다음 재판에 대거 참석할 것이다. 96년 3월12일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이달의 주제-주거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주거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철거로 주거 불안을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그들의 주택을 개량보호해야 한다. -제1회 세계주거회의의 밴쿠버 선언-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가해자 살해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0.0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전화)는 15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여성 정책공약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고, 오는 16일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간다.

구타 시작 결혼 1년 이내 67.5%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정내 폭력문제는 바로 '사회문제'로 직결되는데, 최근 들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실제 여성의전화는 연간 1만5천여건의 상담을 받는데 이중 아내구타문제가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2년간 구타문제로 직접 방문해 면접상담을 한 7백29명의 통계를 보면 33.71%가 월1회이상 4회미만으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대답했다. 주1회 이상 6회 미만으로 거의 매일 구

타를 당한 경우도 23.86%를 차지했다.

또한 구타 시작시기를 보면 결혼 1년이내가 67.50%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여성의 전화 정춘숙인권부장은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해, 초기단계에서 국가등이 개입해 문제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남편 절반이상 아동학대

특히 아내폭력은 아동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51.21%가 아이들도 구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타 시작시기는 한살 이전이 17.20%, 1살에서 3살 사이가 23.66%를 차지했으며, 구타의 정도를 보면 손으로 구타한다가 50.78%, 무차별 구타한다 25.39%, 최초리로 구타한다 15.54%, 내던진다 5.70%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중 50.6%가 구타가정에서 자랐다는 통계는 '가

정폭력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장은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법에는 아내 구타나 아동학대를 제지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몹시 희박하다"며 시급히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정안에서 해결하라"고 말한 경찰이 77%를 차지했다는 통계수치는 사회통념의 벽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사사법적 통제방법

또한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지속적인 폭력의 재발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통제방법'이 필요한 지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아동학대, 아내학대, 노인학대에 대해 의무신고 제 도입과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개입 및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의무로 부과해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흉기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보호가처분 제도 필요

13일 인제히 각 당에 보낸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을 우선 들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피난처 운영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정보호처

분'조치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을 일련행사 처분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 명령'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한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특별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 확보까지 보고 있다.

형사사법적 통제방법

또한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지속적인 폭력의 재발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통제방법'이 필요한 지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아동학대, 아내학대, 노인학대에 대해 의무신고 제 도입과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개입 및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의무로 부과해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흉기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정보화사회와 인권' 강좌 두번째

인 · 터 · 넷 · 특 · 강

- ☐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 일시: 3월16일(토) 낮12시
- ☐ 인터넷의 현황·전망·활용가능성
 - 일시: 3월23일(토) 낮12시

·강사-정길락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715-9185)

최근 1년간 구타의 빈도

	명수	%
첫 구타	8	1.52
월 1회 이상 12회 미만	176	33.33
월 1회 이상 4회 미만	178	33.71
주 1회 이상 6회 미만	126	23.86
주 7회 이상	10	1.89
기 타	29	5.49
계	527	99.80

자료제공: 한국 여성의 전화

광주로 미국 실체 드러나, 한미협정 개정돼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드러나고 불평등한 한미협정협정 개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국내 민간단체와 각 대학의 반미투쟁이 새로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14일 오후 마로니에 공원에서 5백여명의 시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광주학살 지원 규탄 및 한미협정협정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갖고, △광주학살개입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정부의 광주문서 공개 및 진상규명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 및 불평등한 한미협정의 전면 개정 △미군기지의 반환 및 사용종인 기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대외교 청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의 광주개입과 관련 미국의 개입은 한반도에 자국의 영향력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계획적 사건이었으며 그 속에서 선택된 인물이 전두환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광주를 통해 미국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미국은 즉각 이 땅을 떠나야 하며 김영삼정부도 더이상 의세에 의존하거나 미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날 무렵엔 한미협정협정서에 대한 화형식이 거행됐는데 한미협정 전면개정 촉구 연설에 나선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잘못된 불평등조약을 바로잡는 것은 국제적 차원의 역사 바로 세우기이며, 이는 민족자주성 회복운동과 인권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용환 평택시민모임 회장은 미군기지 되찾기와 관련 현재 무기한으로 되어있는 미군 주둔을 일정기간으로 명시하고 주둔기간 동안 기지 임대료를 징수해야한다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미대사관을 방문, 외무부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면에서 계속)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다. 피해자들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법적추진의 지원(41.02%) 정신적 심리적 지원(21.29%), 피난처의 제공(19.52%)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15.99%)으로 나타났다.

북경여성대회 가정폭력 대책 마련 명시

외국의 경우는 70년대부터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영국의 경우 76년 매트는 부인들을 위한 특별법 '가정폭력 및 혼인소송법'을 제정했고, 미국의 경우 73-83년 10년 동안 47개주와 워싱턴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

남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작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중 인권분야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명시한 바 있다.

5월 청원서 제출

오는 4월10일까지 벌어지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은 여성의전화와 각 지역 11개 지부에서 진행되며, 서명작업에도 지부별로 사전집회, 가정폭력방지법 공개강연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미 여성의전화는 94년부터 아동학대에방협회등 15개 단체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의 전화는 한달간의 서명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미대사관을 방문, 외무부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행사와 동정○

- ☐ 연희동 전두환 집 항의방문 및 고발장 접수
 - 3월16(토) 오전11시 · 연희동 우정스포츠허터 앞
 - 주최: 유가협(☎ 763-4700),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 ☐ 중국 인권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3월16일(토) 오후4시-6시 · 탑골공원
 -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의견서 설명회
 - 3월18일(월) 오후7시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주최: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715-9185)
-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시안 전문가 간담회
 - 3월18일(월) 오후5시30분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최: 한국여성의 전화(☎ 269-2962)
- ☐ 시범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발족식
 - 3월20일(수) 오후5시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 문의: 참여연대(☎ 796-8364)

☐ 어린이도서연구회(회장 오춘식)가 창덕궁 근처 동원빌딩 510호로 이사하여 오늘(15일) 오전 11시 집들이를 갖는다.
새 주소: (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510호 전화: 3672-4447 팩스: 3672-4448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간첩 시나리오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지법(317호 법정)에서는 소위 '간첩 김동식사건'에 연루된 허인회씨의 3차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허씨와 김동식씨의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했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조작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한성옥(식당종업원)씨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른채 형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두 번의 진술중 한 번은 자신이, 또한 한 번은 남편이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형사들이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기도 하다는 진술만 했다”고 밝혔으나, 수사기

관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한 씨가 실제로 김동식씨와 식사하는 피고인을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증인 박미아(다방 주인)씨도 “경찰이 제시한 김동식씨의 사진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이와달리 진술서에는 김씨를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첫번째 증인 이훈개(국회 방호조장)씨의 경우, 진술서 일부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와 변호사에게 연달아 반대신문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박미아씨의 증언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조사가 있기전 다방으로 박영희씨라는 여인이 찾아와 취직을 했는데 4-5일만에 그만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 경찰과 함께 나타나 경찰로 여겨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이후 재판전개에 변수로 등장할지가 주목된다.

'간첩불고지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시작된 이번 사건은 관련 혐의자들의 불구속 결정에 이어 몇몇 증인들의 예기치 못한 증언으로 당초 수사기관의 시나리오와는 어긋나게 진행되는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모두 검찰측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총장·학생처장 고발 경원대생 248명

14일 위영석(총학생회장, 제직)씨를 비롯한 경원대생 2백48명은 김원섭총장과 이석규 학생처장을 살인미수 및 교사협의로 수원지방법 검찰청 성남지원(담당검사 황인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2월26일 정문철담 철거과정에서 농성중이던 재학생 박대성(도시계획 3년)씨를 10여미터 높이에서 강압적으로 낙하·상해시켜, 박씨에게 살상의 위협을 가한 혐의와 그 과정에서 학생회 소유의 일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엠프, 개인가방 등이 파괴, 분실, 도난되게 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다.

학생들은 고발에 이어 비디오테이프를 비롯한 증거자료를 준비중이며, 학내에서는 성남지역 차원에서 서명작업을 통해 2차 고발운

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전씨 세아들 즉각 처벌 유가협동 고발장 접수

15일 오후3시 유가협(최장박정기)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등 사회·노동단체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씨 세아들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오늘 오전11시에는 연희동 전두환씨 집앞에서 '폭행사 처벌처벌 및 대국민 사과 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노맹 관련 또연행 김정희씨 임신 3개월

14일 오후5시경 진보정치연합 울산지부 사무장 김정희(부산대 86)씨가부산시경에 연행되었다. 사노맹관련 자측은 김씨 역시 '사노맹 가입혐의'로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희씨는 현재 임신 3개월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휴가중이었다.

한편 올해들어서만도 사노맹관련사건으로 연행된 사람은 모두 17명에 이르고 있다.

인권위원장 이기욱변호사 전국연합 5기 중앙위

지난 14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제5기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인권위원장에 이기욱변호사를 선임했다.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해고노동자의 수가 2백50여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 투쟁위원회」(공해투)를 구성하고, 11-16일까지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오늘 오전 해당식을 갖는 이들은 지난 일주일동안 연일 철도청, 서울지하철본사, 정부종합청사, 정보통신부 등에 항의방문을 벌였다. 공해투측은 이번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1차 투쟁을 통해 정부의 탄압을 폭로하고, 정부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자간의 연대대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 해고자 245명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교사, 공무원 등을 포함해 1백40만명인데, 이중 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 14만명,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3만5천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다. 정부의 신경영전략의 하나인 인력감축 정책은 오히려 공공부문 투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해투에 따르면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수는 14일 현재 2백45명으로 이중 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해고된 노동자는 1백62명이다. 이는 6공정권 5년동안 해고된 83명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이다. 현정부하에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공해투측은 “현정부 출범이후 철도, 지하철, 한국통신등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활성화되었던 반면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정책은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량해고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량해고, 구속 남발 지난 94년 6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력을 투입한 후 이에 반발하여 철도·지하철 노동자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자 1백여명의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작년 5월에도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규정한 뒤 31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95년 대사면 때도 의료보험통합등을 요구하다 징계해고된 노동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로조건등의 개선은 노동자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신경영전략을 도입해 인원을 축소하고, 서비스개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영이윤만을 창출하려고 한다”며 문제제기했다. 공공부문은 이윤창출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의 문제인데도 이를 재벌에게 넘겨 있다는 지적이다. 제2기 지하철 분리, 의료보험 통합반대 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노조활동보장 공약으로 총선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문별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해투 역시 각 후보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 ‘해고노동자 복지’이라는 문 제보다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이 그것이다.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여연)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전개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연은 출범당시 공약사항에서 내세운 여성정책의 실현정도, 여성계의 의견수렴과 국제기준과의 비교 등을 틀로 삼았다고 밝혔다<편집자주>.

□여성의 고용안정 현황과 과제 -여성민우회 정강자 정부는 신경제정책의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고령자·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고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여성노동자(93년 37만명), 파견제여성노동자(94년 66만명)의 증가로 여성상용노동자가 감소되고,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여성고용구조를 악화시켜 고용불안을 가속시켰다. 그러므로 ‘유휴인력의 활용’보다 ‘산업인력의 확보·개발’의 관점에서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현황과 과제 -여성의 전화 이상덕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 성폭력·매매·출신대문제 등은 평등과 보호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뿐이다.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지택연 남미영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육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정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핵심주체인 아동이 보육과 방과후지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성농민의 현황과 과제 -전봉 윤금순 정부정책의 공백지대! 이것이 김영삼 정부의 여성농민 정책 평가의 핵심이다. 농촌여성의 농업종사 노동시간은 도시의 전업취업 여성보다도 더 많은 1일 9.8시간이다. 생산농민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은 과도한 노동과 가중되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 이 세 가지 하나 달라도 갖지 못한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농민을 농업생산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생산주체로 고려한 농업생산 조건 개선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정책총괄평가와 주무부서의 문제 -여연 이미경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도입에서 ‘여성의 시각’이나 저소득층의 시각이 의외시되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장관제2실을 여성부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여성국(과)이 신설되어 중앙부처의 사업을 연결해야만 여성의 지위와 인 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사회와 인권’ 강좌 두번째 인·터·넷·특·강

□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 일시: 3월16일(토) 낮12시

□ 인터넷의 현황·진망·활용가능성

· 일시: 3월23일(토) 낮12시

· 강사: 정길락(「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715-9185)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지난 1월10일 홍콩에서 열린 '제22차 홍콩 완구·게임 박람회' 전시장에서 한국인 박우영(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를 포함한 여섯 명의 노동운동가가 홍콩 경찰에 불법연행 되었다.

박씨는 당일 다른 연행자들과는 달리 보석금 10만원 을 내고 풀려났으나 3월15일 경찰에 다시 출두하여 2달간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기소되었고 오늘 1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유죄 판결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큰 무리가 없는 경우 보석금으로 해결이 될 것"이며 "홍콩 정부가 중국 반환을 앞두고 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히, 산업안전 문제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캠페인을 벌여 오면서 개척하게 되었다. 1월에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노동·여성·산업 재해 희생자와 그 지원단체가 참가해서 나라별 보고와 산재 희생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같은 기간 세계완구 기업가들은 서로의 무역 조정을 위해 '무역발전협의회'의 회의를 열었고 회의의 바람회장 앞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기업측이 지켜야 할 내용을 현장으로 작성, 이것을 기업측이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AI 한국지부, 16일 중국캠페인

중국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는 지난 16일 캠페인을 갖고 국내에서의 중국인권개선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AI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침해 △노조결정권과 노조선택권의 제한 △고문과 사형제도의 남용 △티벳에 대한 인권 탄압 등 중국인권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종교, 사상, 정치의 자유 보장과 양심수의 석방 △행정구금제도의 폐지와 고문 및 가혹행위, 사형제도의 종식 △국제 인권단체의 조사활동 보장 △UN고문방지조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중국대사에게 발송했다.

한국지부는 중국인권개선 활동의 하나로 UN인권위에서의 중국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한국정부가 찬성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중국진출기업에게도 투자를 비롯한 모든 사업에 있어 중국인권문제를 연계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이 중국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AI의 활동에 의혹의 시선을 두자, 이에 대해 오완호(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중국인권개선운동은 이미 작년부터 계획된 일로 정치적 의도나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어떠한 의혹의 시선에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완구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93년 5월 홍콩 투자 기업인 태국과 중국의 완구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백명의 노동자가 사망, 화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홍콩의 사회단체들이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그 중 특

주요 공판 안내

- 3월19일(화) 전재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 단독4부 416호, 오후4시
- 3월20일(수) 김명근외 2,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양구현, 일반교통방해 등, 서울지법 형사 단독4부 421호, 오전10시 신진
- 3월21일(목) 성민주의 3,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2부 425호, 오전11시
- 3월22일(금) 전창일의 2,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3부 311호, 오전10시 박충렬,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317호, 오후2시 김대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3부 319호, 오후2시 유현수, 국보법, 서울지법합의22부 425호, 오전10시 신진

<현장 스케치-MBC 파업 6일째> 언론이 정권 시너 되어서는 안돼

차가운 시멘트 바닥도, 매서운 바람도, 방송개혁을 요구하는 문화방송 노조원들의 열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몇몇 낮익은 사람들의 얼굴은 TV에서보다 오히려 밝고 즐거워 보였고, 그들의 '방송독립' '강사장퇴진'의 우렁찬 함성은 시종 자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전면파업 5일째인 18일 오후, MBC본관앞 마당에는 제주 등지에서 상경한 전국 19개 지방 MBC 노조원들이 속속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92년이후 4년만에 또다시 방송개혁의 기치가 전국을 뒤덮는 자리였다. 열띤 환호속에 단상으로 오른 최문순(문화방송노동조합연합회 비대위 위원장)씨는 5백여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며, 구속되는한이 있더라도 강사장의 퇴진과 방송독립 쟁취의 날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용모(언론운동위원장)씨는 "더이상 언론이 정권의 시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투쟁에 외부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파업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언설에 나선 대표자들은 물론,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의 표정 하나하나엔 언론민주화의 의지와 사명감이 당당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게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사진전, 20일부터 2주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이번달 20일부터 4월2일까지 연강홀 코담 포토살롱에서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 사진전은 사진작가 이정순(30)씨가 1년여 동안 우리 사회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수용시설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전시시간은 오전10부터 오후7시까지이다(문의사항:521-5364).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 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지난해 11월15일 간첩 김동식으로 부터 무전기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 김태년씨가 16일 정봉진판사(서울지법 형사23부 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김씨는 보석결정이 된 것이 뜻밖이라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김씨는 "그동안 밖에서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안기부에서 받은 가혹행위에 대해선 "함께 구속되었던 박충렬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무죄로 석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창의 짙막한 서신이 사회자에게 전달됐다. "...회사는 조직의 원 최고수와 가장확립을 위해 이번 불법집단행동 참가자들에게 대해서는 회사 보수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조만간 중징계를 하겠다는 사장의 경고장이었다.

기사 제보
전화 715-9185
전송 715-9186

주/간/인/권/호/름 (96년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

<11일 (월)>
전·노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사건 관련 첫 공판/법정서 전씨 가족들, 강민조씨 폭행 전치 2주 상해/80년 해지 언론인 1백20명,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행정심판 공보처에 청구

<12일 (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보장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에 요구/노동부, 인권침해 논란 산업연수생제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13일 (수)>
민주급속연맹,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권영길씨 보석결정/김정숙 정무제2장관, 유엔회의에 참석 위한부 국가배상 촉구

<14일 (목)>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언론인보호위원회, 95년 22개국 1백82명의 언론인들 투옥됐다고 발표/문화방송노조, 사장언임과 관련 파업에 들어가기로/서울지법, 형사소송법 등 보석·제정 신청 처리시킨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15일 (금)>
허인회씨 3차공판서 검찰측 증인이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 후세인 통치후 1만6천여 명이 실종됐다고 발표/경원대생 2백48명, 총장·학생처장을 성남지원에 고발

<16일 (토)>
유가협회원들 전두환씨 집 입구에서 전제국씨등의 사과와 사법처리 촉구/서울지법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 강화키로/부여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씨 보석

<해설>=====
전두환·노태우씨가 함께 재판정에 선 첫공판이 열렸다. 방청권이 고액으로 거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 공판은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또 다시 기가막힌 사건을 보여주었다. 강경대군의 아버지가 전씨의 세아들과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도둑과 살인자들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뉘우치기는커녕 당당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 강민조씨가 "너희들이 스타냐"는 외침에 폭행을 가한 것이다. 아들은 군부독재에 의해 살해당하고 강씨는 독재자의 아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이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 사회하거나 뉘우칠 가능성이 없는 독재자들을 더 이상 두고볼 수는 없다. 그들의 거만함을 응징할 수 있는 길은 재판이 오직 국민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할 때만 가능하다.

민주노동의 권영길씨와 부여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두사람 모두에게 뜻밖의 일이었다. 이러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서울지법에서 인신구속과 영장발부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보다 인권의 영역에 있어 선진적인 법원이 되길 바란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며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8일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개회했다. 4월26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이번 인권위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년전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발전 격차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동티모르사태, 버마, 스리랑카의 타밀반군(LTTE)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인권후진국' 오명 못 벗을 듯
한편, 이번 인권위에서는 한국인권상황을 조사한 최초의 인권보고서가 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국내 인권단체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 유엔특별보고관은 작년 6월 한국을 방문,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대한 비판과 장기수, 김중립, 양심수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문·자의적구금 등에 대한 유엔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국이 '인권후진국'의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아라 수와미치의 정신대관련 보고서도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문제가 제기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국제인권협회(사무총장 Robert Chambers)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는 공동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선준영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이성훈 씨등 한국인권단체협의회(민가협, 민변 등) 6명과 장소영(참여연대 국제부장) 씨 등이 참가, 회의기간중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와 노동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작년 51차 인권위원회때와 마찬가지로

매주 1회 제네바 특파원을 통해 52차 인권위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할 예정이다. 경원대 학부모 모임 결성 대책위, 중재위 제안
경원대(총장 김원섭) 학부모 12명이 18일 낮12시에 모여 경원대 사태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공동대표 백관후)을 결성했다. 백관후(백승규 정계학생의 아버지)씨는 "92년부터 학교측에 의해 자행된 징계와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초강경 대응에 더 이상 피해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식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성식을 마친 부모들은 이석규 학생처장과 면담을 갖고 "징계조치가 있을 때 부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

지 않은 것은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9일 '사학비리·경쟁고문 희생자 고장현구급장래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등, 대책위)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무리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대화와 양보보다는 징계와 고발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경원대 내부 힘으로는 사태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고 대학교육과 경원대를 살리기 위해 '경원대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며 경원대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바라는 많은 인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원대총학생회측은 작년말 분신·사망한 고장현구(전기공학과 4년 재적)씨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농성 투쟁을 벌여왔는데, 이 농성으로 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며 백승규(95년도 총학생회장)씨등 7명이 학교측의 고발로 구속되거나 수배상태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 후보 14명, 총선에서 국보법 철폐 등 홍보

진보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주노동당(위원장 권영길) 등 사회·노동운동단체의 총선 출마예정자 함윤경 씨등 14명은 19일 오후1시 세실레스호텔에서 '국제연대(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가칭)'을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씨등 4명은 이번 총선에서

는 △각종 선거후보물예 AI의 인권 제안과 요구 명기 △유세시 인권 관련 사항 포함 △제 정당·사회단체에 AI의 제안과 요구 홍보 △AI의 요구에 반하는 반인권 후보에 대한 반대운동 전개 △선거후에도 AI와 연대·협력하여 국내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실천강령으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동,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15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단체측이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평가와 함께 여성관련 공약사항을 들고 나오는데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에서도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민주노동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동은 19일 가맹조직 및 산하조직에 일제히 의견조사서를 보내 전국 2백53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15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차개입금지조항 삭제, 해고노동자 복지등, 15개문항으로 나뉜 질문지에는 선거구, 소속당과 후보자 명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성향을 분명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은 이 조사결과를 집계후 4월초부터 선거직전까지 홍보를 벌여 조합원 및 노동자들의 총선후보선택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결과발표를 통해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요구를 쟁점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노동은 가능한한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이에 소극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개·규탄할 것을 밝혔다. '15대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한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서'를 보면 크게 7개항으로 나뉜 찬반을 묻고 있다. 7개항은 ①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개정 ②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계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동금지조항 삭제와 민주노동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차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부분으로 나뉜 찬반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세계개혁부분은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근로소득세 세율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8%로 인하 등을, 교육개혁부분에서는 △국공립탁아소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만5세 아동유치원 의무교육화 △초등학생 무료급식 제공 △2천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명선 축소 등이다.

로 발표했다. 김철수씨는 "현재 국회의 원 총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번 15대 총선이 우리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실질적 계기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일 AI는 각 정당과 정치단체에 국가보안법 개정과 제3차개입금지법 등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며 이번 선거에 인권관련 공약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발기인 명단> 김기수(진보정치연합 대구 서울지부 위원장, 대구서울)/김명희(전 서울지하철 노조 위원장, 서울 성동을)/김병태(진보정치연합 광주지부 지도위원, 광주등)/김종박(노동정치연대 안양지부장, 안양 단안)/김철수(진보정치연합 공동대표, 서울 성동갑)/김홍현(전 전국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서울 송파을)/박순보(전교조 부산산지부장, 부산 연제)/손인법(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산지부 위원장, 전북 익산갑)/윤상규(진보정치연합 구미지부 위원장, 경북 구미갑)/이병무(전문노련 부위원장, 경북 김천)/이성우(전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사무처장, 부산 진갑) 정형주(성남청년회 회장, 성남 중원)/최윤(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대표, 강원 춘천갑)/함윤경(관악 독도 지키기 운동본부장, 서울 관악갑)

부패방지법제정 서약 참여연대, 총선후보 대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본부장)는 19일 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 1천4백여명에게 "검은돈 배격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 이는 15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 뒤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과 '부패방지법'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이후 서약자 명단을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으로 언론에 알리고 마크와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 모두 과거 활동 문제 심야

이미 활동을 중단한 사노맹 관련자들에 대한 검거와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2명이 구속되는등 지난 8년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4백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수감중인 사람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지난 89년 출범을 선언후 조직적인 활동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으나, 90-92년까지 세차례에 걸친 대규모 검거과정에서 중앙위원장 백태용씨를 비롯한 핵심조직원들이 구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구속자들은, 활동을 정리하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공개적인 재야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과거의 활동사실이 나 조직을 재건하려 했다는 이유로 검거구속한 것이다. 계속되는 구속과 관련, 사노맹사건 관련자 모임인 '민들레'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일일 호프를 열기로 했다. 23일 오후3시부터 장소는 한양대학교 조교식당 (문의 전화 447-5651).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공공노조 무기한농성 정보통신부, 신한국당 항의방문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원지복직투쟁위원회’(공해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부 항의방문에서 발생한 불법연행사태를 계기로 그날 가질 해단식을 ‘폭력경찰만행규탄 및 해고자 원지복직 쟁취결의대회’로 바꾸고, 무기한 투쟁에 들어갔다.

18, 21일 정보통신부와 신한국당 항의방문을 벌이며, 23일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때까지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MBC파업, 4·11총선과 연계해 연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연행된 노동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공해투는 지난 11-16일까지를 제1차 원지복직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했으며 15일 오후 2시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재) 앞에서 ‘통신주권수호·통신분할반대·한국통신해고자복직’등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4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오후 2시 30분경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정보통신부에 들어서려하자 2백여명의 경찰이 몰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하고, 농성자 28명을 불법연행했다.

이날 연행된 노동자 대부분이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

한 경찰은 오히려 농성자들을 폭력행위자로 몰아 사법처리했다. 연행 48시간 만인 17일 오후 3시경 박표균 씨등 3명이 구속되는 등 연행자 28명 전원이 벌금 이상의 조치를 당했다. 공공노조에는 한국통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전국병원노련, 전국의료보험노조, 철도노민추 등 6개 노조가 속해있다.

<구속자 명단>

구속:박표균(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위 상임위원, 의보노조해고자, 강서경찰서) 박현영(의보조직국장, 의보노조해협대표, 양천경찰서) 남진우(전기협투쟁 철도해고자, 미확인) 불구속:이상춘(병원노련 부위원장)씨 외 7명, 구류 8명, 벌금 9명

양규현씨 재판연기

2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규현(민주노총 부위원장)씨 1차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권영길위원장의 1차 재판에서 심리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특별기일을 잡아 재판을 갖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 2월 1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3차 개입협의로 구속되었다.

자료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인권침해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이하의 문제:(a)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 외채, 경제조정정책이 인권의 향유와 발전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b)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이에의한 인권실현의 장애(3월25,26,28일,4월1일 심의/12일 결의안 채택)
- 발전권 실현
-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나 점령하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의 적용
-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a)고문 및 가혹행위 (b)고문방지협약 비준 (c)실종문제 (d)고문방지협약 선택의 정서(4월 3,4,9일 심의/19일 결의안 채택)
- 위원회 활동방식을 포함한 인권증진방안:(a)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의 접근방식 (b)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민인권기구 (c)유엔인권센터의 조정역할 (d)다량탈출과 난민(4월9,10일 심의/19일 결의안 채택)
- 나라별 인권침해, 특히 식민지와 종속국:(a)키프로스 (b)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위원회 결의 8항,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335항과 1503항)(3월27일 4월11,15일 심의/23일 결의안 채택)
- 이주민 인권보장 및 향사수단
-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투쟁을 위한 행동강령
-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 유엔인권기구에 준해 설립된 기구들의 효과적 운영
- 47차인권소위 보고: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
- 민족, 인종, 종교, 언어에 따른 소수자들의 인권
- 인권분야에서의 자문서비스
- 종교나 신념에 의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종식에 관한 선언
- 인권활동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초안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a)어린이·청소년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b)인신매매, 대중에 관한 특별보고 (c)인신매매, 대준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d)위의 사항에 대한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4월 2,17,18 심의/24일 결의안 채택)
-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4월18,22일 심의/23일 결의안 채택)
- 소수자보호 및 차별금지소위 위원선출
- 53차위원회 임시의제
-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52차위원회 보고서

한편,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한국 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는 의제 8항 심의때 발표된다.

고 장현구씨 분신사망 1백일을 맞이하며

"5년동안 계속된 징계·고발·구속, 그래도 끝까지 싸운다"

학생회관이 없는 대학교. 얼마전까지만해도 밤 10시

만 넘으면 강의동 불이 꺼지고 수돗물이 끊기고 현관문이 잠기던 학교, 이곳이 바로 성남에 위치한 경원대학교(총장 김원섭)이다. 전교생 7천여명의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싸움이 벌써 5년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들어 2명 제적, 6명 무기정학 등 중징계, 7명 고소·고발이 내려진 상태이다. 이어 지난 3월14일에는 경원대생 2백48명이 김원섭총장과 이석규 학생처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로 고 장현구씨 분신사망 1백일째를 맞는다. 아직까지 시신 안장조차 하지 못한 채 경원대 사태는 안타깝게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신·사망한 장현구(당시 27세 경원대 제적)씨의 죽음은 그저 한 젊은이의 죽음이 아니다. 92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는 학내 문제로 학교측이 학생회간부 10여명을 폭력, 방학,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50여명을 무더기로 중징계할 때 고소등 징계조치를 당했다. 또한 같은해 성남경찰서에 연행되어 불법수사를 받았고, 그뒤 감옥에서 정신이상증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직후 성남지역 재야단체와 경원대 총학생회, 동문들을 중심으로 「사회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 장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학 목사, 장현구대책위)를 꾸려 진상규명과 고문경찰, 당시 장씨를 폭행한

교수들의 보직해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

학교측의 대화협치

장현구대책위는 곧바로 학교측과의 대화협상에 들어가지만, 학교당국은 "장씨의 죽음은 이미 제적 학생의 죽음이므로 학교측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어이없게도 입시원서 접수기간중 장씨 사건 홍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팽팽히 맞서가던 2월말 학교측은 김문홍씨등 6명을 감금과 업무방해등 혐의로 고소하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위영석씨등 2명을 제적하고, 6명을 무기정학 등 중징계한다. 이때부터 장현구씨의 분신사망으로 시작된 싸움은 '징계-> 고발-> 구속'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되고 화해와 협상이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된다. 이 사태를 보다못한 학부모들이 3월 '경원대학교 징계, 고발, 수배, 구속 학생 학부모 모임'을 만들었고, 성남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경원대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학교, 고발·구속조치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 경원대사태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늘 써오던 방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82년 단과대학으로 출발, 5년 만인 87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온 경원대 내부는 품을 대로 품아 버렸다.

경원대 학원자주화투쟁은 5년전인 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학기 등록금투쟁을 시작으로 학생회측은 학원자주화투쟁의 긴 싸움에 들어선다.

당시 7대 총학생회는 대 학생회협동조합 건설, 총학생회 등록금 자체수납투쟁을 주장했고, 70%이상 학생들이 수납투쟁 참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등록금 3%를 학생복지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성과를 따냈다. 그러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등록금 수납과정 수납등록금의 처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학생들의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은 그대로 8대 총학생회 선거 패배로 나타나게 된다.

91년 등록금투쟁 계기

'백색'의 8대 총학생회는 등록금문제 해결과정에서 지난 학기 학원자주화투쟁의 성과였던 복지기금 3%를 날려버린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해 6월 제9대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92년 총학생회 산하 상설적 특별기구로 제1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무더기 중징계조치가 내려지고, 꼭두새벽 학생처장과 보직대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93년 1학기 총학생회는 고소·고발, 제적철회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지만 지지부진하다가, 4월 들어 경원대 전문대 임시부정과 경원대 교수채용비리가 언론에 드러나게 되면서 재단측의 심한 타격을 가져온다. 결국 학생회측의 요구안 전체가 받아들여지고, 고소·고발에 대한 징계철회라는 성과를 남기고 정리된다.

94년 2학기들어 신입총장으로 김원섭씨가 들어서면서

교수, 학생간의 합의서가 파기된다. 결국 지난 성과물인 대학생협동조합이 파기·폐쇄되고, 학내단전 및 취사금지, 경기동부추련 사무실을 건어 내기까지 한다.

학교측 약속 일방적 파기 학생회측은 95년 1학기 들어 대학생협동조합 재건과 재단전입금 환수를 요구하며 등록금 투쟁을 벌인다. 1백8명의 복직투쟁에 4천여명이 넘게 참가하고, 총학생회 간부들은 석발투쟁으로 사기가 고양되지만, 학교측은 또다시 소장국면 때 민태호씨등 단대장 3인에 대한 징계·제적을 통보하고한다. 이렇듯 지난 5년동안 학교측의 무자비한 탄압과 고소·고발 사태, 간부구속등으로 징계·담보상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95년 2학기 학교당국은 일방적으로 학부제 발표를 강행하고, 그해 겨울 또다시 단전조치를 취한다. 여기에 맞서 학생회측은 학원자주화투쟁의 국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 장현구선배의 분신소식을 듣게 된다.

학자 모색중 분신접해

석달이 넘게 장현구씨가 잠든 연안실엔 향내만이 가득하다. 농성 90일을 맞던 날 저녁처럼 연안실엔 피곤한 몸을 누인 한 아주머니의 잠든 모습만이 보였다. 장현구씨는 비록 제적당한 학생이지만 그의 죽음원인에 상당부분 학교측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올바른 이성과 진실을 풀어나가는 것만이 모두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아시아 완구노동자 인권유린 마음 아파”

홍콩서 기소된 박무영씨, 7월 재판 재개

지난 1월10일 중국·태국 의 완구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홍콩에서 열린 '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농성을 벌이던 중 '공공장소 소란죄'로 홍콩 경찰에 기소된 박무영(38·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가 20일 귀국했다<3월19일자 하루소식 참조>

박씨는 1월10일 완차이경찰에 연행된 뒤 보석금 10만원을 내고 불구속 입건됐으며, 3월15일 1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경찰은 지난 경과에 대해 중간보고만 한 뒤 재판이 17일로 연기되었다고 통보했다.

17일 오전9시30분 홍콩 동부법원으로 출두한 박씨는 경찰측으로부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시 법률상담원에게 물어보니 “경찰이 조사한 죄에 대해 인정을 하면 50만원(한국

돈)에서 징역1년 정도의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관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고, 다음 기일이 7월18, 19일이라는 답변을 듣고 국선변호사를 선정 한 뒤 귀국하였다.

박씨는 “이번 사건은 홍콩 법무장관이 강력수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보기도문 사건이었다”고 전해한 뒤 “중국 반환을 앞두고 운동단체를 뿌리 뽑을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결과 유죄가 결정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 시간에도 완구노동자들이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해 완구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안전시설 미비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7월15일경 출국할 예정이며, 오늘 오전11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기수) 회원들과 함께 영국대사관을 찾아가

부당한 사법처리에 대한 항의시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민주노총, 경실련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4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를 갖고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12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6개 분야의 주제발표로 시작했는데, 먼저 노동분야 발표에 나선 권용목(민주노총 사무총장)씨는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분야 발표자로 나선 최규연(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내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중합토지세 과

표현실화 등의 세계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폐 △부패방지법 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앞선다. 그동안 제시된 각 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당은 민주당 하나뿐이며 신한국당이나 자민련의 경우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아예 공약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GDP 5% 확보’나 ‘환경규제완화 철폐’와 같은 반기업·반재벌적 성격의 공약은 어느 당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존정당이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할 전망은 별로 없어 보인다. 권용목씨는 “어느 정당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 자신만이 스스로의 권리를 대변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노동운동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제시된 정책과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 등 산적한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제언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낳았다.

한편,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대한 이들 정당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현장스케치> 장애인사진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사진작가 이정률(30)씨의 카메라에 잡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3월중순 오후, 종로5가 연강홀 코담포토살롱에서는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수색·전남·경남·강원·거제도·제주도등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 10여곳을 찾아다니며 이정률씨가 담은 그들의 모습에서 태어난 때부터 버려진 채 시설에 갇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이웃임을 알려주고 있다. 외진 곳, 사방이 막힌 수용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사진 바로 옆에는 삼육재활원, 뇌성마비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는 계가장애인의 모습이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바로 이점이 이정률씨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전국 인가시설 중에서 지역별로 장애인수용시설을 선정해 직접 찾아다녔다.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전국 어느 시설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은 통합된 사회로 나와야 한다. 오지로 보내지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그가 만난 장애인들의 세상으로 향한 유일한 통로는 텔레비전과 자원봉사자가 전부였다. 유배생활과 다를 바 없는 생활 속에서 이들은 무척이나 바깥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고, 한 번의 외출은 그들에겐 정말 하나의 ‘사건’이다.

그는 1년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려움도 많았다. 사진촬영을 거절하는 시설에는 몰래 들어가 찍기도 하는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점은 경비부족이었다. 자동차는 물론, 작업실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사진작업을 하고, 상업사진을 찍어 경비를 마련했다.

92년 개인전 ‘이 땅의 장애인들’을 시작으로 어느새 5번째 전시회를 갖는 그는 장애인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로는 유일하다. 대학 시절 장애인봉사동아리 ‘키비탄’에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된 그는 “내가 가진 능력중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일을 한다”고 말했다.

다음에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장애인들을 만나며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엮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3년 안에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을 찍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 구속 신한국당서 항의방문 공노대, 23일 결의대회

21일 낮12시 공공서비스 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공해투)는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해고된 것도 위울한데 구속이 웬말이냐’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통신·서울지하철 노조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도남회(한국통신 해고노동자)씨등 4명 대표자들이 신한국당 민원부장을 만나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지난 1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

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상춘(병원노련 부위원장)씨는 “기대를 갖고 면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준비로 대체 몇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며 “국민을 오로지 표 하나로만 인식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공해투는 오늘 오후2시 다시 신한국당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23일 오후3시 장충단공원에서 ‘공공부문노동자 총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투쟁할 방침이다.

행사와 동정

- 민가협 제11차 정기총회
 - 일시: 3월22일(금) 오후2시
 - 장소: 대학로 흥사단 강당 3층
 - 1부: 제11차 정기총회 / 2부: 기념식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자리(노래 한마당, 슬라이드 상영)
 -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제6차 한미협상에 즈음한 한미 행정협정 전면개정 촉구 집회
 - 일시: 3월22일(금) 낮12시30분
 -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동화은행 본점 앞
 - 주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노조탄압 분쇄 및 96임투 완전 승리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3월23일(토) 오후2시
 - 장소: 장충단공원
 - 주최: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879-0057)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들레 일일호프
 - 일시: 3월23일(토) 오후3시부터
 - 장소: 한양대학교 조교식당(학생회관 5층)
 - 주최: 사노맹 사건 관련자 모임 민들레(☎ 012-823-5651)
- 제2차 노동상담소, 공인노무사 간담회
 - 일시: 3월28일(목) 오후2시
 -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 안건: 노동법률상담정보 교류의 내용 및 방안에 대해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65-2010)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공개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학교참여
 - 일시: 29일(금) 오전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 ◇ 5.31 교육대개혁안과 21세기를 대비하는 자녀교육
 - 일시: 4월4일(목)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 장소: 종로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 주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675-9068)
- 외국인노동자의 집 창립 1주년 기념행사
 - 일시: 3월31일(일) 오후 4시
 - 장소: 부천 석왕사 큰식당
 - 주최: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032-651-8351)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25일까지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정보화사회와 인권’ 강좌 두번째

인·터·넷·특·강

□ 인터넷의 현황·전망·활용가능성

· 일시: 3월23일(토) 낮12시

· 강사: 정길락(『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715-9185)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조합원
고 김장국 김영욱 김두완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공동의장 박용길등, 민가협)는 김영삼정권 출범이후 3년동안 구속된 양심수가 1천5백8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구속자의 사건유형을 보면 여전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가장 많은데, 이들은 7백7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8.8%를 차지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93년 1백95명의 구속자가 발생했으며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53.8%인 1백5명이었다. 94년에는 구속자 7백74명중 3백88명(50%)이 국보법으로 구속되었으며, 작년에는 6백20명의 양심수가 발생했고 이중 45.6%인 2백83명이 국보법으로 수감되었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개혁을 표방했던 문민정부 역시 미묘한 정치적 격변기에 처할 때마다 양심수를 대거 양산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22일 열린 11차 정기총회에서 민가협은 96년 사업계획으로 39년째 구금 중인 우용각(68·대전교도소 수감중)씨를 비롯해 20

년 이상 구금중인 23명의 초장기수 석방을 위해 사상 전향제 철폐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5·6공시철 인권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제심, 유연제소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 관련 4년 구형

22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 6단독(담당판사 김동운)은 노래집 <희망의 노래> 제작·배포와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원용호(32, 도서출판 민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자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변호사는 "3-4년전에 제작된 노래집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4월12일(금) 오전10시.

한미행협 개정 촉구 외무부앞 시위

22일 낮 12시30분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65번째 금요시위를 외무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운동본부측은 "9개월이 넘도록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행협정 체결의 올바른 개정추구를 위해 주무부서인 외무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로 개정 목표시한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조재학운동본부 간사는 "이번 행상은 한미행협정 조항 전체가 아니라 형사관할

권등 극히 일부조항에 머물고 있다"며 "일부조항의 개정조차 어려운데도 정부의 태도가 확고하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핵발전소 건설백지화 촉구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추방협의회)등은 21일 낮12시부터 22일 정오까지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계획 백지화와 지난 12일 집회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현수(추방협의회 국장)씨의 2명의 사전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발전소 정문앞에서 침묵 단식기도회를 열었다. 김현수씨는 "한 지역에 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5,6호기 건설될 지역은 연약지반등의 이유로 핵발전소 건설부지는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자투고 및 기자정보
전화 : 715-9185

'정보화사회와 인권' 강좌 두번째

인·터·넷·특·강

□ 인터넷의 현황·전망·활용가능성

· 일시: 3월23일(토) 낮12시

· 강사: 정길락(「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715-9185)

95년 양심수 현황(민가협)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구속자	13	29	38	36	109	98	54	69	29	55	81	9	620
국보법	10	22	27	13	40	25	18	34	7	21	60	6	283

"중대재해예방 작업중지권 행사로!" 삼호조선소 5명 사망, 3명 중상

한달새 한 작업장에서 세 차례나 산업재해가 발생,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서는 지난 2월12일 서영상(36)씨가 불빛도 없는 작업장에서 추락사한데 이어, 3월8일 문형부(27)씨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고, 19일에는 2백40톤짜리 블록이 전도돼 김두완(25)씨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측은 계속되는 산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강행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총사퇴와 강경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경우(30, 노조 조직부장)씨는 "산재예방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리한 작업의 강요를 막을 때에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조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95년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및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작업중지는 상급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법규정으로 남아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으나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사전 작업중지권 행사는 찾기 어렵고, 노조측은 "노조가 노조원들의 작업중지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작업중지권>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155호 제19조에는 "노동자가 심각한 위험상황시 직

속상관에게 보고하고, 사용자는 위험이 남아있는 한 노동자에게 작업복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는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 및 위험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작업복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공판

22일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전창일(75, 범민련부위원장)씨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장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지, 또한 남한내 운동단체의 활동 현황을 전달했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박씨의 정식직책은 범민련 공동사무국 차장이며, 조총련계 사람이라는 것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공소장에서 박용씨의 지령을 받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박씨는 범민련 일본본부 사무차장이던 어떻게 본부 부의장에게 지시와 지령을 내릴 수 있느냐"며 격분했다.

범민련 수익사업은 담당해 여러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김병권(76, 중앙위원)씨에게는 일본에서 박용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이것은 모두 안기부 조사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장측은 지난 해 있었던 함세환씨 등 진쟁포로 3인의 복송 기자회견때 배포된 호소문을 박용씨에게 팩스로 보냈다는 짐을 들어

국가기밀누설죄를 추가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태년씨 재판 연기

22일 오후 간첩 김동식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의 재판이 변호인측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무기한 연기됐다.

◆ 인권간행물 ◆

- 「노동과 건강」 39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 주요내용:96년 산재추방운동의 전망을 들어본다!!/LG전자 부품 역학조사 최종보고서/대우조선 유기용제 취급작업자에 대한 건강조사 보고서/산재발생률 1% 미만에 숨은 의미/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92쪽.
- 주간「전국연합통신」 93호-전국연합(747-4364)
· 주요내용:북한수해동포지원운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MBC 총선 전 파업/공공서비스부문해고노동자 무기한 농성돌입/광주하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1차공판, 그 역사의 자리를 지킨 안병욱 교수 등. 54쪽.
- 「교회와 인권」 6호-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 주요내용:최소한의 인간선언/그늘에 묻힌 양심수등. 8면.
- 「더불어 사는 세상」 3호-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787-4969)
· 주요내용:호주의 내셔널리즘/호주 노동법 어워드(Award)에 관해서/군사정권보다 후퇴한 문민정부의 5가지 잘못/호주의 사회보장제도 등. 42쪽.
- 격월간 「참여사회」 3·4월호-참여연대(797-7116)
· 주요내용:시민·노동·사회운동가 100인이 본 4·11총선/독일 시민운동 사례분석:오덴발트지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다시보는 한국언론들의 '심심재판' 오보 등. 112쪽.
- 「평화의 일꾼」 3월호-천진연 장기수가족후원회(719-2172)
· 주요내용:96년 정세와 통일운동의 과제등. 12면.
- 「역사문제연구소 회보」 제30호-역사문제연구소(277-4622)
· 주요내용:좌담:연구소 10년, 회고와 전망/80'90년대의 학술운동과 역사문제연구소/대중사업 10년의 성과와 과제 등. 165쪽.
- 「고난함께」 3·4월호-고난모임(393-4662)
· 주요내용:좌담:이덕인의 죽음과 장애인 인권/국방경비법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의 10대의혹 등. 36쪽.
- 자료집:「세계주거회의의 인간적 주거환경」-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3)
· 주요내용:한국의 도시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생태도시 건설에 대한 제안/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의 현황과 대책/주택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조건과 해결의 접근방식에 대하여/세계주거회의와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방향 등. 120쪽.
- 「제11차 총회보고서」-민가협(763-2606)
· 주요내용:95년 민가협 사업보고 및 평가/95년 양심수 현황/95년 교도소 인권실태 보고서/고에순씨 사건에 관한 보고서/95년 구속양심수 명단 등. 130쪽.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검사는 "치욕스럽다", "간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 "자존심을 걸고...기필코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겠다", "어떠한 선처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등 노골적으로 박씨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며, 박씨에 대한 간첩만들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 조성욱 검사의 구형을 '치졸하고 감

정적인 사법적 만행'으로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검사를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초 구속사유와 전혀 다른 별건구속이라는 점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태년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혐의 사실이 전혀 무고한 점 △과거 처벌받은 사건으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가 석방을 요구했다.
김철과 안기부는 95년 11월 15일 간첩혐의로 박씨를 구속한 후 50일간의 수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관련해 국보법 7조 1항(고무, 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나는 안기부, 검찰 등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공작, 권력 남용, 인권 경시 풍조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안기부는 온갖 거짓으로 나를 세뇌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나를 짜 맞추려 했으며 허위 사실을 막무가내로 강요하여 조작하려 하였습니다... 안기부에서의 22일간 항상 10여명의 수사관에 둘러싸인 채 안기부 조사실에 갇혀 조사를 받았으며, 처음 이들을 제외한 20일간 매일같이 하루종일 벌을 서고 구타를 당하고 머리카락을 뽑히고 날이 흰히 밝아서야 30분정도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으며 새워 또 다시 피로운 과정을 반복하는 등 비몽사몽의 상태에서...계 정신을 상실하고 기만과 회유에 현혹되고 고통에 못 이겨 허위 사실을 쓰기도 했습니다...고문의 증거를 이야기 합시다만 흔적을 남기고 고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고 초보적인 수사관이나 하는 어질픈 행동일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일마든지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는 밀실수사 그 자체를 고문의 정황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밀실 수사, 고문 수사, 조작 수사의 근절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위해 △안기부와 같은 정보 첩보 기구의 수사권 폐지 △분실, 조사실 명의로 된 별도의 수사용 밀실 첩보 △공개된 장소에 유치된 상태에서 피의자 수사 스티커없이 긴 수사 기간 대폭 축소 △수사에 참여한 모든 수사관의 연대 서명 날인 등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위반 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했으나 이 혐의조차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

경원대, 학생 징계에정 학생들, 2차 고발운동 전개

지난 23일로 고 장현구군 사망 1백일을 맞이한 경원대는 학교측이 또다시 징계라는 악수를 선택함에 따라 좀처럼 해결기미를 찾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25일 상법위를 열고 10명의 학생들을 징계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27일 대규모 학내집회가 계획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학생회는 이미 2백48명의 서명을 받아 김원섭 총장과 이석규 학생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데 이어 한총련 대의원과 경원대생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2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발운동을 계획이다.

○ 주요 공판 안내 ○

- 3월26일(화) 권영길, 교통방해등,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3부 320호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7부 421호
- 3월27일(수) 강희남의 8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 합의2부 311호
- 3월28일(목) 류방상(선고), 업무방해등, 오전10시, 서울지법 합의4부 416호
- 3월29일(금) 양규현, 교통방해등, 오전10시, 서울지법 단독4부 421호 정민주의 1인(선고), 국보법, 오전9시50분, 서울지법 합의2부 425호 전창익의 2인,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 합의2부 311호

필리핀서 위안부 문제 집중 조명 제4회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28일 개막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는 3월28일부터 29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회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진행중인 국민기금이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는지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피해자 배상을 위해 어떤 국제활동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UN인권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고 특히 4월 12일과 9,10일에 위안부문제에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그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피해국들이 모여 각국에서 행했던 그간의 사업을 소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이다. 또한 더이상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국가적 성폭력이 없도록 노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등을 요구하는 연대회의이다. 그 첫모임은 92년 8월 서울에서 가졌으며 정대협의 수요시위가 소개되어 필리핀으로 확산되는 등 그간 사업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하루소식 95년 2월17일자 참조>

수지면 현장투쟁 재개 철거민들, 병원에서 철수

용인군 수지면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현장사수투쟁이 재개됐다.
신연숙씨의 사망이후 45일간 영안실에서 농성을 해오던 용인 수지재개발지구 주민들은 지난 20일 병원에서 철수한 뒤, 24일 수지지역으로 복귀했다.
현재 대책위는 청와대에 이인제 경기지사의 사퇴와 사전재발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며, 부상자 보상문제와 지난 13일 토지공사 점거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이병희(58)씨의 석방문제 등에 대한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악법 철폐등 결의 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

한국통신, 서울 지하철노조 등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동대표 유덕상등, 공노대)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장충단공원에서 관련 노동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탄압분쇄 및 96위단투 완결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기도 반대 △노조탄압에 맞선 강력투쟁 △노동악법 철폐 총투쟁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애곡된 임금구조 시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 쟁취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구속노동자 석방 투쟁 등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시가 행진을 벌여 전투경찰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23일, 꽃다지 대표 보석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원용호(32), 이은진(31)씨가 23일 저녁, 재판부(서울지법 형사6단독 담당판사 김동윤)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주/간/인/권/호/름

(96년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

- <18일(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간 회의 개막/경원대 학부모 12명, 사태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 결성/노동부, 내년부터 공고 실습생들도 산업재해보험 혜택 보장
 - <19일(화)> 사회·노동단체소속 총선 출마자 14명,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총선 후보자 대상 부패방지법제정 서약서 발송/LO '95 노동통계연감'에서 한국 노동시간 48.7시간으로 세계 8위, 국제평균보다 주 7시간 많은 것으로 밝혀져
 - <20일(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월2일까지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란 주제로 사진전 열어/원노노동자 인권개선 회의 참석해 집회를 열어 홍콩경찰에 기소된 박우영씨 귀국/일본 오사카 시당국, 공무원채용 외국인 배제 국제조항 폐지 방침/미하원, 불법이민 자녀에 대한 '무상 공교육 제공 거부 가능' 내용 포함된 이민개혁법 수정안 통과
 - <21일(목)>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신한국당사에서 황의집희 개최/영광해발전소추방협의회 소속 신부등 1백여명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열어/공안2부 정홍화검사, 지난해 방북한 정민주등 여대생 2명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구형
 - <22일(금)> 경원대 고장현구씨 분신 1백일째 맞아 2백여명 모여 집회 가지/민기협, 김진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양심했다고 밝혀/검찰, 공개집회때 배포된 호소문에 국가기밀 누설죄 적용, 범민련 전창일씨 혐의 추가/10대 대입 재수생, 경찰 강압수사로 살인범 누명 25일동안 억울한 옥살이/서울대등 3개대학 동성애자 모임 회원들, 한국대학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발족/조성욱 공안검사, 박충렬씨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 구형
 - <23일(토)> 노래패 꽃다지대표 이은진씨와 원용호씨 보석석방/방글라데시 2백만여명, 총선 무효화 요구 반정부 인간사슬시위
 - <24일(일)> 도봉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강영철(21)이경, 고참들의 구타로 자살/보스니아 정부, 세르비아계 포로 1백9명 석방
- <해설>-----
18일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돼 6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유엔인권위는 1년간 전세계에서 진행된 인권문제를 총결산하고 1년간의 활동계획을 확정하는 인권관련 유엔총회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시킨 국가와 집단에 대해 결의문과 권고등으로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각국 정부대표들은 이 유엔무대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쳐 인권문제도 이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많은 부분 좌우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유엔 인권위가 그나마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민간단체들의 열정적인 문제제기와 헌신적인 활동 덕분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단체 대표단이 참석한다. 52차 유엔인권위가 국내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하지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 촉구

전국연합, 미대사관 앞서 매주 화요일 집회

지난해 5.18특별법 제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대의 재야단체가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매주 화요일마다 갖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이 5·18 학살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16년전 광주의 진실이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4.11 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5·18 16주기에 맞춰, 이 문제는 쉽게 비켜가기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야 최대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죄 △5·18당시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과 주한미군사령관 워컴의 해명과 소환 △15대 국회에서의 5·18관련 청문회 개최 △군작전지휘권의 반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즉각적인 폐기와 개정 △5·18 학살 공모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집회를 마친 후엔 미대사관 항의방문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18특별법 제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대의 재야단체가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매주 화요일마다 갖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이 5·18 학살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16년전 광주의 진실이 구체적인 법적 정치적 쟁점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4.11 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5·18 16주기에 맞춰, 이 문제는 쉽게 비켜가기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박병언, 서총련)은 "학생을 비롯한 재야 운동세력이 80년부터 줄곧 주장해 오던 바가 증명됐다"며, 5·18 미국개입에 대한 규탄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총선시기에 맞춰 대선자금 공개 등 김영삼 정부의 부도덕성 알리기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1차로 지난 23일부터 일주일 예정으로 명동성당에서 소규모 학생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미국규탄시위를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92년 남총련 의장 붙잡혀

지난 18일 92년 광주·전남 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장 송진환(28, 전남대

총학생회장)씨가 수배 5년 만에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 후문에서 검거됐다. 송씨는 지난 92년 남총련 출범식때 '조국은 하나다'라는 깃발을 걸면서 단일기와 태극기, 인공기를 함께 올렸다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 왔다. 현재 송씨는 광주 남부경찰서 보안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4월7일경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씨 5차공판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동당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차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응구(58, 94년 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경총 등이 항의하고 나선 것은 3차개입이 아니냐"는 조용환 변호사의 신문에 "법 검토를 안해봐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근로감독관으로서 법적용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4월23일 오후 2시 열리며 검찰측 증인인 양봉성, 이도영씨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장기수 송환 회담 재추진 불교인권위, 오는 4월19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동, 인권위)는 4월19일 오전10시 판문점에서 조선 불교도연맹 간부와 판문점에서 '김영태·함세환·김인서 씨 복송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쟁포로의 복송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을 정부측에 여러번 제안했으나 정부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의 계속된 불허에도 불구하고 장기수 복송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말까지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박무영씨등 기소 취소 강력 요청 14개 단체 홍콩 정부에 항의서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등 14개 노동·인권운동단체는 26일 홍콩경찰에 의해 불법연행돼 기소된 박무영(38, 구리노동상당소 소장)씨와 5명의 홍콩노동운동가들에 대해 기소취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홍콩 정부에 발송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무시한 채 홍콩 정부가 자본가들과 결탁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6명의 시위자에 대한 기소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 △평화시위에 대해 폭력을 사용한 경비원들을 기소할 것 △전시회장중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원구협 회동 원구 제조업자들이 '안전한 원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채택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홍콩의 노조, 노동단체, 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원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은 19일 공동성명을 발표, 홍콩 정부와 자본가가 결탁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오른쪽에 관련 자료 게재).

이번 사건은 지난 93년 태국과 중국에 홍콩자본의 투자로 설립된 완구공장에 불이나 2백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운동단체 대표들이 '완구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회의개최를 발생했다. 이 회의 참석자들 50여명은 완구 자본가들이 모이는 완구 자본가들과 결탁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6명의 시위자에 대한 기소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 △평화시위에 대해 폭력을 사용한 경비원들을 기소할 것 △전시회장중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원구협 회동 원구 제조업자들이 '안전한 원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채택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소된 홍콩 활동가들>
Wong Ying-yu, Mung Siu-tat : 홍콩 노동조합 연합소속/Leung King-chen :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홍콩 지부·폭력죄 추가 /Leung kwok-hung : 4월6일 운동단체 소속/Leung Lik : 홍콩 민중 극단소속

<인권하루소식> 합본 V호 판매

<인권하루소식> 401호부터 500호까지(95년 5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를 묶은 합본 5호를 판매중입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95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 95년 인권상황 해설/장기수 캠페인 특집 5.18특별법 관련 기사 등

·한정판매 값: 5천원 (단, 독자가 아닌 분께는 1만원에 판매)

<자료>

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오늘 완구 산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한 완구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여섯 명이 기소되었다. 이는 정부가 사회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정부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억압하는 자본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 초기 홍콩 자본가들은 그들의 투자를 제3세계 국가로 이전했다. 이것은 그들의 이윤 증가를 노린 것이었다. 현지 정부의 비호 아래 그들은 어떠한 규제없이 산업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하며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많은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초래하였다. 태국의 캐티 화재와 중국의 시코 산업재해가 그 전례이다.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콩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그리고 그의 관련 사회단체들은 94년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헌장'을 작성하여 이 헌장을 홍콩 완구 협회와 다른 제조업자들이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이 캠페인은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우리 연합은 기업가뿐 아니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완구 생산에 있어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홍콩 정부는 이 완구 산업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완구 제조업체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

96년 1월10일, 연합은 대만, 한국, 캐나다, 프랑스, 태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노조와 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홍콩 컨벤션 센터 밖에서 시위를 했다. 시위는 제22차 완구 박람회의 개최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박람회는 국제 무역, 이윤 추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되는 것이었다.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내지 못했다. 시위는 홍콩 완구 협회와 홍콩 무역발전 협회의 묵인하에 컨벤션 센터 경비원들에 의해 폭력으로 저지되었다. 이 때, 경찰은 경비원들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터무니없게 5명의 홍콩 참가자들과 한국인 참가자를 연행하였다. 3월15일 검찰은 그들을 공공장소 소란죄로 기소했으며, 한 명은 폭력죄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부정한 결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다음을 강조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이 캠페인을 탄압하는 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완구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 연대 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홍콩 완구협회와 홍콩 무역발전협회 그리고 완구 제조업자들이 '안전한 완구 생산에 관한 헌장'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시위자들에게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시위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다.

1996년 3월19일
'안전한 완구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5대 총선에 제시된 각당의 공약중 사회복지공약이 '여야 구분없이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사회복지공약을 평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시행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허황한 장미빛 공약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남발은 '각 당 공약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정당 공약의 공통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점 △공약이 재반복되는 점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실현계획이 없는 점을 들었다. 각 당 공약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한국당의

공약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한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거나 알려진 내용들을 재탕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는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진열해 놓았을 뿐 세부적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연합은 공약사항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선언적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심공약사업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연금제도의 정비,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등은 학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점이라는데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실현가능성의 측면에는 낙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 주요 영역을 사회복지예산·생활보호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2면에 계속==>)

범민련 2차공판 열려

27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311호에서 강희남(77, 목사, 범민련의장)씨등 범

민련 관련 8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이날 검찰측의 공소사실중 "범민련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에 동의하고 정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강씨등 8명 전원은 재판의 정당성과 검찰의 냉전적색을 비판하는 의견을 말해 긴 시간 공판이 벌어졌다. 한편, 병보석으로 석방된 주명순(74, 범민련 중앙위원)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제적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도전" 포항제철, AI 한국지부 (포철그룹)탈퇴 종용

국제앰네스티(AI) 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씨는 3월 26일자로 이수성 국무총리와 안병영 교육부 장관 앞으로 AI의 국제적 인권보호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는 3월초 일어난 AI 한국지부 산하 포항에비그룹(대표 고희욱)의 활동을 탄압한 포항제철의 행위에 대한 유감과 항의표시이다. 포항에비그룹은 95년 9월 포항제철이 운영하는 포항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교사 8명으로 결성되어 AI 인권보호활동을 포항지역에서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자 대동일보의 포항에비그룹활동에 대한 기사를 문제삼아, 제철학원(이사장 김민재)과 두 초등학교의 교장들이 교사들에게 AI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넣어 탈퇴했다.

AI는 "국영기업체인 포철제철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표현·결사의 자유와 AI의 인권보호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AI의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국제적인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AI 국제사무국을 비롯한 세계 1백60여개국 1백40만 회원과 모든 지부에 통보된다.

또한 AI한국지부 오완호사무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사회단체의 도움을 요청했다.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편집자 주]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장혜선씨가 보내오는 52차 유엔인권위 소식등 제네바 현지의 소식을 매주 목요일에 실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8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52차 유엔인권위에서는 초반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등이 치열한 실전을 주고받는 등 각국의 파워게임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19일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와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대표 및 특별보고관, 비정부단체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팔레스타인 대표가 "이스라엘의 집단처벌정책은 국제법으로 보면 대량학살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고문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관한 제4차 제네바회의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채택한 해결책들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곧장 반박에 나선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의 안보기구는 인권 침해하지 않는다. 단지 테러를 예방하고자 할 뿐이며 집단적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은 자치 지구에서의 인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답변에 반해 앰네스티는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광범위한 예비구속을 자행하며 고문과 비사법적인 처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Hannu Halinen(특별보고관, 핀란드)씨도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치열한 실전을 주고받는 등 각국의 파워게임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19일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와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대표 및 특별보고관, 비정부단체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팔레스타인 대표가 "이스라엘의 집단처벌정책은 국제법으로 보면 대량학살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고문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관한 제4차 제네바회의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채택한 해결책들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곧장 반박에 나선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의 안보기구는 인권 침해하지 않는다. 단지 테러를 예방하고자 할 뿐이며 집단적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은 자치 지구에서의 인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은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인권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해서 구속을 자행하며 고문과 비사법적인 처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Hannu Halinen(특별보고관, 핀란드)씨도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치열한 실전을 주고받는 등 각국의 파워게임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19일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와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대표 및 특별보고관, 비정부단체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방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먼저 팔레스타인 대표가 "이스라엘의 집단처벌정책은 국제법으로 보면 대량학살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고문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관한 제4차 제네바회의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채택한 해결책들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곧장 반박에 나선 이스라엘 대표는 "이스라엘의 안보기구는 인권 침해하지 않는다. 단지 테러를 예방하고자 할 뿐이며 집단적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은 자치 지구에서의 인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항상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지도자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해 왔는데 이것은 내정간섭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양심수문제를 거론하여 예봉을 피하고자 했다. 더불어 쿠바는 "미국은 30여년 동안 쿠바를 봉쇄하면서 쿠바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쿠바인들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한 나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역시 "유엔과 미국의 이라크 봉쇄는 단지 정치적 이유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라크 문제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좋은 예로써 미국은 인권과 생명에 대한 최고의 침해자이다"라며 미국을 공격했다.

한편, 21일 의제 4, 7항(점령지의 인권문제, 자결권)에 대한 연설에 나선 한국 대표 박창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씨는 중동지역의 인권문제 및 평화와 관련해, "경제개발은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동지역 평화와 번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밝히면서 팔레스타인 정부에 1천2백만불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제네바=장혜선] 기사제보 전화 715-9185 전송 715-9186

(=> 1면에서 계속)

△사회복지예산: 정부의 복지예산은 줄어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의 GNP 5%외에 나머지 3당은 방안이 없다.

△생활보호: 자민련을 제외한 3당의 공동사항은 생계보조비·최저생계비의 보장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되었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계층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담이나 급여수준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파탄대책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등 들고 있을 뿐 다른 달은 방안이 없다.

△노인복지: 각당의 공동사항은 노령수당의 인상,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치매전문요양원 증설등이다. 그러나 4당 모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순보호와 급여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복지: 각당 공허 장애인 편의시설치법 제정, 장애인 수당인상,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준수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 공약 역시 단순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의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통합의료보험 실시와 급여기간을 3백65일로 확대하는 것과 CT, MRI등의 보험적용이다. 통합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실시의지를, 신한국당은 현행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는 시설수용자의 보호수준 미흡,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시설퇴소후 보호정책 미흡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4당 모두 시설 문제에 대해 정책이 없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말까지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주거권>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이주지를 마련치 않고 행하는 철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95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안해 아쉬움"

강간당할 위기에 처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범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권성)는 홍아무개(43, 식당종업원)씨의 항소심에서, "홍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었던 점 △피고의 공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의 160cm도 안되는 왜소한 체구인데 반해 남자는 180cm에 88kg에 달하는 거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홍씨의 행위를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했다.

홍씨는 94년 10월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달려드는 사내를 칼로 어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홍씨의 진술과 정황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불구속수사를 했고, 1심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홍씨는 95년 9월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홍씨는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빈다"며 복받치는 울음을 애써 참아내는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최영애 성폭력상담소장은 "재판부의 진일보한 시각을 일단 환영하지만, 홍씨의 행위를 과잉방어로 해석한 것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때 여성은 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다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주변의 시선인데, 홍씨의 경우엔 주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같이 일하던 식당아주머니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식하고 홍씨를 상담소에 연결시켜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었다"며 주변의 올바른 인식과 조력을 부탁했다.

강사장 퇴진, 방송독립 촉구 민주노총등 연대집회

MBC 파업 15일째를 맞는 28일 '방송독립 쟁취 및 강성구 사장 퇴진 촉구 결의대회'가 민주노총의 주최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MBC노조를 비롯해 언론·사무노련·건설노련 회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집회에서는 △강성구 사장 즉각 퇴진 △불공정 편파 보도 즉각 중단 △방송사 독립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배석범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강성구 사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그가 이제껏 저질러온 방송파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보도 없이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엄청난 탄압이 예상되지만 92년 MBC투쟁을 거울삼아 마지막 한사람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MBC조합원이 홍씨PD는 "보람된 일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교협·경실련·민변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MBC파업진상조사위원회(회장 이세중, 변호사)는 27일 파업진상 중간

조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강성구 사장이 총선 종료 후 사임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국보법 피해자 농성 30일까지 명동성당서

범민련, 전노운협, 사노맹 구속자대책위, 문화예술인대책위, 서울대 대책위 등 주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공동대책위(766-4803)를 구성하고, 총선기간 동안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동대위는 이상의 내용을 발표하고, 30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다.

공동대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국보법으로 구속된 숫자는 1백8명에 이르며 그 중 26명이 석방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공동대위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현행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민련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말까지 아래 지로로 납부를

지로용지를 분실하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편집자주> 미국부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부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이 모든 측면에서 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반문을 뒤로하고 일단 미국측이 파악하는 '한국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뒤늦게나마 <인권하루소식>은 주요부분을 발췌해 신는다. 다음 주에 남한②편과 북한 편을 소개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의 살인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의 살인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과거 남용 사례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검사는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80년 광주민주화에 대한 군의 진압에서의 주요 역할에 대해 수사했다.

b. 실종
정치적인 동기의 실종은 보고된 바 없었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참담한 처우나 처벌
남한정부는 정부기관에 피의자 인권보장과 구금 중의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정부가 잠안재우기 고문등을 금했음에도 경찰은 잠안재우기 고문과 같은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변호사가 시의적절하게 피의자를 집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의 상황은 스파르타식이다. 교도소의 음식은 적당하지만 교도소측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피할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는다.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필요하게 그들을 속박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최근에 향상된 것으로는 죄수들의 독서자료에 관한 것이다. TV와 라디오 방송의 청취권이 허용되었다.
d. 자의적 구속, 구금 또는 추방
한국법은 구금에 대해서 모호하며, 검찰의 법해석상의 재량권이 넓다. 국보법에서는 포괄적인 용어로 간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 부서가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폐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 기준이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인해 체포되고 있다.
남한정부가 국보법을 유지하는 근거는 북한이 남한정부

와 사회를 전복시키는 데 적극적이라는 주장과 전체주의가 제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 큰 위협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변호인이 대면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 심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93년 남한정부는 심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95년 법무부는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체포할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접근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나 인권변호사들은 보석이 대체로 심각한 범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로 여겨지는 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5년 대체로 요직에 임명된 법관들의 독립과 청렴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권리에는 신속한 재판과 상고의 권리, 무죄추정,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소급 및 중복 처벌 금지 등이 있다.

사법부 독립의 두드러진 예로서, 서울고등법원은 4월 하급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국연합 의장인 이창복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보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월간 잡지 <사람과 일터> 편집인 박치환씨도 법정에서 판결이 변부되었다.

법원은 과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편박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70-80년대에 다수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장기 수감형을 선고받았다고 믿는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구속되고 60일까지 독방에 감금되고, 극한 고문과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제기준에 준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95년 장기수 김선명씨와 안화섭씨 등을 포함한 몇 명의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정치범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단순히 자유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스파이 활동을 실행 또는 계획하여 구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대통령에게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은 한국의 정치범의 수가 4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정의에 의한 정치범들과 전 구금자들의 수는 2백여명 이하 인 것 같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서신 양래
대체적으로 정부는 가정과 가족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과거의 보안 당국은 정치적 반대자를 전화 도청하는 등 다양한 감시를 행했다. 도청방지법과 안기부법은 시민에 대한 정부 감시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3면에 계속=>)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2면에서 계속)

인권 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불법도청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사용한 불법 도청이 도청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독립 단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대부분의 정치적 논평이 통제되지 않았으나, 국보법 하에서 정부는 공산주의나 친북한 사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한다. 광범위한 국보법의 해석은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반대관점의 표현을 규제한다.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정부를 지지하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 범위에서 상당한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정부비판이 퍼져 있으나 남한정부는 매체보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억압이나 억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보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이 북한 또는 친 공산주의의 자료를 제작, 판매,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 판례는 한국인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의도가 아닌 순수하게 학문적인 필요나 이윤, 또는 호기심에서 이러한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검찰이 그러한 자료의 소지, 또는 출판의 동기를 규정하는데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해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 위반 등으로 계속 구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에 관한 언론 보도의 증가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남한 TV 방송망은 편집된 북한 TV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했다.

b.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에 의해 승인된 평화적인 집회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은 정치적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시위에 있어서 경찰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회의 목적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집회를 제외하고 집회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남한정부는 95년 대체적으로 집회를 간섭하지 않았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였고 남한정부도 실제 이 조항을 준수한다.

d. 국내 이동의 자유와 외국 여행, 이주와 귀환

경찰은 일부 출소 정치범들의 이동을 제한한다. 외국여행은 일반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북한으로의 방문은 정부승인을 받아야만 허용된다. 정부승인의 조건중 하나는 여행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3부 정치적 권리의 존중: 시민의 정부를 교체할 권리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문화적 전통과 차별로 인해 여성은 정부조직에 거의 없다.

4부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및 민간 단체의 수사에 대

한 정부의 태도

몇몇 비정부 민간단체들은 인권증진에 활동적이며, 그들은 정부의 규제없이 활동한다. 대표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그리고 정치범 가족의 연합체인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며, 국내외에 자신들의 관점을 알린다. 정부와 여당관료들은 대체로 국제인권단체들과 만나고 싶어한다.

(다음주에 계속)

유권자운동연합, 천리안에 선거 자료 서비스

한국유권자운동연합(상근대표 김형문, 유권자연합)은 26일 부디 천리안 모임방(go voters)을 개설·운영한다.

정보화 사회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메스미디어·정보통신 사업이라는 취지에 개설했던 이 모임방에는 유권자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될 '생활정치·시민대학'과 '선거공약모음', '의정리포트', '의정활동안내'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또한 '선거관련자료실'에서는 역대선거 자료들과 4당 강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3백65일 의정감시센터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유권자연합의 최희곤(35, 정보자료실장)씨는 "이제 유권자도 더 이상 남발하는 공약을 듣기만 할 수는 없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쌍방향 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들겠다"며 "실제적인 유권자 의식개혁에 기여하고, 생활정치를 한발 더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와 동정

- 노래패 꽃다지 일곱 번째 콘서트
 - 일시: 4월2일~14일 평일 7시30분, 토, 일, 공휴일 오후4시, 오후6시30분
 - 장소: 마당 세실극장
 - 문의: 332-5310, 338-3206, 737-5773

- 북한 수해동포돕기 기금마련공연-96, 자 우리 손을 잡자
 - 일시: 3월30일(토), 31일(일) 오후5시
 - 장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 출연: 노래패 꽃다지/노래마을/정태춘·박은옥/류금신/안지현/홍물매 매패 등
 - 주최: (사) 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노동조합총연맹/연세대 총학생회(☎ 743-5872)

- 미군 기지촌 연극 '캠프 케이시 문밖에서' 공연중
 - 일시: 3월12일~4월21일 평일 오후4시30분, 7시30분/토, 일, 공휴일 오후3시, 오후6시
 - 장소: 대학로 은행나무 극장(방송통신대 뒷편)
 - 주최: 극단풍차/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744-1211)

-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김수경씨가 3월31일(토) 오후2시 청량리 결혼회관에서 백승호씨와 혼인한다.

시위도중 사망한 연세대 노수석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고애순씨 태아사산, 세계서 항의운동

재수감 절대 반대, 형법 개정 촉구

국제적 고문반대 단체인 SOS-Torture는 29일 각 나라의 인권단체들에게 고 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자투부장)씨 사건에 대해 김영삼대통령과 안우만법무 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 보내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SOS-Torture는 "고 애순씨가 감옥에 다시 들어갈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의 형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애순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지난 95년 12월4일에 반국가 단체인 범민련에 가입,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2개월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출산예정일을 앞둔 2월1일 구속행정지로 석방되었지만 끝내 아기를 사산했다.

<항의서한 보낼 곳>

김영삼대통령: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청와대 (팩스 770-0253, 720-2686)
안우만법무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법무부 (팩스 504-3337)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현씨, 검찰 신문 거부

양규현(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씨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준) 심리로 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것"을 요구했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등을 들었다.

양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80년 국보위에서 만든 법적효력이 없는 조항이고, 이를 이산예정일을 앞둔 2월1일 구속행정지로 석방되었지만 끝내 아기를 사산했다."

<긴급속보> 연세대생 노수석씨 시위중 사망

연세대 법학과 2학년 노수석씨가 29일 오후 5시30분경 서울 동대문 근처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숨졌다. 이날 학생 5천여명은 종로3가에서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를 위한 서총련 동맹휴업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경찰은 종로쪽과 동대문 동지에서 학생들을 포위, 무리한 진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시신은 국립의료원(을지로6가)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동과 관련, 이적단체구심 및 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 한상미(덕성여대 90, 졸) 이은지(·, 93), 김재호(26, 한양대 90) 이종학(·, 90) 송호철(25, 고려대 4년) 권호영(·, 92) 김은혜(서경대출) 김태형(·, 92) 이지윤(인덕전문대 90) 김대인(·, 93) 신석원(·, 91) 최성환(·) 이세인(·, 90) 이외 서울교대 여학생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 활동

이덕인씨 유가족등,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농성 돌입

이씨 사망 1백23일, 사인규명·생존권 보장 요구
이덕인씨 유족 및 아암도 주민, 국민회의 당사 농성 29일 낮 여의도의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는 조급은 한적한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탓인가? 단지 몇몇 출입자들이 엘리베이터를 들락날락하며 한적함을 깨뜨리고 있다.

이곳 4층 엘리베이터의 출입자들에게, 벽주위로 늘어선 사진첩들과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11명 농성자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참혹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고 이덕인씨의 사진과 28일부터 이곳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이덕인씨의 유족 및 아암도 주민들이다.

한때 일간신문의 사회면을 주요하게 장식했던 이덕인씨의 사망과 아암도의 문제는 1백23일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모두의 관심권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사인규명과 유족보상, 생체대책마련 등 어느 하나 해결을 보지 못한채...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인천시는 이미 "이덕인씨의 사망과 아암도 주민의 생계에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최종의사를 통보했으며, 이제 아암도 주민들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부자리 한장, 식기 하나없이 여의도를 찾아온 것이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이들의 뜻만큼은 결연했다. "인천시측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하나둘씩 포기할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생계의 터전을 잃고 넉달동안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며 투쟁해온 박미라(40)씨의 말이다. 이들은 신한국당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투쟁의 제2막을 올렸다.

<인권하루소식> 96년 3월분 총목차(593-613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593	3/2	1	경원대, 언론사에 '학생이 교수 감금'했다고 허위 보도/성폭력상담소,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판결에 대해 특별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대법원 비난/인천 남부경찰서, 고이덕인씨 유가족 2명 불구속 입건
		2,3	96년 2월 하루소식 총목차(585-592호)
594	3/5	1	경원대측 무조건 장례요구하며 학생징계 강행, 고장현구대책위는 "고발교수 사과부터" 주장/참여연대,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 개통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 예정/전국연합등 사회운동단체, 일본 군국주의 부활반대 77주년 3·1절 기념식/주간인권호름(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595	3/6	1	여연,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일본인 변호사 도즈카씨 선정/경원대 총장, 학생 6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2	고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백일,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도 산 넘어 산/솔벤트 중독 피해자들 중독 대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
596	3/7	1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에 '인권 공약' 포함촉구하는 공개 서한 보내/서울지법,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현재 판단에/진보정치연합, AI 인권공약 채택 요구 적극 홍보
		2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4인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고장현구군 문제해결 촉구, 인권협 성명발표/고이덕인 1백일 추모집회
597	3/8	1	전두환 전직대통령의 병원치료비 국고로 부담해/제12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경원대, 총학생회 죽이기 광분-계적 2명, 무기정학 5명 등 중징계 조치한
		2	<인터뷰>여성운동상 수상-도즈카 변호사/AI 한국지부, '북경여성대회 결의사항 이행' 촉구
598	3/9	1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김철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씨등 3명 첫공판 열려/박충렬씨 3차공판서 검찰, 연방계 주장은 북한의 사주라고 주장
		2	"모두에게 적정주거를"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최/청년정보문화센터 회원, 선거법 위반 빌미로 불법수사
599	3/12	1	전두환-노태우 2차 공판서 강민조씨 전씨 가족들에게 폭행 당해/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	중국으로부터 자유·독립 선포한 3월10일 제38주년 티베트의 날/주간인권호름(3월4일부터 3월10일까지)
600	3/13	1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경찰한밤중 경원대 난입해 전총학생회장 연행/강민조씨, 전계국씨등 고소
		2	AI의 공약 촉구서한에 대해 여야 정당들 대부분 "모른다"/영광주민들, 핵발전소 5·6호기 백지화 촉구 집회/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601	3/14	1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박시환판사 권영길위원장 보석 결정/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노태우씨 재산환수 촉구
		2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규탄성명/강희남씨등 9명의 범민련관련자들, 1차 재판서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며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602	3/15	1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2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광주로 미국 실체 드러났다며 한미행협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 미대사관에 전달/5.18 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학 10호 발간

<인권하루소식> 96년 3월분 총목차(593-613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03	3/16	1	허인회씨 3차공판서 검찰측 증인 3사람 "신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해/경원대생 2백48명, 총장-학생처장 고발/유가족등 전씨 세아를 폭력혐의로 고발/사노맹 관련해 임산부 또 연행
		2	<토론회>김영삼정권 3년 여성정책 평가/한국통신등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김정권 3년 동안 162명 해고, 명동성당 농성
604	3/19	1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한국인 박무영씨 홍콩 경찰서에 기소/AI 한국지부,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캠페인
		2	<현장 스케치-MBC 파업 6일째> 언론이 정권 시너 되어서는 안돼/성남미래 대표 김태년씨 보석 석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사진전 개최/주간인권호름(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
605	3/20	1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여,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경원대 학부모임 결성하며 대책위 중재위 제안
		2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민주노동,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키로/참여연대, 총선후보 대상에게 부패방지법제정 시약서 발송/과거활동 문제삼아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
606	3/21	1	한국통신등 공공노조, 무기한 농성 정보통신부-신한국당 항의방문/양규현씨 재판연기/<자료>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2	고 장현구씨 분신사망 1백일을 맞이하며-"5년동안 계속된 징계-고발-구속, 그래도 끝까지 싸운다"
607	3/22	1	"아시아 완구노동자 인권유린 마음 아파", 홍콩서 기소된 박무영씨 7월 재판 재개/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제안
		2	<현장스케치>장애우인권진전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공공부문 노동자 구속에 항의해 공노대 신한국당사 항의방문
608	3/23	1	민가협,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이라고 발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 요구하며 외무부앞 시위/영광핵발전소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2	"중대재해예방 작업중지권 행사로!" 삼호조선소 노동자 5명 사망, 3명 중상/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공판/김태년씨 재판 연기
609	3/26	1	박충렬씨 결심재판서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경원대생들 2차 고발운동 전개
		2	제4회 일본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필리핀서 28일 개막/23일 꽃다지 대표 이은진·원용호씨 보석으로 석방/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 노동악법 철폐등 결의/주간인권호름(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
610	3/27	1	전국연합,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 촉구하며 미대사관 앞서 매주 화요집회 개최키로/92년 남총련 의장 불잡혀/권영길씨 5차공판 증인신문서 근로감독관 "노동법 잘 모른다"/불교인권위, 4월19일 장기수 송환 회담 재추진
		2	인권운동사랑방등 14개 단체 홍콩 정부에 박무영씨등 기소 취소 요청하는 항의서한 발송/<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611	3/28	1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문에 대해 재원마련등 추진 계획없다고 공약 평가/포항제철, AI 한국지부 회원에게 탈퇴 종용해
		2	제네바 소식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612	3/29	1	서울고법, 성폭행법 살해에 무죄선고/민주노동등 강사장퇴진과 방송독립 촉구 연대집회/국보법 피해자 30일까지 명동성당서 농성
		2,3	<자료>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613	3/30	1	<자료>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②/유권자운동연합, 권리안 선거 자료 서비스
		2,3	고예순씨 태아사산, 세계적 항의운동-계수감 절대반대, 형법개정 촉구/양규현 민주노동부위원장, 검찰 신문 거부/경찰, 사학련 16명 연행/<긴급속보> 연세대생 노수석씨 시위중 사망